

연구보고서

ESG 경영을 통한 자율안전보건시스템 확산방안 - Safety in ESG

박선현·이현욱·오기연·신윤재·신지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요약문

- 연구기간 2022년 8월 ~ 2022년 9월
- 핵심단어 ESG 경영, 자율안전보건시스템, 산업안전보건 지표 평가 및 공시, 책임투자, 원-하청업체 산업생태계
- 연구과제명 ESG 경영을 통한 자율안전보건시스템 확산방안 - Safety in ESG

1. 연구배경

-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은 어느 때보다 높으나, 그간 정부 및 규제기관의 노력은 고 위험 사업장의 점검 및 감독, 영세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집중되어 왔음
- 이러한 감독 및 규제 중심 접근은 기업들이 산업안전을 추가적인 비용, 혹은 위험 관리 (risk management)의 일부로만 여기게 하여, 기업에서의 안전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힘들. 기업의 자발적 안전보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함.
- 최근 기업경영에서 환경보전, 이해관계자 중시,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이를 활용한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시스템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실행이 가능함. ESG 경영은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의 세 축을 중심으로 기업경영을 평가하고, 공시하며, 정부 및 민간에서 이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 특히 ESG의 S는 인권 및 노동 문제 외에도 작업장 보건 및 안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Safety in ESG”경영으로 확장한 정책 구상이 가능함.

-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자율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및 산업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를 기획하고 있으며, 규제 및 감독 중심의 산업안전관리시스템을 기업 자율 예방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의 중요한 요소임. 본 과제는 ESG 경영을 통한 기업의 자율안전보건시스템 확산방안을 연구하여 정부의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수립 및 성공적 실행을 돕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 서론에서는 먼저 ESG 경영의 역사적 배경과 국내외 현황을 살피고, 그 주요한 방법론으로 “평가-공시-투자”를 제시함. ESG 경영의 평가, 공시, 투자 지표와 산업안전보건 지표와의 연계를 검토하고, ESG 경영에 대한 정부와 규제기관의 역할이 기업, 평가/공시기관, 투자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며,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두 ESG 경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을 논의
- 본론에서는 ESG 평가기관의 평가지표와 ESG 관련 시장공시 (2장), 산업안전 관련 규제공시 (3장), ESG 관련 기관투자와 기업 스타트업 투자 (4장), 대/중소기업, 원/하청 기업을 아우르는 ESG 산업안전 보건 생태계 구축 (5장)의 네 분야에서 “Safety in ESG” 경영의 주요 실천 방안을 검토. 연구는 관련 국내 외 학술문헌과 전문보고서를 검토하고, ESG 평가기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시장공시기관 (한국거래소), 국내 대/중소기업 ESG 담당자 (서비스업, 반도체 제조업, 건설업, 스마트 안전 스타트업), ESG 관련 전문서비스 기관 (컴플라이언스 컨설팅트), 국내 ESG 관련 투자업계 (자산운용사, 대기업 ESG 스타트업 투자 담당자) 전문가를 인터뷰하여 연구주제의 학술 및 실무적 측면을 모두 검토하여 Safety in ESG 경영을 논의.

- 결론에서는 본론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ESG 경영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자율안전보건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책제언을 도출. 본 연구가 최종평가까지 도출한 주요 정책제언은 아래와 같음.

가. ESG 평가 및 공시에 산업안전보건지표 도입

1. 정부의 **사업체별 산업 재해율** 공시를 통해 ESG 평가, 공시, 감사기관과 공유.
2. 주 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산업 재해율 및 안전보건 관리 및 지원 현황**을 평가 및 공시에 포함
3. **산재서사의 언론**을 통한 공유와 홍보를 통한 사회의식 제고

나. 산업안전보건 제고를 위한 ESG 투자 활성화

1. 연기금의 산업안전보건 지표를 활용한 책임 투자 확대 (대기업)
2.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중소/ 영세기업)
3. 민간 ESG 책임투자 부분에 대한 지원 (산업안전관련 스타트업)

다. ESG 산업안전경영을 산업생태계로 확산

1. 원청-하청 산업안전 평가 및 관리시스템: **협업 플랫폼 표준화**
2. 협력기업 및 영세업체 안전보건 관련 **규제 및 감독 강화**
3. 대기업의 ESG 경영을 통한 협력업체 **안전보건 역량 강화** 지원

3. 연구 활용방안

- ESG 경영과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접목하여 기업의 자율 안전보건시스템의 수용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의 정책 목표 실현을 도움.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산업/안전공학), 근로자 보건, 복지 (사회복지학)의 관점에서 기업, 투자자 및 경영자 의사결정 (경영학) 관점으로 확대하여 관련 연구에 기여.
- Safety in ESG 경영에 관한 본 연구는 1) 기업의 내부 통제 및 교육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실천 방안 모색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업장별, 직무별, 직능별 빅데이터 분석 등 후속 연구로 확대 가능.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박선현
 - 전화: 02-880-5832
 - E-mail: sunpark@snu.ac.kr
-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연구기획부 차장 강민호
 - 전화: 052-7030-813
 - E-mail: brilliant@kosha.or.kr

목 차

I. 서 론	1
1. ESG 경영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	3
2. ESG 경영의 세 축(평가, 공시, 투자)과 기업경영변화	7
3. ESG 경영을 통한 자율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9
II. ESG 평가 및 공시와 산업안전보건지표	11
1. 글로벌 ESG 평가/공시기관의 산업안전보건지표 반영 현황	13
1) ESG 평가기관	13
2) ESG 공시기관	16
2. 국내 ESG 평가 및 공시기관의 산업안전보건지표 반영 현황	18
1) 국내 ESG 평가기관 사례 - 기업지배구조연구원	19
2) 국내 ESG 공시기관 사례 - 한국거래소	22
III.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공시	27
1. 기업 공시 효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	29
2. 산업안전보건 규제공시와 기업행동변화에 대한 실증연구	33

목 차

3. 국내 산업안전보건 규제기관 공시 도입 방안	39
1) 규제기관 산재 공시 사례 - OSHA	39
2) 산재서사 공시사례 - 중대재해 사고백서	42
IV. ESG 책임 투자와 산업안전보건 투자 활성화	45
1. ESG 책임투자의 이론적, 법률적 배경	47
2. ESG 책임투자의 현황 및 효과	49
3. ESG 책임투자를 통한 산업안전보건 투자 활성화	54
1) 연기금 및 정책금융 - 해외 사례	54
2) 연기금 및 정책금융 - 국내 사례	59
3) 민간부문	64
V. ESG 경영과 산업안전보건생태계	73
1. 산업생태계와 산업안전보건	75
2. 국내 산업생태계 원청-하청 기업 사례	76
1) 서비스 산업 원청 대기업 A사 안전관리자 인터뷰	77
2) 제조업 대기업 B사 ESG 및 안전보건 담당자 인터뷰	81
3) 건설업 하청 중소기업 C사 고위 임원, 가족기업 2세 인터뷰	94
4) 스마트 안전 스타트업 D사 대표이사 인터뷰	100

VI. 결론 및 제언	107
1. ESG 평가 및 공시에 산업안전보건지표 도입	109
1) 정부의 사업체별 산업 재해율 공시와 ESG 평가기관 공유	109
2) 각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 재해율 공시	111
3) 산업안전 체계 평가대상 확대: 주 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산업 재해율 공시 포함	111
4) 산업안전 체계 평가대상 확대: 주 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및 자원체계 평가	112
5) 산재서사의 언론을 통한 공유와 홍보	114
2. 산업안전보건 제고를 위한 ESG 투자 활성화	115
1) 연기금의 산업안전보건 지표를 활용한 책임 투자 확대	115
2)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115
3) 민간 ESG 책임투자 부분에 대한 지원	116
4) 위탁자산운용사에 대한 관리 규제 및 ESG 평가 기준 투명성 강화	116
3. ESG 경영을 통한 산업안전보건생태계 구성	118
1) 산업안전 평가 및 관리 시스템: 원청-하청 협업 플랫폼 표준화	118
2) 협력기업 및 영세업체 안전보건 역량 강화: 규제 강화	119
3) 대기업의 ESG 경영을 통한 협력업체 안전보건 역량 강화 지원	120
4. 연구의 한계와 추후연구 제언	121
참고문헌	123
부 록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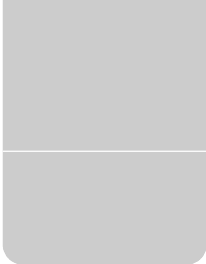


표 목차

〈표 I-1〉 ESG의 구성 요소	4
〈표 I-2〉 UN 책임투자원칙	5
〈표 II-1〉 미국 주요 ESG 평가기관과 산업안전보건 평가항목 현황	15
〈표 VI-1〉 안전보건 지표 현황 및 향후 개선 방안	113

그림목차

[그림 Ⅰ-1] 국내 연도별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6
[그림 Ⅰ-2] ESG 경영의 세 축과 기업경영의 변화	8
[그림 Ⅱ-1] 기업지배구조연구원 2022년 3분기 보도자료 내 등급 조정 요약	20
[그림 Ⅱ-2] 뉴스브라이트 S-Oil ESG 평가 보도	21
[그림 Ⅱ-3] 한국거래소 ESG 포털 기업 ESG 평가 등급 공시	23
[그림 Ⅱ-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제 3자 검증	25
[그림 Ⅲ-1]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사업장 비교 공시	30
[그림 Ⅲ-2] 언론사 폐업이 기업의 잘못된 행동에 미치는 영향	32
[그림 Ⅲ-3] 페널티 기준에 따른 언론 노출 정도의 급격한 증가	34
[그림 Ⅲ-4] 해당 기업의 산재율 공시가 동종 산업의 다른 회사에 미친 효과	35
[그림 Ⅲ-5] 지리적 근접성, 산업 유사도에 따른 산재율 공시의 외부효과	36
[그림 Ⅲ-6] 산재 서사 기록 프로그램 Storybuilder	37
[그림 Ⅲ-7] OSHA의 산재 발생 작업장 공시 예시 1	40
[그림 Ⅲ-8] OSHA의 산재 발생 작업장 공시 예시 2	41
[그림 Ⅲ-9]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사고백서의 산재 사고 기록	43
[그림 Ⅲ-10] 산재 발생 작업장의 근로자 의견 청취서	44
[그림 Ⅳ-1] ESG 투자전략	49
[그림 Ⅳ-2] 미국 기관투자자의 ESG 투자 규모 및 투자자 타입	50

그림목차

[그림 IV-3] 2015 - 2019년 국내 주요 연기금 ESG 투자 운용 규모	52
[그림 IV-4] FTSE Index(ESG 지수)를 활용한 주식 선정 과정	56
[그림 IV-5] 이탈리아 (INAIL) 대출이자 상환 면제 신청 조건	58
[그림 IV-6] 국민연금의 ESG 평가 프로세스	60
[그림 IV-7] 국민연금 신규 주요 원칙과 이행 활동	61
[그림 IV-8] 국민연금 최신 개정 ESG 평가 요소	62
[그림 IV-9] 미국 ESG 분야 별 투자 규모 및 성장 추세	65
[그림 IV-10] SK텔레콤X카카오 공동 ESG 펀드 운영 프로세스	66
[그림 IV-11] 메리츠자산운용의 주주관여활동 사례	67
[그림 IV-12] 안다 자산운용의 네이버에 대한 주주관여활동	69
[그림 IV-13] 민간기업의 산업안전 스타트업 투자 사례 - 삼성엔지니어링	70
[그림 IV-14] 민간투자자의 안전보건 경영과 투자 사례 - 미래에셋	72
[그림 V-1] 사업장 규모별 요양재해자, 사망자 수, 2021년	76
[그림 V-2] SHE컨설팅 세부 프로그램	84
[그림 V-3] SHE컨설팅 진행 프로세스	86
[그림 V-4] B사 협력사 행동규범	89
[그림 V-5] 원청 기업 제공 법무법인 팀 컨설팅	95
[그림 V-6] 원청 기업 제공 법무법인 팀 컨설팅	95
[그림 V-8] 스마트 안전 플랫폼 도입 효과	102

I. 서론

.....

I. 서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은 어느 때보다 높으나, 정부 및 규제기관의 노력은 고위험 사업장의 점검 및 감독, 영세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감독 및 규제 중심 접근은 기업들이 산업안전을 추가적인 비용, 혹은 위험 관리 (risk management)의 대상으로만 여기게 하여, 기업에서의 안전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힘들다. **기업의 자발적 안전보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최근 기업경영에서 환경보전, 이해관계자 중시,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시스템 도입 및 확산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특히 ESG의 S는 인권 및 노동 문제 외에도 산업안전보건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ESG 경영을 통한 자율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곧 “Safety in ESG”의 정책구상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ESG 경영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활용방안을 고려한다. 구체적으로, 1) ESG 평가기관의 평가지표와 ESG 관련 시장공시, 2) 산업안전 관련 규제공시, 3) ESG 관련 기관투자와 기업 스타트업 투자, 4) 대/중소기업, 원/하청 기업을 아우르는 ESG 산업안전 보건생태계 구축의 네 분야에서 “Safety in ESG”의 중점 실천 방안을 검토하려 한다.

1. ESG 경영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

기업이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재무제표를 비롯한 단기적, 정량적 재무 정보를 중심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던 과거와 달리,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하여 투자 대상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 책임투자

(Responsible Investment)가 투자자들 사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ESG 기준이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보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UN PRI, 2022). ESG를 구성하는 요소는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그리고 지배구조 (Governance)로, 기업 경영의 책임 범위를 외부 사회와 더 나아가 지구 환경으로 폭넓게 설정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업의 책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I-1〉 ESG의 구성 요소

환경	사회	지배구조
• 기후변화 • 자원고갈 • 물 • 공해 • 삼림파괴	• 인권 • 현대 노예 • 아동 근로 • 근로조건 • 근로자 관계	• 뇌물 및 부패 • 경영진 보상 • 이사회 다양성 및 구조 • 정치적 로비 및 기부 • 조세 전략

폭 넓은 의미에서 ESG의 기원은 담배 농장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1960년대 사회적 책임 투자에서 찾을 수 있으나, ESG라는 구체적인 형태는 ‘Freshfield report’라 불리는 2005년 UN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담당자들과 로펌 Freshfield가 협업하여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처음 공식적으로 제시되었다. 이 보고서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의 경제적 성과를 안정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ESG를 분석 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이후 2005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제시된 UN 책임투자원칙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UN PRI”라 칭함)의 바탕이 되었다 (Leins, 2020). UN PRI는 투자기관들이 ESG 이슈를 적극 반영할 것을 골자로 하는 6가지 원칙과 35개 실천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1분기까지 4,902개 기관이 서명하였다.

〈표 I -2〉 UN 책임투자원칙

1.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환경, 사회,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이슈들을 포함한다.
2. 소유권 정책 및 행사에 있어 환경, 사회,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이슈를 포함한다.
3. 투자대상기업에 환경, 사회,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이슈를 적절하게 노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4. 투자산업 내 책임투자원칙들의 수용 및 실행을 증진시킨다.
5. 책임투자원칙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증진을 위해 협력한다.
6. 책임투자원칙의 수행에 관한 각자의 활동과 진전 상황을 각각 보고한다.

오늘날 투자자들은 기업의 행위와 미래 재무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ESG를 활용하고 있다. Hartzmark와 Sussman은 2019년 실증 연구를 통해 뮤추얼 펀드의 EGS 평가가 평가 대상 기업의 투자유치금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Hartzmark & Sussman, 2019). 또한, 2018년 Governance & Accountability Institute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S&P 500대 기업의 86 퍼센트가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responsibility)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Governance & Accountability Institute, Inc., 2018). 유럽연합이 2023년 금융기관이 투자 및 금융상품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의 시행을 계획하며, ESG의 활용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ESG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사에게 ESG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국민연금기금은 ESG 부실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림 I-1] 국내 연도별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ESG가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기 시작함에 따라,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ESG는 중요한 경영 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투자 및 홍보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여 년간 CSR과 ESG에 대해 연구해온 하버드 경영대 George Serafeim 교수는 ESG 성과가 금융 시장에서 중요해 질수록, 기업은 성과를 이루고 보상을 얻기 위하여 보다 근본적인 전략 변화를 추구하고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도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어떠한 활동을 기획하고 시행하고 있는지를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2004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138개의 기업들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20년 말 기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217개의 기업 중 112개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림 I-1, 이인형 & 이상호, 2021). 현재는 일관된 공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기업들은 복수의 이니셔티브를 채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기업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만을 담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결정에 큰 도움이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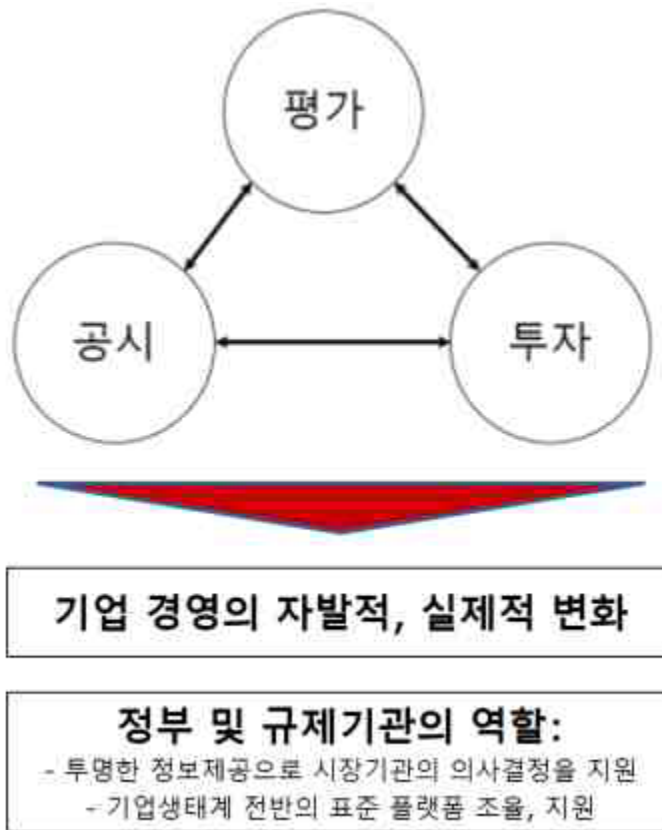
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김아리, 2012). 유럽의 경우는 2018년부터 비재무 정보공시지침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을 적용하여 모든 회원국 내 공익실체 (public interest entity)의 ESG 정보 공시를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 보고 의무공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 ESG 경영의 세 축(평가, 공시, 투자)과 기업경영변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SG 경영은 환경과 사회, 기업지배구조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전방위적 노력이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주주이익 극대화를 주요 목표로 했던 기업경영이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만 기업의 장기적 발전과 생존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사실 기업이 환경을 해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지며, 공정한 지배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ESG 경영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각 분야 별 지표를 개발하여 기업의 현 상황을 평가하고, 공시하며,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힘을 바탕으로 기업행동의 자율적, 실질적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그림 I-2). 따라서, 평가/공시/투자는 ESG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 된다.

이는 ESG가 주로 기업 회계, 재무 분야에서 발전되어 왔다는 역사적 배경과도 연관이 있으며,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You can't manage what you can't measure)”라는 아이디어와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다.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영향과 같은 비재무적인 분야를 시장의 투자자들이 직접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재무적 자원 없이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압력으로 작용하며, 기업행동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장기 투자수익이 보

다 바람직한 기업의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믿는 이상, 기업들 역시 자신이 다른 경쟁자에 비해 이러한 분야에서 더 뛰어나다는 것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형태로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공시한 내용을 실행할 것이다. 물론 전 세계 거래소에 상장된 대기업의 경우 글로벌 평가기관, 공시기관 (증권 시장), 투자자들로부터의 압력이 더 크겠지만 이러한 압력은 상장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산업생태계 내의 중소기업, 미래사업 기회를 엿보는 스타트업 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다.



[그림 I-2] ESG 경영의 세 축과 기업경영의 변화

이러한 ESG 경영에 대한 정부와 규제기관의 역할은 자명하다. 기업, 평가/공시기관, 투자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투명한 기업 정보를 제공하며,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두 ESG 경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평가, 공시, 투자기관들과 기업들, 그리고 정부 및 규제기관이 노력한다면 ESG 경영을 통한 기업의 자율적, 실제적 행동변화를 꾀할 수 있다.

3. ESG 경영을 통한 자율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ESG 경영을 도입하는 목적은 기업이 속한 산업과 사회가 당면한 구체적인 과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산업화와 환경문제를 오래 겪어온 유럽 기업들은 탄소감축과 같은 환경요소를, 다양한 인종, 민족 구성원 통합에 노력해온 미국 기업들은 기업 구성원의 다양성 확대를,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비판받는 신흥국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해왔다.

한국 사회와 기업이 먼저 고려해야 하는 ESG 주제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곧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현황을 개선하는 일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본 연구가 검토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안전보건 시스템 구축과 확산이 한국에서의 ESG 경영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규제기관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 지이다. ESG 경영이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므로 이를 국내에서 실행하는 데에는 국내 산업계의 특수성 역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는 국내 산업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이다.

이에 연구과제는 1) ESG 평가기관의 평가지표와 ESG 관련 시장공시, 2) 산업안전 관련 규제공시, 3) 산업안전보건 제고를 위한 ESG 관련 책임투자, 4) 대-중소기업, 원청-하청 기업을 아우르는 ESG 산업안전 보건생태계 구축의 네 분야에서 “Safety in ESG” 경영의 주요 실천 방안을 검토하려 한다. 연구는 관련 국내 외 학술문헌과 전문보고서를 검토하고, ESG 평가기관 (한국기업지

배구조원), 시장공시기관 (한국거래소), 국내 대/중소기업 ESG 담당자 (서비스업, 반도체 제조업, 건설업, 스마트안전 스타트업), ESG 관련 전문서비스 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컴플라이언스 컨설턴트), 국내 ESG 관련 투자업계 (자산운용사, 대기업 ESG 스타트업 투자 담당자)의 사례를 살펴보고, 담당자를 인터뷰함으로써 연구주제의 학술 및 실무적 측면을 모두 검토하여 Safety in ESG 경영의 각 분야별로 가능한 정책을 도출하여 제언하려 한다.

Ⅱ. ESG 평가 및 공시와 산업안전보건지표



II. ESG 평가 및 공시와 산업안전보건지표

1. 글로벌 ESG 평가/공시기관의 산업안전보건지표 반영 현황

1) ESG 평가기관

ESG가 사회 다방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영역은 ESG 열풍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ESG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그리고 지배구조 (Governance)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보건은 세 기둥 중 사회 부문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2021년 UN PRI는 발표 자료에서 사회 부문을 크게 인권, 현대 노예, 아동 근로, 근로 조건 그리고 노사관계로 구분하였다. **안전보건**은 이 중 **근로 조건 항목**에 속한 요소로 다루어졌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여러 ESG 평가지표에서도 안전보건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 MSCI와 Refinitiv, Sustainalytics에서는 안전보건을 인적자원 관리 항목의 하위 구성요소로 관리하고 있으며, Bloomberg와 S&P Global은 근로자 보건과 안전 항목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 체계는 각 기관마다 상이하나, 안전보건은 모든 기관의 ESG 평가에 반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의 관심과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ESG 평가기관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ESG 평가 체계의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안전보건은 대부분의 경우 전체 ESG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표 II-1 비중 행을 살펴보면, 미국 ESG 평가 기관들이 안전보건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관들은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마다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항목에 탄력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환경 분야의 리스크가 큰 기업일 경

우, 환경 분야 항목에 가중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각 평가기관이 안전보건 항목에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두는지를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각 기관의 샘플 보고서를 통해 대략적인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Refinitiv의 샘플 보고서에서는 근로자 항목이 전체 ESG 평가 중 13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안전보건의 근로자 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요소 중 하나임을 고려하여 모든 요소가 균등한 가중치를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안전보건은 대략 전체 ESG 평가 점수 중 **3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샘플 보고서를 통해 안전보건의 가중치를 공개하고 있는 Sustainalytics와 S&P Global 모두 Refinitiv와 비슷한 수준의 가중치를 안전보건에 주었다. Sustainalytics의 경우 반도체 제조기업의 예시에서 안전보건에 4.5퍼센트의 비중을 주었으며, S&P Global은 3에서 6퍼센트 사이의 비중을 주었다. 각 평가 기관이 30개에서 40개 사이의 항목을 통해 전체 ESG 점수를 내는 것을 고려할 때, 3 퍼센트 가량의 가중치는 안전보건의 ESG 평가 체계에서 평균적인 중요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로, 안전보건의 ESG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주제로 다뤄지고 있음은 평가 기관의 **핵심 주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ESG 평가 기관은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핵심 주제들을 선정하고 있다. 더욱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을 정해두고,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Sustainalytics를 제외한 다른 평가기관들은 일정한 핵심 주제를 갖고 있는데, 9개의 핵심 주제 중 안전보건을 포함하고 있는 Bloomberg를 제외하고는 안전보건의 핵심 주제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은 없다. Refinitiv는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MSCI와 S&P Global은 지배구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ESG 평가기관에서 안전보건의 낮은 가중치는 산업구조의 진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의 주요 관심사가 산재율과 같은 원시적인 작업장 산재에서 보건 분야로 바뀐 미국의 실정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ESG평가가 글로벌 기관들에 의해 주도되며 평가항목과 방법이 국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안전보건의 심각한 수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글로벌 ESG 체계가 수정 없이 국내에 도입된다면, 핵심 주제로 설정되어야 할 안전보건의 실제로 관심을 적게 받게 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ESG 주제가 되어야 할 안전보건의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와 개선 노력을 얻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II-1〉 미국 주요 ESG 평가기관과 산업안전보건 평가항목 현황

기관명	레피니티브 (Refinitiv)	모건스탠리캐피 털인터내셔널 (MSCI)	블룸버그 (Bloomberg)	서스테이널리틱스 (Sustainalytics)	S&P 글로벌 ESG 스코어 (S&P Global ESG Score)
기관 소개	톰슨로이터가 설립한 기관으로 접근성과 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세계 3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모건스탠리가 만든 글로벌 평가기관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ESG 평가기관으로 꼽힘	블룸버그와 미국 지속가능 회계기준 위원회 (SASB)와 공동으로 개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관련 데이터 제공	1992년 설립되어 ESG 리스크 평가 및 리서치에 높은 전문성을 보이며, MSCI와 더불어 가장 많이 활용되는 ESG 평가기관 중 하나임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S&P 에서 1999 년부터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해온 로베코샘 (RobecoSam)의 ESG 사업 부문을 인수, Sustainable 1이라는 기관이 ESG를 전담 평가
사회 부문 구성요소	인권, 배상 책임, 근로자, 공동체	인적자원, 배상 책임, 이해관계자 의견, 사회적 기회 제공	보건 및 안전 관리, 근로 및 고용 관행, 생산 위험 관리, 공동체 권리 및 관계, 윤리 및 준법감시	노동자 준법 준수, 외부에 미치는 영향, 사안의 복잡성	기업 시민의식 및 자선 활동, 인권, 직무 보건 및 안전
안전보건 평가항목	근로자 보건 및 안전	인적자원 보건 및 안전	직무상 보건 및 안전 관리	직무상 보건 및 안전 관리	직무 보건 및 안전

기관명	레피니티브 (Refinitiv)	모건스탠리캐피 털인터내셔널 (MSCI)	블룸버그 (Bloomberg)	서스테이널리틱스 (Sustainalytics)	S&P 글로벌 ESG 스코어 (S&P Global ESG Score)
비중	근로자 항목이 전체 ESG 점수의 13퍼센트를 차지, 안전보건은 항목을 구성하는 네 가지 세부요소 중 하나임	사회 부문 전체의 비중이 5퍼센트에서 30퍼센트 사이로, 산업 특성이 환경 혹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높은 가중치가 주어짐. 안전보건의 구체적인 비중 정보는 제공하지 않음	Shell 社の ESG 평가에서 사회 부문 중 안전보건의 31퍼센트의 비중 차지	반도체 제조기업의 샘플 평가에서, 안전보건의 4.5퍼센트의 가중치를 가짐	샘플 보고서에서 안전보건의 전체 ESG 점수의 약 3퍼센트에서 6퍼센트 차지
핵심 주제	환경이 전체 ESG점수의 44퍼센트를 차지하며, 환경에 큰 비중을 둠	지배구조 요소를 중시. 지배구조 기준 6개는 모든 평가 대상 기업에 있어 핵심 평가 기준임	공기 오염, 환경 변화, 수자원 관리, 자원과 폐기물, 안전 및 보건 , 감시 위험 및 감독, 보상 체계, 다양성, 이사회 독립성, 지배구조 및 임기, 주주 권리	각 산업의 특성에 따라 상이	거버넌스를 강조하며 44퍼센트에서 55퍼센트의 높은 가중치 부여, 지배구조, 위기관리, 그리고 행위 규범에 높은 관심

2) ESG 공시기관

ESG 평가기관들이 기업들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여러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한다면 상장기업이 거래되는 주식시장에서는 이를 선별하여 **공시지표**로 정하여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돕는다. 공시지표는 평가지표와 별개

의 것이며 주로 기업들의 회계기준의 일부분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도 ESG와 관련하여 최근 공시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EFRAG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에서 발표하는 유럽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 (IFRS) 재단,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발표한 공시 지표가 대표적이다.

IFRS와 미 SEC에서 발표한 ESG 관련 공시기준은 공시에 관한 일반원칙과 기후에 대한 내용만 현재 공개된 상태이고 이후 확대될 것으로 예고되었다. EU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인 ESRS에는 ESG 관련 공시의 일반 원칙과 주제별 11개의 공시기준 초안이 발표되어 있다. 여러 항목 중 S1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공시 기준이 명시되어있다¹⁾. 상세사항은 아래와 같다.

●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시스템과 산업재해현황에 대한 공시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시스템 현황**은 ESRS의 주요 공시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적용받는 직원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적용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해당 직원들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관리 시스템을 적용 받는 직원들의 비율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네 가지 **정량적 항목**에 대한 공시를 명시하고 있다.

- 1) 업무와 관련된 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
- 2) 업무와 관련된 **부상자 수와 비율**
- 3) 업무와 관련된 **질병자 수와 비율**
- 4) 업무와 관련된 사고, 사망, 질병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

1) EFRA는 ESRS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상세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efrag.org/Activities/2105191406363055/Sustainability-reporting-standards-interim-draft>

● 경영진의 산업안전보건 개선 노력에 관한 공시

안전 관련 시설, 장비, 프로그램, 교육 등 더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경영진의 노력에 대한 공시도 ESRS의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경영진이 직장의 안전과 건강을 개선시키는 데에 얼마나 전념하는지 또한 포함한다. 이는 아래의 세 가지 **정성적 항목**을 포함한다.

- 1)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규율을 준수하기 위한 **경영진의 노력**
- 2)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정책, 규율에 관한 **경영진의 직원들에 대한 소통**
- 3) 산업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직원들의 직접 참여와 논의**를 위한 노력
(예,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듣기 위한 설문 실시 여부)

● 직원의 산업안전보건 개선 노력에 관한 공시

ESRS에서는 기업 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내부기준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공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규제기관이나 투자자와 같은 제 3자는 기업 내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직원을 비롯한 내부자보다 어렵다. 또한 기업 내에서도 경영진과 직원 사이에도 정보 비대칭이 존재한다. **직원들이** 어떠한 문제로 위험을 느끼는지 그리고 재해를 당하는지에 대해서 경영진이 완벽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 외부의 지원이나 전문가의 개입이나 도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2) 내부 직원들의 개입 (engagement), 참여 (participation), 논의 (consultation), 제언 (suggestions)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2. 국내 ESG 평가 및 공시기관의 산업안전보건지표 반영 현황

앞서 살펴본 것처럼 ESG 평가지표와 공시지표는 차이가 있으며, 증권시장에서도 서로 다른 기관이 이를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

인 국내 ESG 평가기관인 기업지배구조연구원과 공시기관인 한국거래소의 ESG 담당자를 인터뷰하고 각 기관에서 ESG 평가 및 공시에 산업안전보건 지표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현황을 알아본다.

1) 국내 ESG 평가기관 사례 - 기업지배구조연구원

국내 평가기관의 ESG 평가 기준의 산정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ESG 평가기관으로 손꼽히는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11년부터 ESG 평가를 시행해온 전문 기관이다. 본 사례 연구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국내 ESG 평가의 현황과 국내 기업의 대응을 폭넓게 다루었으며,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보건 관련 평가 현황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였다. 인터뷰는 기업지배구조연구원 에서 ESG 평가 중 사회 부문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과 진행하였으며, 정부가 제공하는 ESG 가이드라인과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현행 ESG 평가 모형, 향후 개발되어야 하는 지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ESG 평가기관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ESG 평가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의 ESG 현황에 대한 문의에 대해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은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책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모와 활동 면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사회 부문 평가 담당자는 인터뷰를 통해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ESG 평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업 활동을 개선해나가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기업의 ESG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한국거래소 또한 “ESG 공시를 통해 **기업 간 비교와 경쟁을 독려하여 기업이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보공개가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면 향후 기업이 ESG 평가를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더욱 많이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였다.

	회사명	쟁점사안 및 등급조정 사유	E		S		G		통합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1	S-Oil	(쟁점사안) 울산 온산공장 폭발·화재사고 발생 (조정사유) 환경사고 발생 및 환경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A	B+	A+	A+	A+	A+	A+	A
2	POSCO홀딩스	(쟁점사안) 포항제철소 성폭행 및 추행 사건 발생 (조정사유) 근로자 인권 침해	A	A	A	B+	A+	A+	A	A
3	한국전력공사	(쟁점사안) 곡성 협력업체 근로자 추락 사고 발생 (조정사유) 근무 중 안전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반복적인 중대 재해	B+	B+	A	B+	B+	B+	B+	B+
4	한라	(쟁점사안)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 반복적인 근로자 사망 사고 (조정사유) 근무 중 안전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반복적인 중대 재해	B+	B+	A	B+	B+	B+	B+	B+
5	지투알	(쟁점사안)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정사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D	D	B	B	B+	B	B	B
6	우리은행	(쟁점사안) 직원의 횡령(614억) (조정사유) 내부통제 미흡	-	-	-	-	B	C	-	-
7	한국투자증권	(쟁점사안)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감원 제재 (조정사유)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내부통제 미흡	-	-	-	-	B+	B	-	-

[그림 II-1] 기업지배구조연구원 2022년 3분기 보도자료 내 등급 조정 요약

ESG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ESG 평가기관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져가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은 매 분기 ESG 등급이 조정된 기업에 대해 사유와 등급 조정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고 있으며, 언론과 기업들은 이 발표에 대해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기업이 사회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ESG 평가에 반영이 되고,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리스크 요인으로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여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ESG 평가 기관의 확대된 파급력을 나타낸다. 기업지배구조원의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기업의 등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 기업들이 민감하게 대응하며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하게 세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ESG 평가기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미치는 파급력은 S-Oil의 사례를 통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S-Oil은 2022년 5월 울산 온산 공장에서의 대규모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사고를 겪었다. 이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은 그림 II-1과 같이 2022년 3분기 평가에서 S-Oil의 평가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였으며,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보도자료는 그림 II-2가 나타내듯 다수의 일간지에 ‘S-OIL의 자가당착 지속가능보고서’와 ‘에쓰오일 ESG 등급 강등’등의 제목으로 기사화 되었다.

에쓰오일의 '자가당착' 지속가능성보고서...'폭발 화재'로 ESG 평가 '최악'

사우디 외교장관 방한, '중대재해법' 처벌 완화 일한 의심

정영원 기자 입력 2022.07.21 09:10

에쓰오일(S-OIL) 울산공장 폭발 화재 사고로 인해 에쓰오일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급이 추락했다. 특히 에쓰오일의 환경(E)부문 등급은 기존 A에서 B+로 하향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에쓰오일(S-OIL)은 기업 경영활동을 통한 재무적 가치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포함한 비재무적 가치 창출 성과를 담은 2021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지난 18일 발간했다. 한편,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이 방한해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사우디 외교장관이 에쓰오일의 중대재해법 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한국까지 날아온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에쓰오일 측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석유화학사업 확장, 친환경 에너지사업 진출과 같은 3개의 그린 이니셔티브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그린 이니셔티브는 ESG 로드맵의 핵심으로 관련 기술의 개발 수준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앞서 1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지난 4월부터 6월간 확인된 ESG 위험을 반영해 7개 기업의 ESG 등급을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 온산공장이 폭발한 에쓰오일의 환경(E)부문 등급을 기존 A에서 B+로 하향했다. 사회(S)부문과 지배구조(G)부문은 A+를 유지했다. 환경 관련 등급이 하향하며 에쓰오일의 통합ESG 등급도 A+에서 A로 낮아졌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저녁 8시 51분께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S-OIL) 온산공장의 보수공사 과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하청업체 직원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원하청 직원 9명이 화상 등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이 20일 방한 해 윤 대통령을 만나 원전·그린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전환과 IT 기술 등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원전, 그린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IT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가 최대주주인 에쓰오일 CEO(최고경영자)가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당할 위기에 처하자 자국 핵심인사를 보호하려 온 것 아니냐고 추측했다.

[그림 II-2] 뉴스브라이트 S-Oil ESG 평가 보도

● 안전보건의 국내 ESG 평가모형 내 중요성

안전보건은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ESG 평가 모형 내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은 구체적인 평가 비중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다룰 주제로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이루어진 평가 모형 개정 시에도 안전보건의 비중을 높였음을 확인하였다. 담당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사안에 대해 투자자, 기업관계자 그리고 언론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담당자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의 가이드라인 및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있으나, 국내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지표가 포함되어 있거나 국내에 중요한 사안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적절하게 수정하여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 국내 ESG 공시기관 사례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신고, 공시에 관한 업무 등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기관이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ESG 투자 확산을 위해 상장 심사 과정에서 ESG와 관련된 평가 항목을 포함하는 등 ESG에 근거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SG 공시기준 자문 전문가인 한국거래소 ESG 지원 팀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서는 한국거래소의 ESG 관련 업무를 살펴보고,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지표와 거래소에서 참조하는 글로벌 지표, 공시 정보의 신뢰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한국거래소의 ESG 관련 업무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ESG와 관련하여 네 가지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2024년 말까지 KOSPI 상장기업의 자율 공시를 촉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2025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의무적 공시를 단계적으로 확

대할 계획이다. 이것은 지배구조보고서가 2019년부터 의무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에 대한 공시도 시간을 두고 의무화하겠다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는 자율 공시된 보고서를 분석하고 기업에 개선점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체 775 사

회사명	KCGS				MSCI	연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여부
	종합등급	환경	사회	지배구조	종합등급		
AJ네트웍스	B	D	B	B	-	2022	NO
AK홀딩스	B+	B	B+	B+	-	2022	NO
BGF	A	A	A+	A	-	2022	NO
BGF리테일	A	A	A+	A	BBB	2022	NO
BNK금융지주	A+	A	A+	A+	A	2022	YES
BYC	B	D	B	B+	-	2022	NO

[그림 II-3] 한국거래소 ESG 포털 기업 ESG 평가 등급 공시

둘째, ESG 포털을 운영한다.²⁾ ESG 포털은 그림 II-3과 같이 기업들의 ESG 평가 등급을 공시하고 있다. 기업의 ESG 등급을 공시함으로써 기업들이 해당 등급을 개선해야 한다는 상호 간의 압박 (peer pressure)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설명하였다. 셋째,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무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넷째,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라는 상장기업 가이드북을 제공한다. 해당 가이드북에는 공시와 관련된 국제 기준과 지표가 소개되어 있다.

인터뷰에서는 공시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무엇이

2) <https://esg.krx.co.kr/>

중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담당자는 “ESG에 근거한 기업 간 비교 가능성 상승으로 정보 공개를 더 많이 하도록 하고, 공개된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정보에 근거한 투자가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 기업들이 ESG에 더 신경을 쓸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공시 기준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려는 노력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핵심적인 것은 무엇을 공시 기준으로 정하는가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 산업안전보건 공시와 관련한 국내, 해외 지표

현재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지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핵심적인 내용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지표를 추가한 내용이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산업안전보건 공시 지표의 개발이 향후 필요할지에 대한 질문에 담당자는 “현재 투자자와 기업, 시장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전면적인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터뷰 중에서 강조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공시지표와 평가지표가 다르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기업지배구조연구원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나, 공시지표의 결정은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평가지표의 경우 평가 기관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친 후 안전보건과 관련된 세부 항목을 선정한다. 반면 공시지표의 경우 어떤 항목을 공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투자자를 비롯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거래소는 공시지표에 산업안전보건을 비롯한 ESG 항목이 공시되면 이는 투자 의사결정의 중요한 축이 되며, 이에 따라 기업의 실질적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공시 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제 3자 검증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율공시 사항이다. 앞서 간략히 다룬 것과 같이, 자율공시 체계에서는 기업이 긍정적인 내용만을 공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율공시 단계에서 공시된 정보에 대해서는 제 3자가

공시정보를 감사한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관계자는 “**검증에 대한 표준규정이 없고, 검증기관에 관련한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다양한 제3의 감사기관들이 자체 검증 절차를 수행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기업들은 해당 인증서를 보고서 말미에 포함시켜 공시하고 있다. 그림 II-4를 보면 제 3자 검증은 한국품질재단, 한국경영인증원, DNV어슈어런스 코리아, BSI Korea, 한국표준협회 등 다양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기관이라고 보기 힘들다. 거래소 인터뷰 담당자 역시 “아직 제 3자 검증의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없고 인증기관이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전체 110건

회사명	발행년도	업종	활용기준	제 3자 검증	보고서명
SK	2022	금융및보험업	G S T U	한국품질재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일시멘트	2022	제조업	G S T U	한국경영인증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현대건설	2022	건설업	G S T U	한국경영인증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케이티앤지	2022	제조업	G S T U	DNV어슈어런스코리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LG생활건강	2022	제조업	G S T U	BSI Korea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샘	2022	도매및소매업	G S T U	한국표준협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금호타이어	2022	제조업	G S T U	BSI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락앤락	2022	제조업	G S U	한국표준협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DB하이텍	2022	제조업	G S U	한국경영인증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한유화	2022	제조업	G S T U	한국경영인증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그림 II-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제 3자 검증

Ⅲ.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공시

.....

Ⅲ.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공시

앞서 살펴본 ESG 평가 및 공시 지표는 주로 금융시장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의 규제기관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규제공시를 시행한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분기별, 연별 산업재해 발생 건 수 등에 대한 요약 통계량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 이는 ESG 경영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ESG 경영에서는 평가지표의 개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 제 3자 검증 등이 모두 개별 기업의 수준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전통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공시의 이론적 배경과 실증연구, 규제공시 대상 등을 보다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기업 공시 효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

● 공시 기업 및 관련 기업에 대한 효과

기업 공시 (corporate disclosure)가 기업의 행동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공시의 효과는 기업 의사 결정의 의도와 결과를 기업의 내 외부 이해관계자 (예, 종업원, 주주, 정부감독기관 등)들이 완벽하게 관찰 가능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완벽하게 관찰되지 않는 기업의 행동을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경영자들이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사회의 이익에 반하여 기업의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를 감소시킬 수 있다. 도덕적 해이란 양자 간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상호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공시의 도덕적 해이 감소 효과는 식당의 위생 관리 카드, 환경 평가 점수, 식수의 오염 정도 공시 등 여러 맥락에서 검증되어 왔다. 우리

정부 역시 고용형태 공시 (고용노동부), 환경정보공개 (환경부), 기업집단현황 공시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기업공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그림 III-1은 환경부에서 공시하고 있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의 예시이다. 각 사업장 별 환경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업장 간 비교를 하여 어떠한 사업장이 더 많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용수 사용량과 에너지 총량, 폐기물 발생 총량, 수질오염물질 총량, 화학물질 배출량에 대한 최근 3년간 정보를 상세히 공시하고 있다.

사업장 비교 

> 년도 2020

> 기준기업·기관 지에스건설(주) 검색
 > 비교기업·기관 삼성물산(주)건설_본사 검색 비교하기

[엑셀다운로드](#)

구분	지에스건설(주)			삼성물산(주)건설_본사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용수 사용량 (ton)	<u>1,997,224</u>	<u>2,655,552</u>	<u>2,632,889</u>	961,483	1,083,486	972,105.40
에너지 총량 (TJ)	<u>1,768,467</u>	<u>1,998,788</u>	<u>1,960,104</u>	894,137	1,079,979	658,684
폐기물발생 총량 (ton)	<u>665,318.50</u>	<u>452,279.17</u>	<u>794,134.86</u>	0	0	0
수질오염물질 총량 (ton)	0	0	0	<u>486,534</u>	<u>588,264.04</u>	<u>591,039.29</u>
화학물질 배출량 (ton)	0	0	0	0	0	0

[그림 III-1]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사업장 비교 공시

공시를 통해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문제되는 행동을 한 기업**을 공시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이후 잘못을 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이다. 공시를 통해 해당 기업의 문제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지면 기업은 평판 하락, 소비자와 투자자 외면, 매출 감소 등의 문제에 직면한다. 따라서 공시의 대상이 된 기업은 이후 잘못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된다.

둘째는 문제되는 행동을 한 기업을 공시함으로써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동일 산업에 속하거나, 지리적으로 근방에 위치한 다른 기업** 역시 이후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이다. 공시를 통해 한 기업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을 목격한 다른 기업들이 이후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효과가 존재한다. 이는 공시 대상 기업의 동일 산업에 속한 다른 기업들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기업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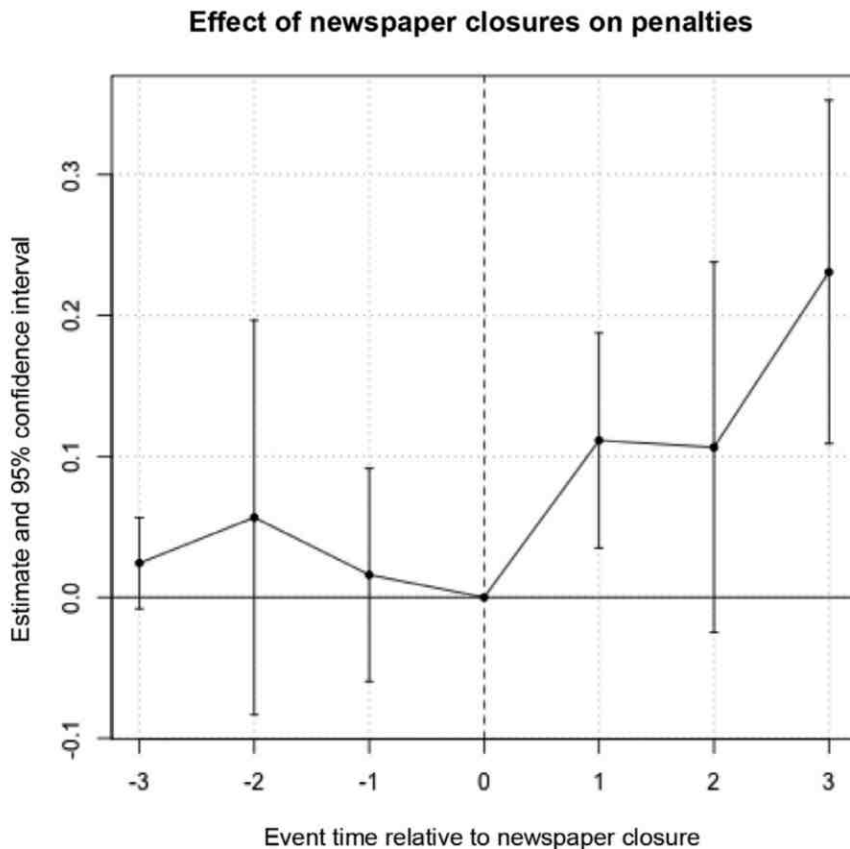
● 언론을 통한 공시효과

산업안전보건 공시를 통해 공시 대상 기업 외에 다른 기업들의 사고율을 하락시키는 중요한 채널에는 언론이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언론의 역할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언론의 직접적인 감시 효과 (monitoring)**이다.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다양한 경로로 기업의 문제를 언론에서는 포착할 수 있고 이를 공론화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언론이 기업에 대한 감시 수준을 높일 때 기업의 잘못된 행위들이 감소한다 (Dyck et al. 2008). 특히 미국의 경우 기업의 사기 행위 (fraud)의 3분의 1 이상을 언론에서 감시하여 기업이 스스로 밝히기 이전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였다 (Miller, 2006).

두 번째는 **언론을 통한 정보의 확산 (information diffusion)**이다.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 공시를 할 경우 해당 내용이 언론을 통해 확산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언론을 통한 기업정보 확산이 해당기업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해왔다 (Bushee et al., 2010; Engelberg and Parsons, 2011).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기존의 언론이 담당하

던 정보의 확산 역할이 강화되었다 (Lau and Wydick, 2014).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밝히는 것은 언론을 통해 주목을 받은 기업들의 가시성 (visibility) 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기업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Jonas Heese와 공저자들은 최근 연구에서 지역 언론사가 사라졌을 때 기업의 잘못된 행동 (misconduct)이 증가한다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Heese, et al., 2022).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저자들은 지역 언론사가 폐업하여 사라지는 경우를 분석한다. 아래 그림 III-2는 언론사가 폐업한 이후 (폐업시점인 x축의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지역의 기업들에서 발생한 문제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해당 논문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III-2] 언론사 폐업이 기업의 잘못된 행동에 미치는 영향

2. 산업안전보건 규제공시와 기업행동변화에 대한 실증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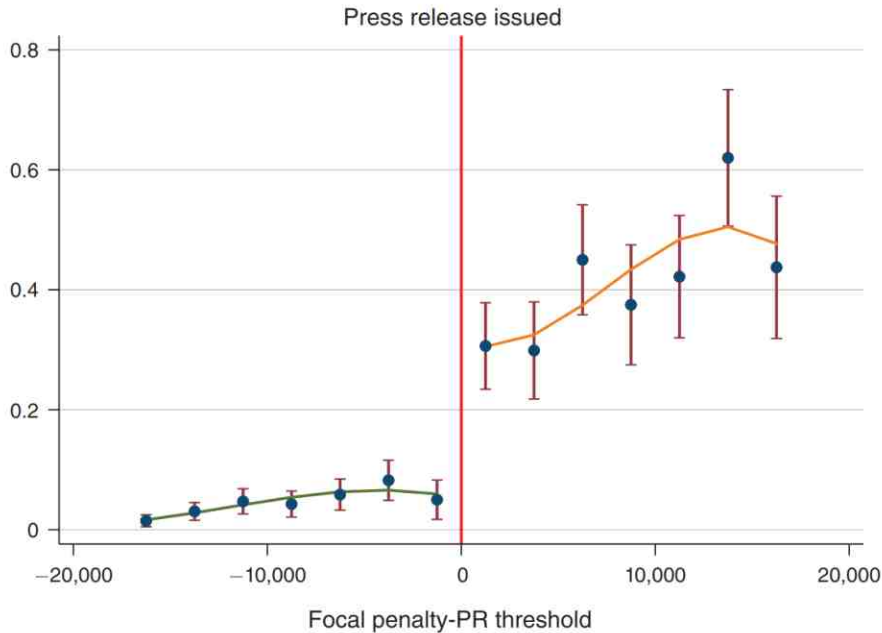
위에서는 정부규제기관의 공시가 기업의 행동에 미치는 경로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관련 실증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규제공시의 대상이 되는 **산재율 (numbers)**과 **산재서사(narrative)**를 알아본다.

● 규제공시 대상 - 산재율

Matthew Johnson의 “산업안전보건 규제 공시의 효과 (Regulation by Shaming: Deterrence Effects of Publicizing Violations of Workplace Safety and Health Laws)”논문은 규제기관이 산재가 발생한 작업장에 대해 공시하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작업장 사고 역시 동시에 감소한다는 것을 인과적으로 보인다. 규제기관의 공시가 작업장 사고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어렵다. 기업의 산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라고 압박을 받는 기업들은 이미 사고가 많이 나는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공시에 대한 압박 이전에 사고율이 비슷한 기업들을 비교하거나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는 이상 규제공시가 사고율 감소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검증하기는 쉽지 않다.

해당 연구에서는 회귀 불연속 (regression discontinuity) 방법론을 이용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는 공시의 직접적 대상이 된 기업 외에 다른 기업들의 산재가 감소하는 **파급효과 (spillover effect)**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인다. 공시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지역마다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2009년부터 OSHA는 안전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이 지역에 따라 \$40,000 혹은 \$45,000 이상인 경우 공시하는 것으로 정책을 통일하였다. 그림 III-3은 OSHA가 기업의 안전 문제를 공시하는 벌금 기준보다 실제 벌금이 상회하면 언론에 해당 사실이 공개될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가정은 공시하는 벌금 기준이 OSHA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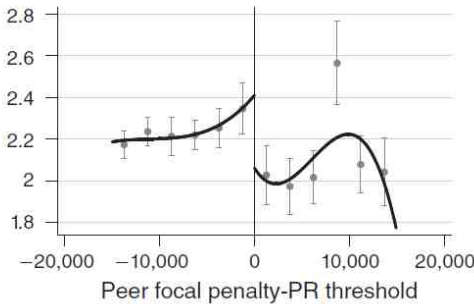
정보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먼저 공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이미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으면 공시 기준 벌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전에 신경을 써서 정확한 인과효과 추정이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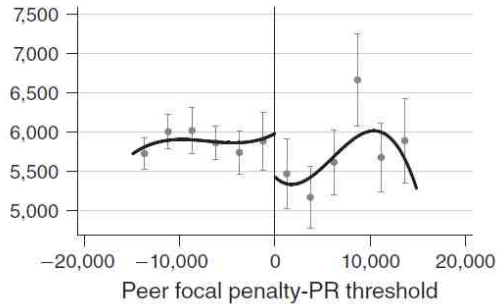
[그림 III-3] 페널티 기준에 따른 언론 노출 정도의 급격한 증가

회귀 불연속 방법론을 통해 인과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의 다른 중요한 가정은 컷 오프 지점 (cutoff point)을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개체와 약간 하회하는 개체는 유사할 것이라는 전제이다. 예를 들어 공시 기준이 되는 벌금이 \$40,000라고 하자. 그렇다면 \$41,000의 벌금을 부과 받은 기업과 \$39,000의 벌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안전 관리에 기업이 신경 쓰는 정도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고 가정하고 공시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두 기업의 차이는 \$41,000의 벌금을 부과 받은 기업만 OSHA에서 해당 사실을 공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처럼 컷 오프 지점보다 약간 상회한 기업과 약간 하회한 기업의 이후 산재율을 비교하면 규제공시와 산재율 간의 인과적 효과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

Panel A. Total violations



Panel B. Financial penalty



[그림 III-4] 해당 기업의 산재율 공시가 동종 산업의 다른 회사에 미친 효과

그림 III-4는 공시대상 기업의 5km 반경에 있는 동종 산업의 다른 회사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위반 행위 (Panel A)와 이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 (Panel B)에 미친 효과를 그래프로 보여준다. 컷 오프 지점 (0이라고 쓰여 있는 지점이 공시대상 기업의 벌금을 정규화한 것)을 중심으로 공시대상 기업과 동일한 산업에 속한 다른 회사들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위반행위, 벌금이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공시했을 때 해당 기업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같은 산업에 속해있는 다른 기업들까지 영향을 주는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시의 파급효과는 어떠한 범위까지 나타날까. 그림 III-5는 이에 대해 **지리적 근접성과 산업의 유사도**로 나누어서 효과를 보인다. 우선 공시가 된 기업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동종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가장 확연하게 영향을 받아 산재 사고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하지만 반경 50km까지의 기업들도 작지만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산업재해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지는 않는다. 공시대상이 된 기업들과 다른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우 5km 반경에 있어도 산업재해가 감소하는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기업들이 자신과 같은 산업에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monitoring)을 하고 공시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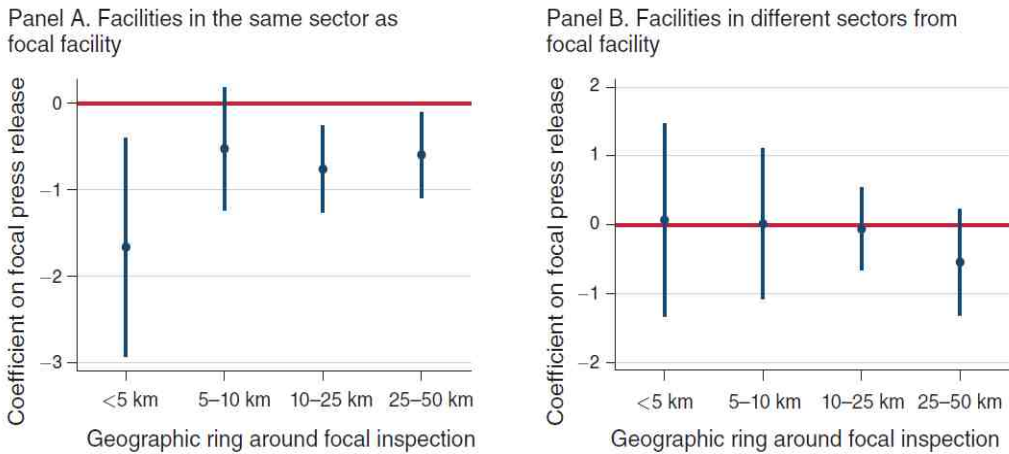


FIGURE 6. GENERAL DETERRENCE EFFECTS OF PRESS RELEASES AS A FUNCTION OF GEOGRAPHIC AND SECTORAL DISTANCE

[그림 III-5] 지리적 근접성, 산업 유사도에 따른 산재율 공시의 외부효과

● 공시 대상: 산재 서사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는 산재 서사 공시를 활용하여 산재 발생 감축과 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Rajala & Vayrynen, 2010). 서사(narrative)는 개인이 경험한 것을 남들에게 이야기 (storytelling)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재 서사는 특히 전수 받는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안전 문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Marchand-Sibra, 2006). 그림 III-6을 보면 네덜란드정부에서는 Storybuilder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산재 서사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약 17,000여 산재 사고에 대한 서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기록을 통해서 기업과 작업장의 안전 실태를 평가하고 기업의 안전 관리자와 근로자들이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Storybuilder는 단계별로 산재가 발생하는 경로를 추적한다. 산재가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단계별로 나누어 각각의 산재를 기록한다. 작업장의 환경, 지시 내용, 동료 유무 등 세분화된 카테고리 따라 각각의 산재가 기록된다 (Ale, et al., 2008).

Storybuilder

Publication date 03/30/2012 - 00:00 Modification date 11/02/2018 - 18:30

Storybuilder is a software tool developed for the Dutch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It supports occupational and major accident analysis, investigation, inspection and identification of ways to improve safety.

The database contains serious accidents reported to and investigated by the labour inspectorate. At the moment this amounts to ca. 17.000 accidents from the period 1998-2009. The software and database are, after request, free available for users. The database can be viewed in English or Dutch.

The purpose of Storybuilder is to help with:

- Learning how occupational accidents are caused
- Identifying dominant causes with the purpose to control them in the workplace
- Incident investigation

[그림 III-6] 산재 서사 기록 프로그램 Storybuilder

산재 서사의 중요성은 안전에 대한 조직의 문화와 서사를 통한 문화의 변화 가능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모든 조직은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각하게 하며, 특정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에게 해당 조직 내에서 어떠한 행동 양식을 취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의 하나로서 작동한다 (Van Maanen & Barley, 1984). 산업안전 보건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도 조직 문화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다른 조직과는 구별되는 조직 내의 위험에 대한 공동 인식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한다.

연구에 따르면 조직 안에는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통용되는 부족 언어 (tribal language)가 존재하여 같은 현장의 언어를 쓰지하지 않는 외부인이 지시를 했을 때 그 효과성이 적다고 말한다 (Neuhuser, 1988).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이 내리는 지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각하고 신뢰를 적게 보낸다. 반면에 존중 받는 내부자가 내리는 지시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낸다. 예를 들어 **건설업 현장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고 문화를 공유하는 작업반장이 내리는 지시와 관리 감독 기관에서 파견된 이가 내리는 지시는 그 효과가 다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규제기관이 작업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 자신들만의 언어를 공유하는 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서사 또는 이야기 (storytelling)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오래된 도구이다 (Simmons, 2001). 산재서사 공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산재를 감소시킬 수 있다. 첫째,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서사를 공유하는 것은 **산재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해당사고가 “내 조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끔 한다. 조직 내 구성원들이 위험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지는 사고 숫자에만 집중해서는 알 수 없다. 구성원들이 어떠한 사항을 조직의 위험 요소로 공통적으로 인식하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주요사고가 발생하는지를 자세히 묘사하는 사고의 서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산재 사고에 대한 서사를 공시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사고 기업 뿐만 아니라 타 사업장 역시 산업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서사는 **산업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 (norm)**을 만들어내 규범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게 된다. 사고서사를 공유하여 안전에 대한 규범이 생겨나면 안전을 지키지 않는 기업, 작업장, 작업반장은 더 이상 정상적이지 않은 대상으로 치부된다. 정당성 (legitimacy)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서사를 통해 산재가 발생한 구체적인 과정을 기록하여 위험에 대처하는 **경험의 축적과 관리**가 가능하다. 관리 및 감독관은 과거 산재 사고가 발생한 과정을 상세히 파악하여 현재의 위험을 진단할 수 있으며, 작업자도 위험 작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다.

3. 국내 산업안전보건 규제기관 공시 도입 방안

1) 규제기관 산재 공시 사례 - OSHA

현재 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규제기관 공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에서 분기별, 연별 산업재해 발생 건 수 등에 대한 요약 통계량만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 이름을 명시하는 경우는 언론에서 공개하는 사고 다발 100대 기업 등의 리스트로만 공개되고 있다.

규제기관의 산업재해에 대한 공시는 미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2006년부터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는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연도 별로 기업들의 산업 안전 규정 위반 사항을 공시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누구나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¹⁾

OSHA의 공시 사항은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 아래 그림 III-7의 2022년 8월 4일에 공시된 내용을 보면 우선 해당 기업의 이름 (M&H Crates Inc.)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불만사항 (complaint)이 접수되어 OSHA에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언제 조사를 실시했는지를 공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이후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 작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LOTO; Lock-Out, Tag-Out) 안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적고 있다. 그 결과 부과된 벌금의 액수 (\$248,866)도 적혀있다. 추가 설명을 위해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감독관이 해당 작업장에 대해 평가한 의견도 인용하고 있다. 바질 싱 (Basil Singh) 달라스 (Dallas) 지역 감독관은 “M&H Crates Inc.가 계속해서 연방 안전 규율을 어겨 작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1) <https://www.osha.gov/news/newsreleases>에 OSHA에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공시 내용 종류 별로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 문화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OSHA가 해당 작업장에 대해 조사한 이력을 공개하고 있다. 해당 작업장을 2012, 2014, 2020년에도 조사한 바 있으며 2020년에는 근로자 한 명이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하여 조사되었다고 공시하고 있다.



OSHA News Release - Region 6

U.S. Department of Labor

August 4, 2022

Investigation finds Jacksonville wood crate, pallet company's history of violations continues, employees exposed to machine, other hazards

M&H Crates Inc. faces \$248K in proposed OSHA penalties

JACKSONVILLE, TX – A Jacksonville wood crate and pallet manufacturer's history of workplace safety violations continues after federal inspectors found the company exposed workers to amputation hazards in its February 2022 inspection.

The U.S. Department of Labor'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pened an inspection on Feb. 8, 2022, at M&H Crates Inc. after receiving a complaint. OSHA determined the company failed to develop, document or use lockout/tagout procedures to prevent sudden machine start-ups. They also discovered the company failed to ensure required [machine guarding](#), which exposed workers to hazards, including [amputation](#).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machine guarding violations are OSHA's most frequently cited infraction.

OSHA cited M&H Crates for serious and repeat violations for machine guarding hazards, housekeeping issues and failing to provide hearing protection as required. The company faces \$248,866 in proposed penalties.

"M&H Crates Inc. continues to expose its employees to dangerous workplace hazards by ignoring required federal safety standards," explained OSHA Area Director Basil Singh in Dallas. "These safeguards can be the difference between ending a shift safely and suffering a serious and life-altering injury. M&H Crates must develop and implement a company culture where worker safety and health is a priority."

Prior to its recent inspection, OSHA cited M&H Crates following inspections in 2012, 2014 and 2020. In June 2020, inspectors examined safety failures after an employee cutting pallet boards suffered a finger amputation while using an unguarded band saw.

The company has 15 business days from receipt of its [citations](#) and penalties to comply, request an informal conference with OSHA's area director, or contest the findings before the independ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view Commission.

[그림 III-7] OSHA의 산재 발생 작업장 공시 예시 1

2022년 8월 8일에 공시된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그림 III-8) OSHA가 작업장에 부과한 벌금 외에도 다른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다. 우선 조치를 취하도록 한 판사의 이름과 함께,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게 된 경위가 OSHA의 작업장 안전 조사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해당 공시의 경우 환자들을 다루는 치료 기관에서 일부 폭력적인 환자들로부터 다른 환자들,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OSHA의 해당 작업장 안전 조사는 2018년 12월에 실시되었고, 판사

의 최종 명령은 2022년 7월에 하달되었다. 작업장 안전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 근로자 교육 훈련, 근로자들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구 제공, 사고 방지를 위한 조직 및 공간의 재구성 등의 조치를 명령한 것으로 공시되어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OSHA가 안전 규정을 위반한 기업의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해당 지역의 언론사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OSHA가 안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을 적발하고 공시를 하면 해당 내용이 언론에 실려서 일반 대중 역시 해당 공시사항을 알게된다. 공시 내용 아래에 **언론 공개에 관한 사항 (media contacts)**으로 담당자와 연락처를 각 공시 사항 별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SHA News Release - Region 8

U.S. Department of Labor

August 8, 2022

Federal judge affirms US Department of Labor finding that Colorado acute psychiatric treatment facility exposed employees to workplace violence

Centennial Peaks Hospital failed to protect nurses, technicians from physical abuse

LOUISVILLE, CO – An administrative law judge in Denver has affirmed the findings of a U.S. Department of Labor workplace safety investigation that determined a Louisville acute inpatient psychiatric treatment facility exposed direct care employees – such as nurses and mental health technicians – to aggressive patients who regularly assaulted and seriously injured them.

Following an inspection related to a December 2018 complaint of workplace violence, the department'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cited UHS of Centennial Peaks LLC – which operates as Centennial Peaks Hospital – for exposing employees to workplace violence hazards. The 104-bed behavioral health hospital, which provides acute inpatient hospitalization, medical detoxification and intensive outpatient programs for adolescents and adults, contested the May 2019 citations to the independ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view Commission. The action led to a two-week trial in September 2021.

On July 14, 2022, Administrative Law Judge Patrick Augustine affirmed OSHA's citation and found that OSHA's proposed abatement measures were feasible and would materially reduce the workplace violence hazard. The abatement measures included the following:

- Implementing a comprehensive 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program.
- Training employees on the 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plan.
- Providing employees with reliable communication devices, such as radios and/or personal panic alarms.
- Reconfiguring the nurses' stations to prevent patients from entering easily and assaulting staff within.
- Ensuring that units are staffed adequately to handle aggressive and escalating patients more safely.
- Conducting post-incident debriefings and investigations to improve future responses to situations involving aggressive patients.

The judge also affirmed OSHA's \$10,229 penalty.

"Workers at behavioral health centers are entitled to work without fear of violence from patients," said Regional Solicitor John Rainwater in Denver. "Unfortunately, UHS of Centennial Peaks failed to meet its obligations, resulting in its employees suffering assaults and serious injuries at the hands of aggressive patients."

This is the second favorable decision upholding workplace violence citations at a UHS-owned facility in Colorado. One case is pending after a two-week trial in Colorado Spring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view Commission's decision – like others before it – holds UHS accountable for implementing feasible, common-sense measures that will make a real difference in keeping safe these employees who perform incredibly important and challenging work," Rainwater added.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 employer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safe and healthful workplaces for their employees. OSHA's role is to ensure these conditions for America's workers by setting and enforcing standards, and providing training, education and assistance.

[Learn more about OSHA.](#)

###

Media Contact:

Chauntra Rideaux, 972-850-4710, rideaux.chauntra.d@dol.gov

Juan J. Rodriguez, 972-850-4709, rodriguez.juan@dol.gov

Release Number: 22-1534-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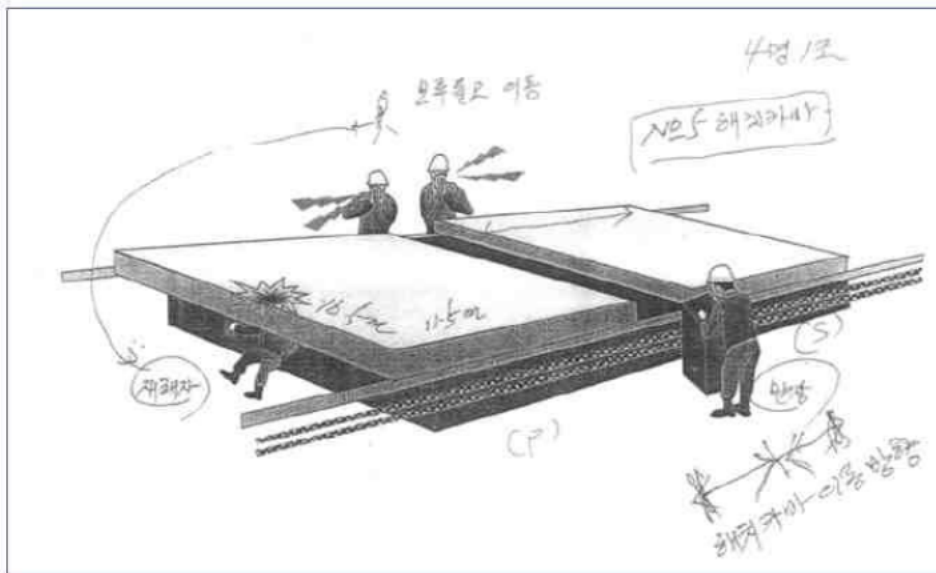
[그림 III-8] OSHA의 산재 발생 작업장 공시 예시 2

2) 산재서사 공시사례 - 중대재해 사고백서

최근 발간된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2014~2020년 동안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담긴 서사를 기록하였다. 서론에서 저자들은 연구의 의미와 목적을 밝히며 **만인율 등의 숫자로 환원되지 않는 산재서사**를 재해연도와 날짜, 상해자 이름, 소속, 재해유형, 그리고 사고관련 내용을 상세히 백서에 기록하고 있다. 사고백서의 저자들은 “어느 언론에서도 이러한 ‘사고서사’를 내보내지는 않았다. 단지 000명의 숫자를 갱신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 역시도 산재사고를 숫자로 환원해 다루고 있다. 이는 매우 문제적인 산재사고를 우리 사회가 무성의하고 관성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적고 있다.

저자들은 산재사고의 수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고의 내용, 사고에 담긴 서사를 조명해야 사고가 발생한 역동적인 상황과 그 상황이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백서는 중대재해 35건의 사고조사 기록을 다양한 경로로 수집하여 각 사고마다 하나의 서사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였다. 사고의 상세한 내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들어간다. 사고백서에서 사고를 분석하기 위해 **노동조합에서 작성한 사고조사서, 사측에서 작성한 사고조사서, 일일작업계획서 등, 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의견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사고조사서, 중대재해 관련 기자회견문, 판결문** 등이 인용되었다.

그림 III-9의 예시를 보면 군산 조선소의 하청 노동자가 작업 구역에서 해치커버를 닫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내용이 자세한 산재서사의 형태로 서술되어 있다. 작업반장이 해치커버를 닫겠다고 물어보자 다른 작업자들이 “닫지 마세요”라고 소리쳤으나 ‘닫아도 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재해자는 그대로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렀다.



재해자 이**씨는 군산 조선소에서 세척작업을 하는 건조부 (하청업체) 소속 하청노동자이다. ()은 군산조선소에서 모든 해치커버 개폐작업을 전담하고 있었으며, 신호수3명과 반장 1명으로 구성된 1개조가 전담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2014년 10월 28일(화) 오전 7시 40분경 출근했다. 오전 8시 5분부터 673호선 NO5 해치커버 기밀검사를 위해 재해자를 포함한 작업자 3명은 해치커버를 거의 연 상태에서 해치커버의 고무부분에 묻은 쇼크(분필)를 지우고 다시 쇼크를 칠하는 작업과 해치커버를 여닫는 작업을 실시했다.

오전 8시 45분경 작업반장은 작업자 3명이 진행한 해치커버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해치커버를 완전히 닫기 위해 작업반장은 조작판넬부(조종석)로, 나머지 3명은 모두 조작부 맞은편으로 이동했다.

재해자는 나머지 2명의 작업자보다 먼저 앞서 나가, 보루(기름걸레)에 물을 묻히고 다시 처음 작업구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작업반장은 이를 보지 못하고 "닫는다"라고 소리를 쳤고, 재해자가 이동하는 것을 본 나머지 작업자 중 한명이 "닫지 마세요"라고 소리쳤으나, 주변 소음으로 인해 작업반장은 '닫아도 된다'는 신호로 판단하여 해치커버를 작동했고, 재해자의 머리부분이 해치커버와 코밍부

[그림 III-9]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사고백서의 산재 사고 기록

근로자 의견청취서

2021. 07. 15

○ 이번 고소 작업 중 떨어진 중대재해를 보고 느낀 점은?

바로 근처에서 추락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 중대재해 차단을 위한 나라 위험 작업 안전관리 대책으로 추가 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작업전 충분히 개인의 안전 보호구를 점검할 여유시간과 안전통로를 지킴에 주어진다면 좋겠습니다.

○ 기타 중대 위험 작업 관련 건의 및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

보통은 공기가 아닌으로 충분히 천장구멍이나 개인 안전 보호구 항상상태를 점검하는 여건이 부족합니다.

소속 [redacted]
성명 [redacted]

[그림 III-10] 산재 발생 작업장의 근로자 의견 청취서

서사에는 사고의 과정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던 다른 노동자들의 시선이 포함된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안전은 무엇일까. 사고백서에서는 작업 중 재해를 보고 느낀 점과 개선 사항을 물어보는 근로자 의견청취서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III-10을 보면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근로자 개인의 과실이나 부주의 보다는 공사 기간과 예산의 부족을 지목하고 있다. 이처럼 서사를 통해 숫자로는 드러나지 않는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과 개선 방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산재서사의 공시를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는 산업안전에 대한 공감을, 내부 직원들의 산업안전에 관한 직접적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IV. ESG 책임 투자와 산업안전보건 투자 활성화



IV. ESG 책임 투자와 산업안전보건 투자 활성화

앞서 살펴본 산업안전보건 관련 평가 지표 개발과 공시, 규제기관의 규제공시 등은 모두 기업 정보에 관한 것이다. 이에 기반 한 시장투자자 - 연기금, 정책금융, 민간부문 - 의 투자는 ESG 경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아래에서는 ESG 책임투자와 산업안전보건 투자유인의 이론적 배경과 해외 및 국내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1. ESG 책임투자의 이론적, 법률적 배경

기관투자자는 법률에 의해 수탁자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수탁자 책임은 기관 투자자가 수익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하면서 자산을 관리 및 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권용수, 2020). 최근 몇 년에는 비재무적이익을 확대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책임투자, 즉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고려하여 진행한 투자 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UN이 발표한 책임투자원칙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중에서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기된 후, ESG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고 투자 의사 결정 시 ESG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0). 이에 전 세계적으로 **책임 투자 (Social Investment)** 또는 **임팩트 투자 (Impact Investment)**라는 용어가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게 되면서 지속가능한 투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으로는 투자 결정에 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 (Fiduciary Duties)**와 충돌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신인의무는 신인관계에서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의무를 뜻

한다. 신인의무의 핵심적 내용 중 수탁자는 기금을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과 신탁의 목적”을 위해 운영해야 한다는 항목이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인의무 자체가 수익 극대화 이외의 다른 목적을 투자과정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연기금 수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에서도, 신인의무에 대한 고려로 사회책임투자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5%에 달했다 (Sandberg, 2011). 이와 관련하여 UN환경프로그램 금융계획 (UNEP FI)은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가 사회책임투자에 장애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관련 법률을 분석하고 기관 투자자에게 공통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중대 의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투자자의 신인의무와 책임투자가 양립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나아가 일정한 경우 기관 투자자에게 책임투자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염미경, 2017). ESG 책임투자의 이론적, 법률적 배경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책임투자 실행 전략과 관련해서도 이론적 접근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Gibson et al.(2020)은 기관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책임투자 전략을 7개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림 IV-1은 류정선 (2020)이 추가적으로 해당 전략들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현재 국내 투자 기관들은 주로 ESG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산업과 기업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Negative Screening)**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기재된 전략을 포함한 더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ESG 기준에 미비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권한을 활용하여 기업 관여활동, 의결권 행사, 주주제안 등의 적극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관여 (Engagement)** 및 **주주활동주의 (Shareholder Activism)** 등의 다양한 투자전략이 국내 투자자들에 의해 도입되고 있다.

ESG 투자전략	개요
1. 네거티브 스크리닝 (Negative screening)	· ESG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산업·기업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방법
2. 포지티브 스크리닝 (Positive screening)	· 업종별 ESG 평가결과가 우수한 섹터·기업·프로젝트를 선별
3. 지속가능성 테마투자 (Thematic)	· 기후 변화, 음식, 물, 재생 에너지, 청정 기술 및 농업과 같은 특정 지속가능성 문제는 다루는 테마 자산에 대한 투자
4. 임팩트 투자 (Impact Investing)	· 사회/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가진 투자
5. ESG 통합 (ESG integration)	· 기업 재무분석과 더불어 ESG 요소를 체계적이고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분석·평가·투자 하는 방식
6. 기업 관여 및 주주 활동주의 (Engagement)	· 책임투자기준에 맞는 기업경영 유도를 위해 주주 권한을 활용하여 기업관여활동, 의결권행사, 주주 제안 등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
7. 규범기반 스크리닝 (ESG Reporting)	· ESG 기준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투자 사슬 (investment chain)유지 여부 (투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 - 투자자, 운용관련업자, 포트폴리오사 등)

[그림 IV-1] ESG 투자전략

2. ESG 책임투자의 현황 및 효과

● 연기금

해외에서의 ESG 투자는 주로 연기금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보스턴대학교 은퇴연구센터 (CRR)에서 발표한 'ESG Investing and Public Pensions: An Update'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공적연기금 (Public Pension Fund) 은 1970년대부터 사회적 투자 (Social Investing)를 실시해 왔으며 2018년 기준 약 3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에 ESG 평가모형을 부여했다고 한다. 미국 시카고 전 재무관 Kurt Summers도 정부를 대표한 투자자들을 통해 기업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며 정부투자펀드와 연금이 지속가능한 투자 확대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다.¹⁾ 미국의 지속가능 인프라 기관 (SIF: Sustainable Infrastructure Foundation)에서 제공한 데이터인 그림 IV-2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기관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ESG 투자를 늘렸으며 그 중에서 **정부기금 (Public Fund)**을 비롯한 공공투자 형태가 절반 이상 (54%)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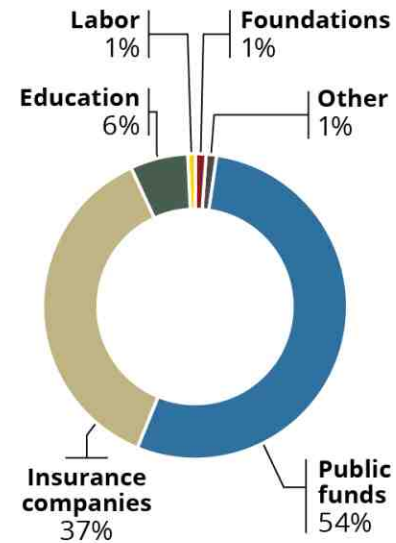
Institutions embrace ESG investing

Growth of ESG assets controlled by nearly 500 institutional investors surveyed, in trillions.



Source: US SIF Foundation

Institutional investment in ESG assets by investor type as of 2018.



[그림 IV-2] 미국 기관투자자의 ESG 투자 규모 및 투자자 타입

1) Bloomberg Briefs. "Governments push ESG investment forward". Bloomberg. Mar. 13, 2018.

<https://www.bloomberg.com/professional/blog/governments-push-esg-investment-forward>

국내에서의 ESG 투자는 그 규모면에서 연기금 등 공적기관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이시연 (2021)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및 확산은 공적 연기금들이 사회책임 투자를 확대하려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며, 현재까지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회연금기금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했고 우정사업본부는 참여 예정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그 중에서 국민연금²⁾은 ESG 투자에 있어 국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사회책임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2020)에서 국내 주요 연기금의 ESG 투자 현황에 대해 공시하였는데 국민연금이 타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규모의 책임투자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의 투자 유형은 직접투자와 위탁운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위탁운용은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외부 운용사에 투자 및 자산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상수 (2019)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6년 이래 책임투자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2015년에 개정한 국민연금법에서 투자 진행 시 ESG와 관련된 사회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항목을 명시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기업 의결권 행사에 관여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즉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지침을 도입해서 장기적인 수입 증대를 위해 책임 투자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림 IV-3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연기금의 전체 기금운용 규모 및 책임투자 규모를 집계한 통계이다.³⁾ 국민연금은 특히 2018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새로 도입한 후 책임투자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288% 성장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의 전체 기금운용 규모는 약 882조 원에 달하며 그 중 국내주식이 132조 원, 국내채권이 310조 원의 규모이다. 국내주식 직접운용 중 책임투자 적용금액이 83.4조 원, 위탁운용 중 책임투자 적용금액이 7.7조 원, 국내채권 직접운용 중 책임투자 적용금액

2) 본고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기금을 지칭한다.

3) 류정선 (2020). 최근 글로벌 ESG 투자 및 정책동향. 금융투자협회.

이 38.2조 원을 기록했다.⁴⁾ 따라서 국내 기준으로 채권보다 주식 선정 시 더욱 ESG 기준을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책임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ESG 적용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서 책임투자과 관련된 각 분야의 구체적 투자 비중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억 원, %)

분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규모	5,123,240	5,582,991	6,216,422	6,387,811	6,983,000
	책임투자 규모	68,516	63,700	68,778	267,400	269,800
	비중	1.34	1.14	1.11	4.19	3.9
사학연금	기금운용 규모	127,559	139,229	158,404	160,312	207,460
	책임투자 규모	1,189	2,124	1,020	1,329	1,263
	비중	0.93	1.53	0.64	0.83	0.60
공무원연금	기금운용 규모	52,647	65,189	80,447	88,267	88,900
	책임투자 규모	1,091	398	739	1,022	1,633
	비중	2.07	0.61	0.92	1.16	1.84
우정사업본부	기금운용 규모	1,091,662	1,119,820	1,168,148	1,256,597	1,300,650
	책임투자 규모	1,240	1,318	1,507	1,230	9,622
	비중	0.11	0.12	0.13	0.10	0.73
책임투자 규모합계		72,036	67,540	72,044	270,981	282,318

[그림 IV-3] 2015 - 2019년 국내 주요 연기금 ESG 투자 운용 규모

● 정책금융

정부의 정책금융을 통해서도 기업의 자발적 ESG 경영을 촉진할 수 있다. 최근에 'ESG 연계금융 (Sustainability-linked Financing)' 상품이 많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자사의 ESG 성과를 통해 공공자원 확보 및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 '기업의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보고서⁵⁾는 ESG 가치에 대한 자원 배분

4)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 홈페이지 공시 자료.

https://www.nps.or.kr/jsppage/fund/mcs/mcs_06_01.jsp

5) 박영석, 이효섭. "기업의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2021.06.08. 자본시장연구원.

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그 초과분만큼 재무적 이익으로 돌려줄 수 있다면 해당 기업들은 ESG 경영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과세조치**도 기업의 자발적 산업안전보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다. 심충진 외 (2016)는 과세조치가 안전보건 우수기업에게는 보상적 성격으로, 사고 다발 기업에게는 처벌적 성격으로도 작용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내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ESG 실천을 장려하는 정책금융 및 보상 제도가 사실 적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면 온실가스 감축을 보다 많이 수행한 기업은 정부로부터 무상할당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시장에서 거래하여 재무적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또한 외부 배출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정부로부터 실적을 인정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상쇄배출권’제도도 실행 중이다. 이러한 유인 전략 하에 기업들은 점차 자발적인 ESG경영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ESG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을 비롯한 분야에도 유사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민간부분

임팩트 투자 (Impact Investment)의 기원은 2001년에 설립한 ‘어큐먼 펀드 (Acumen Fund)’에서 시작되었다. 어큐먼 펀드는 세계 최초의 사회적 벤처캐피털로, 단순한 자선사업을 넘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혁신 창업가에게 투자하고 사회변화를 창출하는 목표를 가지고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의 초기 임팩트 투자사로는 쏘카, 텀블벅에 투자한 소풍 (sopoong)을 비롯한 소규모 벤처캐피털(VC) 기업들이 있으며, 이들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과 투자 자금을 제공한다. 그러나 ESG가 급격히 부상되면서 임팩트 투자는 투자기업의 혁신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역시 중요한 투자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 편으로 **사회책임투자 (social investment)**는 선진국으로부터 시작된 투자 개념이며 임팩트 투자와 유사한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3. ESG 책임투자를 통한 산업안전보건 투자 활성화

1) 연기금 및 정책금융 - 해외 사례

● 연기금

연기금이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시 산업안전보건을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삼아 기업을 선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캐나다 연금투자관리회사 (Public Sector Pension Investment Fund)는 책임투자를 매우 적극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사회적 측면에서 '노동 및 인적 자원 개발'과 '산업안전보건과 제품 영향력 (Product Impact)'에 대해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⁶⁾ 2020년 캐나다 8대 연기금 (일명 **Maple 8**)의 CEO들은 ESG 요소를 전략과 투자 결정에 통합하여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글로벌 연기금 기관 (CalSTRS, GPIF, USS)들도 비슷한 내용으로 성명을 내놓았으며 ESG 관련 요소를 장기적 투자 과정에 포함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⁷⁾

유럽지역에서 책임투자를 가장 성공적으로 실천한 연기금은 네덜란드 의료 복지부문의 근로자연금 (PGGM)이다. 해당 연기금은 전 자산 군을 대상으로 ESG 분석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보유 지분에 대해서는 기업과의 대화, 주주 총회 투표 및 소송 절차를 활용해 **주주관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투자 기업들과 건설적 대화를 가지는 방식을 통해 ESG 관련 사안의 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투자의 수익성과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2020년 3월 기준 PGGM는 총 97개의 기업을 투자에

6) PWC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제공한 'Global Pension Funds' 보고서 중의 내용

7) Wharton Pension Research Council 보도 자료.

<https://pensionresearchcouncil.wharton.upenn.edu/blog/why-esg-matters-for-pension-fund-strategies-and-outco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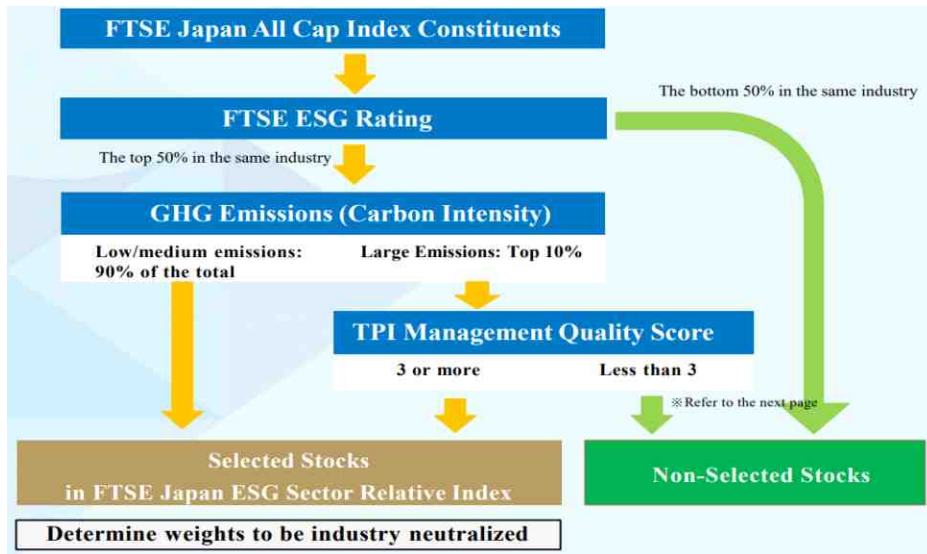
서 배제하여⁸⁾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 역시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공공투자 사례를 들 수 있다. 일본의 **공적연금펀드 GPIF**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는 올해 3월 'FTSE Blossom Japan Sector Relative Index'라는 ESG 지수를 투자대상 선정과정에 도입했다. GPIF의 보고서⁹⁾는 ESG 지수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그림 IV-4). 먼저 일본 국내 주식에게 FTSE ESG 평가지수를 적용하여 상위와 하위 50% 기준으로 기업을 구분한다. 하위 50%는 즉시 투자 잠재 대상에서 배제되며, 상위 50% 기업에게 추가적으로 탄소 집약도 (Carbon Intensity)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평가한다. 이에 탄소 집약도가 비교적 낮은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선정하고 동시에 TPI (Transition Pathway Initiative) 점수¹⁰⁾를 적용해 3점 이상인 점수를 기록한 기업들에 제만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8) 황윤경, 이유민 (2021). 해외 주요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의 책임투자와 투자제한 동향으로부터의 시사점. 대신경제연구소.

9) 'GPIF adopted a ESG Index for Japanese Equities' 보고서. 2022.03.30.

10) TPI는 영국이 2017년에 기업의 저탄소 경제 전환 준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설립한 시스템이다.



[그림 IV-4] FTSE Index(ESG 지수)를 활용한 주식 선정 과정

● 정책금융

ESG 평가모형을 기반으로 기업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는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실행중이다. 유럽에서 시작된 **지속가능연계대출**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미국의 연계대출 시장 규모로 보았을 때 작년 한 해에만 29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¹¹⁾ 참여기업은 먼저 달성하고자 하는 ESG 목표 (sustainability performance target)를 은행과 함께 책정하고 목표 달성 시 **대출금리 인하**를 포함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안전보건 우수기업에게 대출금 및 자본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유럽산업안전보건청 (EU-OSHA)이 2010년에 발표한 ‘Economics Incentives to Improve Occupational

11) Poh & Selgson. "U.S. Sustainability-linked loans are 292% more than all of 2020," Bloomberg. May 24th, 202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5-24/u-s-sustainability-linked-loans-are-292-more-than-all-of-2020>

Safety and Health: a review from the European perspective'¹²⁾에 따르면 이탈리아 기업 중 99%가 산재사고에 더욱 취약한 중소기업이므로 중소기업 안전보건투자를 적극 격려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만들었다고 한다. 산업 안전보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된 활동을 펼친 기업들은 **대출이자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은행에서 금리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예방 공공기관 INAIL** (The National Institute for Insurance against Accidents at Work)이 **기업 대신 대출금리를 지불**하는 절차이다. 조건에 충족한 기업들은 INAIL에 최대 €155,000 (한화로 약 2억 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자금 조달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INAIL로부터 용자 신청 금액의 30% (최대 €155,000/한화 약 6천만 원)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있었다. 그림 IV-5는 대출이자 상환 면제 및 자금조달 지원 정책에 해당되는 조건을 보여준다. 조항 1, 2번은 사업장의 시설장비 개선과 관련된 투자를 가리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설장비 투자금을 저리로 용자해주는 '산재예방시설용자' 사업과 유사한 모습이다. 그러나 조항 4, 5번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이탈리아의 정책금융은 단순한 시설장비에 대한 지원을 넘어 전반적인 산업 환경 및 안전 시스템 개선 역시 대폭 장려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 Esler, Dietmar, et al. "Economic incentives to improv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 review from the European perspective." (2010).

Strand	Project
1	Elimination of equipment without the EC brand, and its replacement by EC-branded equipment (including equipment for lifting and handling goods).
2	Purchase, installation, refurbishment, modification of systems, machinery and equipment in order to increase safety levels, reduce workers' exposure to chemical, physical and biological agents, to eliminate or reduce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from production cycles.
3	Installation of systems to monitor the status of the working environment in order to control workers' exposure to chemical, physical and biological agents.
4	Refurbishment and/or structural modification of the working environment.
5	Implementation of corporate safety management systems.

[그림 IV-5] 이탈리아 (INAIL) 대출이자 상환 면제 신청 조건

● 정부 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

캐나다의 WSIB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속한 정부 산하기관이며 2019년에 'Health and Safety Excellence Program'이라는 **산업안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참여 기업들은 소정의 비용 (\$400~\$950, 한화 45만-99만원 가량)을 지불한 후 안전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및 트레이닝을 받는다. 교육 수료 후 기업 현장에 돌아가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야 하며 안전보건 개선 성과에 따라 **리베이트 (rebate) 형식으로 인센티브**를 받는다. 해당 프로그램은 출시 첫 해에 2000개 넘는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준 기업들은 성과에 맞추어 리베이트를 수령했다.¹³⁾ 프로그램 실행 2년 후 '안전 및 건강 지표 (Health&Safety Index)'로 온타리오 주의 전반적인 산업안전 수준에 대해 측정해 봤을 때 중대재해 사고가 대략 4.2%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다.¹⁴⁾

13) Elizabeth Witmer. "WSIB offering relief, rebates to help make Ontario workplaces safer," *OHS Canada*. Feb. 26, 2021.
<https://www.ohscanada.com/opinions/wsib-offering-relief-rebates-to-help-make-ontario-workplaces-safer/>

14) WSIB 2020 Annual Report에서 제공한 수치.

비슷한 정책금융의 예로 싱가포르의 기업 안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들 수 있다. 싱가포르 노동부에서는 화학물질 위험관리를 확대하기 위해 안전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려는 기업에게 **1년 치의 세액공제**를 미리 제공한다.¹⁵⁾ 기업들은 우선 정부 지정 감독 기관으로부터 대기 중 독성물질 농도 측정을 받고 기준치 (50% PEL 이하)에 부합한 기업들만 노동부 산하의 산업안전보건 부서에 세금공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안전설비 투자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해주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대기기업은 1%,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이다.¹⁶⁾

2) 연기금 및 정책금융 - 국내 사례

● 연기금

국민연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SG 투자에 있어 적극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투자자 중의 하나이다. 2009년부터 UN PRI에 가입한 이후 2016년에 기금운용지침에 책임투자 관련 조항을 마련했으며 2019년에는 책임투자 원칙을 도입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발표한 '2022 책임투자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작년부터 **국내외 채권 및 주식에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하여 대상 자산 군을 확대하였고, 올해는 전체 자산의 50% 이상이 ESG 투자자산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투자와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현재 안전관련 기업 주주방안이 아직 확정 돼 있지 않지만 ESG 평가관련 산업지표의 세부범위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공시 보고서와 미디어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의 산업안전보건 투자 현황에 대해 추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15) 싱가포르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홈페이지 <https://www.mom.gov.sg/>

16) 박효정, “대기업 안전설비 투자만이라도 세액공제 높여야”, 2019.11.07,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PFJMW7Z>



[그림 IV-6] 국민연금의 ESG 평가 프로세스

우선 국민연금이 발표한 '2020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ESG 평가 및 통합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그림 IV-6). 국민연금은 투자대상의 비재무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ESG 평가 체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였으며 국내 상장주식 (KOSPI, KOSDAQ100)에 대해 **매년 2회의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관련 사건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이 기업 및 주주가치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중대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IV-7은 국민연금이 새로 개정한 책임투자 주요원칙과 이행 활동을 보여준다. 해당 원칙은 기본적 수탁자 의무 외에 책임투자 원칙 특히 ESG 관련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 강조되었으며 책임투자 활동을 주기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항목도 포함하고 있다.

책임투자 원칙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원칙1) 장기적·안정적인 수익 증대 목적	(원칙1)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원칙2)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행	(원칙2) 이해상충 방지 정책 제정·공개
(원칙3) 주식, 채권 자산군에 대해 책임투자 이행	(원칙3)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
(원칙4) 투자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 고려	(원칙4)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마련 및 주주활동 수행
(원칙5)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주주활동 이행	(원칙5)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행사내역·사유 공개
(원칙6) 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 시 책임투자 고려	(원칙6) 수탁자 책임 활동 주기적 보고
(원칙7)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공시 개선 유도	(원칙7)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제고
(원칙8) 책임투자 역량 및 전문성 제고	
(원칙9) 책임투자 활동 주기적 보고	

[그림 IV-기] 국민연금 신규 주요 원칙과 이행 활동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ESG 평가지표 중 특히 산업안전을 공식적으로 수록하였으며 ‘안전보건시스템, 산재다발사업장 지정, 산업안전보건 전담 조직’ 등 항목에 대해 중요하게 평가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림 IV-8). 다만 이러한 평가지표는 산업안전 전문기관과 정부 및 규제기관 전문가와의 논의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국민연금 내부의 자체적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산업안전과 책임투자과 관련한 주주관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2016년부터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기업 ‘U’ (2020 연말 보고서에서 기업 이름을 U로 익명 표시)의 경영진에게 비공식적 담화와 편지 등의 방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안전보건 정보 공시를 독촉했다. 해당 기업은 2018년에 공식 사과문을 내놓았으며 산업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관과 함께 기존의 업무 환경과 안전보건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 (S)	인적자원관리 및 인권	근로환경과 인권 관리 수준	채용 정책의 개선
			급여
			인적자원투자
			고용
			가족친화문화(출산·보육)
	산업안전	사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 수준	근속연수
			인권
			노동관행
			안전보건시스템
			산업안전보건 전담 조직
사회 (S)	공정거래	공정거래 및 협력업체 관 리 수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산재다발사업장 지정
			신재다발사업장 지정
			거래대상선정 프로세스
			공정거래자율준수
	제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	제품 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 관리 수준	협력업체 지원 활동
			하도급법 위반 사례
			공정경쟁 저해 행위
			제품안전시스템
			제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
사회 (S)	정보 보호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	제품 관련 안전사고
			소비자 고충처리 채널 운영 여부
			소비자충실경영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인증
	정보 보호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	정보보안 유출사고

[그림 IV-8] 국민연금 최신 개정 ESG 평가 요소

더불어 국민연금은 '스크리닝'을 비롯한 전략을 통해 ESG 투자를 실천해왔다.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하거나 제외시키는 스크리닝 과정을 수립하여 다양한 ESG 우수기업을 투자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위의 'U' 기업을 비롯한 부실기업에게 경고를 가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앞서 언급한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을 새로 도입했다. 해당 전략은 ESG 수준이 좋지 않은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기업의 자발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보건 항목에 대한 스크리닝 기준 및 사례가 아직 다소 불투명하며 또한 탄소중립 정책을 비롯한 ESG 중의 E (환경) 측면에 많이 치중하는 편이어서 산업안전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지만 투자 기준에 대한 비판 및 논쟁도 다소 존재한다. 국민연기금운영본부 자사 홈페이지에서 공시한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국내주식 및 채권 보유현황 (2021년 말 기준)'에 따르면 수록 기업 중 대부분이 대기업이다. 국민연금은 특히 특정 기업 보유 지분을 확대에 민감하기 때문에 유동 주식 수 기준 시가총액이 적은

중소기업 투자에 대해 신중한 편이다.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의 사회책임투자는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자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더욱 건강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ESG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우수한 중소기업**들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한편 국민연금의 스크리닝이 아직 정교화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은수 (2014)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지속가능경영 기업군 중에서 ESG 평가 순위에 따라 투자대상을 선정하기보다는 자체 스크리닝 기준을 사용하여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정책금융

정부 각 부처에서도 ESG 투자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여러 정책금융 제도를 구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7월 13일에 ESG 경영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시 참고할 수 있는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해외 주요 국부펀드, 공공연기금, 대형 운용사 중심으로 ESG 경영 상황을 벤처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할 것을 권하고 있다.¹⁷⁾ 특히 해당 가이드라인은 모든 기업에 동일한 ESG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기업의 성장단계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맞게 권고한 표준을 자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투자 유인 프로세스는 먼저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통해 ESG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제외시킨 후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며 ESG 모니터링과 관리를 포함한 사후 프로세스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으로 국내에서도 ESG 연계 대출상품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IBK기업은행이 함께 출시한 **‘ESG경영 성공지원 대출’**이 출시 4개월 만에 500억 원의 대출 규모를 기록했다.¹⁸⁾ 해

17)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뉴스.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2022.7.13.
<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2810054796>

18) 백지원, “ESG 경영 기업에 대출 금리 인하...ESG 대출 4개월 만에 500억 돌파”, 2022.07.04. 더나은미래. <https://futurechosun.com/archives/66201>

당 상품은 은행이 대출 신청 기업에 스스로 설정한 ESG 목표를 달성하면 최대 1%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대출 지원 정책은 주로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을 포함한 우수기업**에 한하여 개별 기업 당 60억 원의 융자한도를 허용하며 금리는 1.85~2.65%로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한 상태에서 신용위험등급과 담보종류 등에 따라 추가적 금리 차등을 할 수 있다.

3) 민간부문

● 해외사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도 ESG 관련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지속가능인프라기관 'US SIF Foundation'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및 관리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갈수록 ESG 관련 자산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투자뿐만 아니라 주주관여활동을 통해 기업의 ESG 책임 (corporate responsibility)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림 IV-9는 현재 미국 ESG 자산 중 각 분야의 투자 규모 및 성장세를 보여준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간의 ESG 투자액에 대해 추적해 본 결과, **기후환경 및 탄소 배출 (climate change/carbon emissions)**이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분야이며, **임원 보상제도(Executive pay)**와 관련된 ESG 투자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미국에서는 아마존을 비롯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기업들이 기업형 벤처캐피털 (CVC) 투자 과정에 ESG 관련 기준을 적용하려는 추세이다. 아마존은 최근에 'The Climate Pledge Fund'를 구성해 약 20억 달러를 친환경 스타트업 육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¹⁹⁾

19) Amazon Team. "Amazon invests in Green startup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sustainability technologies". 2020.09.17., Amazon.

<https://www.aboutamazon.eu/news/sustainability/amazon-invests-in-green-startups-to-support-the-development-of-sustainability-technologies>

**Top ESG issues considered by money managers
and growth in assets affected**
2018-2020



The shift in investor behavior is far-reaching. Not only are investors turning to ESG assets, but they are placing higher demands on corporate responsibility.

Sources: US SIF Foundation (Nov, 2020)

[그림 IV-9] 미국 ESG 분야 별 투자 규모 및 성장 추세

해당 펀드는 2040년까지 넷제로 (Net-zero)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lobal Optimism이라는 사회적 기업과 공동 설립한 투자 프로그램이며 자체 ESG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현재 CarbonCure Technologies, Pachama, Redwood Materials 등 기업을 포함한 총 5 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했으며, 향후 펀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ESG 투자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더욱 많은 벤처캐피탈에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해외에서 환경, 기업지배구조와 같은 분야에 민간부분의 ESG투자가 집중되는 것은 해외 기업들의 당면 주요 경영사안을 반영한 것으로 한국 기업의 ESG 투자가 반드시 해당 분야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국내에서도 적절한 정부 정책의 개입이 있으면 ESG 투자를 통한 산업안전보건 투자 활성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사례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의 일부 자산운용사 및 대기업들도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은 기존과 달리 단순히 재무적으로 성장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ESG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지속가능한 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있다. 예를 들면 SK텔레콤은 자사 ESG 경영을 추진하는 동시에 ESG 스타트업 육성 과정에도 적극 참여했다. 작년에 'ESG 코리아 얼라이언스'를 결성하여 최종으로 선정된 14개의 스타트업에게 100억 이상의 투자 지원을 제공했다.²⁰⁾ 'ESG 얼라이언스'는 재활용, 장애인 포용,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ESG 스타트업에 서비스 개발 및 시장 진입 등 측면에서 돕는 프로그램이다. 향후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도 이러한 ESG 펀드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V-10] SK텔레콤X카카오 공동 ESG 펀드 운영 프로세스

20) 양대규. “SKT 지원 ‘ESG스타트업’ 6곳 100억 투자 유치.” 2022.02.23. sbiz.
<http://www.sbiz.news/news/articleView.html?idxno=21148>

8. 주요 주주관여 활동 사례

SK머티리얼즈 (환경 및 사회 관련)

영주 공장 가스 누출 사고		ESG F	
주주활동일자	2018-08-17	답변회신일자	2018-10-15
주주활동 유형	서면 질의서 발송		
질의 내용	- 가스 누출 사고 관련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는데,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가? - 지역 경제에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 것인지?		
기업측 답변	- 회사는 4/13 누출사고 이후 시청, 소방서, 환경청, 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및 인근 지역 주민대표, 시민단체 관계자와 합동으로 'SK머티리얼즈 화학사고 관련 안전대책단'을 구성하여 안전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였음. - 이 결과로 CCTV추가 설치, 가스감지기 추가 설치, 핫라인 추가 설치,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행동요령 책자배포 등을 완료했고, 비상방재차량 추가 구매, 방음벽 연장 설치를 현재 진행 중임. - 사고 발생시설에 대한 유관기관의 사고조사 결과와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WF6 1공장에 대한 안전개선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를 유관기관 및 주민대표/시민단체 관계자들에		

수탁자 책임 활동 연례보고서

- 6 -



[그림 IV-11] 메리츠자산운용의 주주관여활동 사례

ESG 스타트업 투자펀드를 조성한 기업 사례도 있었다.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올해 3월 29일에 400억 원 규모의 ESG 스타트업 펀드를 구축하였고 펀드 운영사인 KB인베스트먼트와 함께 각각 100억 원을 출자했다.²¹⁾ 이 펀드는 탄소 절감 등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육성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에는 SK텔레콤이 카카오와 함께 ICT 업계 최초로 200억 원의 ESG 펀드를 만들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서비스를 출시한 스타트업을 자금 선정 대상으로 삼았다. 대표적인 예시로 청각장애인이 운영하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코엑터스'와 시각장애이용 점자 콘텐츠를 제공하는 '센시'에게 각각 30억 원을 투자했다 (그림 IV-10)

21) 최다운. “대기업, ESG 스타트업 ‘키다리 아저씨’로”. 2022.04.11.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2041058191>

한 편으로 **민간 자산운용사**도 ESG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유사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2018년 8월 메리츠자산운용은 SK머티리얼즈에 서면 질의서를 발송하여 4월에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의 재발 방지 계획과 보상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그림 IV-11)²²⁾. 이러한 메리츠자산운용의 **주주관여활동**에 대한 대응으로, SK머티리얼즈도 '화학사고 관련 안전대책단'을 구성하면서 설비안전 개선 및 공장 안전개선 작업을 수행했다. 안다자산운용은 작년에 네이버 경영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한 직원의 사건을 시작으로, 직장 갑질 문화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네이버는 직원들을 위한 정신건강과 안전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직원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섯다운제 시스템 등의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그림 IV-12). 그 외에 삼성자산운용, NH농협금융지주를 비롯한 투자자들도 석탄 채굴 사업에 대한 투자 배제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그린 임팩트 금융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2) https://www.meritzam.com/wp-content/uploads/2019/02/sutakja-chaekim-hwaldong-yeonlyebokoseo_FY2018-ver2.pdf

경향신문

착한 기업에 투자? 환경·노동 문제에 목소리 내는 자산운용사

박상영 기자 syipark@kyunghyang.com

2022-08-01 13:53 입력 | 2022-08-01 16:08 수정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네이버 제공.

지난해 안다자산운용은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자 회사 측에 '직장 갑질문화'의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네이버는 소수 창립 멤버에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는 구조조정과 함께 직원들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 시 회사 시스템 접속을 막는 '셋다운제'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림 IV-12] 안다 자산운용의 네이버에 대한 주주관여활동

삼성엔지니어링, 스마트안전 스타트업에 40억원 투자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 전문기업 GSIL 지분 취득

2022년 05월 24일 (화) 오전 09시 33분 35초

김종성기자 stare@inews24.com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삼성엔지니어링이 스마트 안전 전문 스타트업에 지분 투자를 하고 안전 경영에 속도를 낸다.



삼성엔지니어링 전략금융팀장 강규연 부사장(왼쪽)과 GSIL 이정우 대표가 23일 본사인 상일동 GEC에서 투자 계약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은 24일 스마트 안전 전문 기업 GSIL에 지분 취득과 사업화 등 4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회사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와 안전 기술 확보를 위해 지분투자를 결정했다. GSIL은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스마트 안전 플랫폼과 스마트 안전 장비, DT(Digital Transformation) 기술 기반의 위험 예측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해부터 안전관리 플랫폼 공동 개발을 위해 협업해 왔고, 이번 지분 투자로 전략적 협업 체계를 강화하게 됐다.

두 회사는 스마트 안전 공동사업화에도 나선다. 스마트 안전 시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안전 법규 강화 등 사회적 안전 강화 요구에 따라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 양사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안전 관리 플랫폼과 스마트 안전 장비 등을 구축형으로 확장,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투자로 양사의 안전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업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라며 "삼성엔지니어링의 글로벌 안전 관리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려 안전경영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림 IV-13] 민간기업의 산업안전 스타트업 투자 사례 - 삼성엔지니어링

산업안전보건과 직접적 관련된 기업의 직접 투자 사례가 기타 ESG 분야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올해 5월 **스마트 안전 전문 스타트업 기업 GSIL** (지에스아이엘)에 지분취득과 사업 지원을 하기 위해 40억 원을 투자했다 (그림 IV-13).²³⁾ GSIL은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스마트 안전 플랫폼과 스마트 안전 장비 등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안전통합플랫폼 ‘BE-IT (비잇)’을 개발하여 기존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건설 현장의 작업과 안전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를 하려고 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또한 GSIL과 안전 공동사업화에 나서려고 준비 중이다. 양사는 지난해부터 안전관리 플랫폼 공동 개발을 위해 협업해 왔고, IoT 기반의 스마트안전 장비를 구독형으로 확장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6월 27일 국내 자산 운용사 중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선포식을 개최하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책임경영환경 조성을 선포했다 (그림 IV-14).²⁴⁾ 선포 내용 중 기업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고, 안전보건체제를 구축하며 정기적으로 유해위험정도를 자체 평가해 위험정도에 따른 **예방투자순위**를 결정하는 등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산업재해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조치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안전보건 활동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ESG 경영과 안전보건경영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업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3) 김종성. “삼성엔지니어링, 스마트안전 스타트업에 40억원 투자”. 2022.05.24.
<https://www.inews24.com/view/1483377>

24) 김민아. “미래에셋자산운용, 안전보건경영 선포식 진행”, 2022.06.27., 뉴데일리경제.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2/06/27/2022062700174.html>

뉴데일리경제

미래에셋자산운용, 안전보건경영 선포식 진행

국내 운용사 최초

기사입력 2022-06-27 15:57:16 | 최종수정 2022-06-27 15:59:20 | 김민아 기자 | kma@newdailybiz.co.kr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7일 국내 운용사 중 최초로 '안전보건경영'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최창훈 대표이사와 이병성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19명이 참석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책임경영환경 조성을 선포했다.

안전보건경영이란 기업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고, 안전보건체제를 구축하며 정기적으로 유해위험정도를 자체 평가해 위험정도에 따른 예방투자순위를 결정하는 등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이번 선포식에선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선언하고 회사 안전보건경영 주요 과제 및 방향을 공유해 안전을 경영 핵심가치 중 하나로 선정함과 동시에 선두적인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다짐했다.

또한 단순한 안전보건활동을 넘어 ESG 경영 척도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안전보건활동에 지속적인 투자를 선언했다.

이 회사는 임직원 및 근로자 안전보건뿐만 아니라 운용 중인 부동산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잠재적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등 운용과 시너지를 낼 방침이다.

[그림 IV-14] 민간투자자의 안전보건 경영과 투자 사례 - 미래에셋

V. ESG 경영과 산업안전보건생태계



V. ESG 경영과 산업안전보건생태계

1. 산업생태계와 산업안전보건

국내에서 산업안전보건 사고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청 업체인 대기업과 하청 업체인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실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아래 그림 V-1은 국내 산업재해는 요양재해자 수 기준 72.4%, 사망자 수 기준 75.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의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구를 위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 기업 실무자는 원청업체 직원이 “인력이 필요한 작업에는 우리 직원, 사고가 발생할 때는 남의 직원”이라고 대답하고 원청 업체의 필요에 의해 하청 업체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모습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대기업이 0에 가까운 사고율을 기록할 수 있는 배경에 대해 설명해 준다. 예로 2022년 광주에서 발생한 I-Park 붕괴사고는 평소 “무재해 작업장”을 강조하던 현대산업개발의 한국 건설업 산업안전관리의 큰 맹점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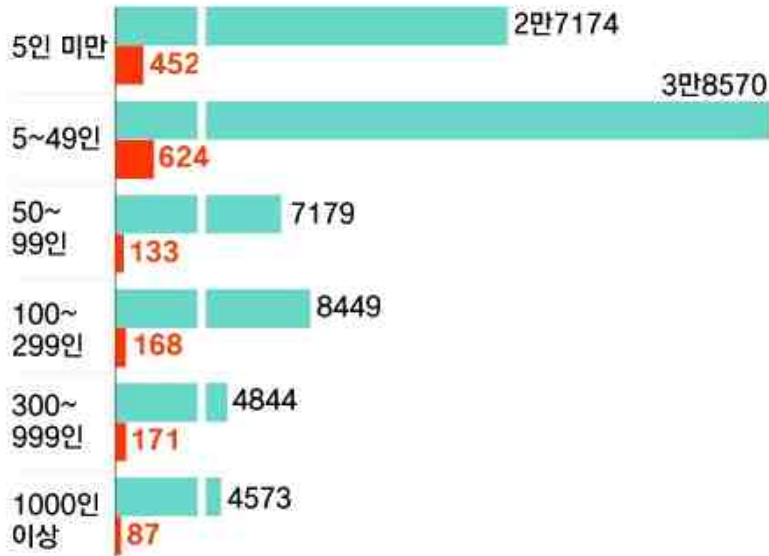
국내에서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을 불문하고 원청 업체인 대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하청 기업들이 연결되어 있어 이를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산업생태계 구성원 각각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투자와 현황 개선에 대한 의지는 매우 다르다. 원청 대기업은 해외 기관 투자자의 직접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ESG 개선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준수해야 하고, 이러한 준비가 미비한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다. 반면, 국내 산업생태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청 중소기업 혹은 영세기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 투자와 개선노력이 경영진의 의지에만 달려있거나, 산업안전 전문가와 같은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여 ESG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업장 규모별 요양재해자·사망자 수

단위: 명 · 2021년 1~9월 기준

※요양재해자=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부상자·질병이환자

● 요양재해자 ● 사망자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The JoongAng

사업장 규모별 요양재해자·사망자 수,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림 V-1] 사업장 규모별 요양재해자, 사망자 수, 2021년

2. 국내 산업생태계 원청-하청 기업 사례

산업생태계 내에서 제조업의 위험 작업이나 서비스업의 감정 노동 등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중소기업임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원이나 역량이 부족한 하청 업체들이 산업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청 대기업 업체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정부 및 규제기

관의 대책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원청-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지수 개발 및 활용 등의 정책으로 대변된다. 아래에서는 국내 산업생태계에서 1)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관리”라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온 전통적 산업생태계 산업안전 보건 관리와 2) ESG 경영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그리고 3) 대기업의 산업안전 보건관리와 ESG 경영에 대한 하청업체 중소기업의 태도를 각각 호텔 서비스업 대기업 A사, 반도체 제조업 대기업 B사, 건설업 하청 중소기업 C사의 경영자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안전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안전플랫폼 관련 스타트업 기업은 D사 대표이사와의 인터뷰는 산업생태계내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보여준다.

1) 서비스 산업 원청 대기업 A사 안전관리자 인터뷰

첫 번째 인터뷰는 국내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협업 과정에서 보다 전통적 산업안전보건 관리의 현실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Safety in ESG를 산업생태계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관리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어온 기존 관리체계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안전관리 시스템의 한계와 특징을 통해 Safety in ESG의 타당성과 이의 바람직한 도입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 대상자는 국내 호텔 서비스 산업 대기업 A사의 안전관리자이다. A사 안전관리자는 인천국제공항 국책 사업의 총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적이 있고,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이다. 또한 2004년부터 관련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국내 산업생태계를 이해하고 산업안전보건의 현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A사 안전관리자 인터뷰를 통해 원청 업체인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통적인 산업안전관리**의 체계와 현실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 A사 협업 상황

A사는 국내 호텔 서비스업 기업으로 호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분야 별로 계약을 맺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전에는 700명 직원 중 300명이 협력업체 인원으로, 협업을 하지 않고는 A사 업무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A사 안전관리자는 “사실 협력업체의 도움 없이는 A사 운영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며 기업 운영에 하청업체와의 협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을 강조하였다. 협업은 호텔 내 청소, 조리, 기물 관리 및 행사장 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다.

● A사 산업안전협업 관리 시스템 - 협의체 회의, 안전 평가 시스템

A사는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해 안전사고를 관리하고 재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 첫 번째 시스템은 **협의체 회의**이다. A사는 매월 원청-하청업체 책임자 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회의를 진행한다. 협의체 회의에서는 개정된 정부 제도와 A사 추구 방침 및 목표를 공유하며, 주요 작업에 대한 위험 요인을 함께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추적 관리도 진행한다.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산업 재해 발생 부분과 원인을 공유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협력사 안전 평가 시스템**으로 A사가 계약을 맺은 협력사를 관리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다. A사는 전 협력사를 대상으로 **산업 재해율**을 자체 평가하여 계약 체결 및 연장에 대해 심사한다. A사는 협력사 입찰 단계에서 내부 방침에 의해 협업할 수 있는 원격 수급 업체를 선정한 이후에 6개월에 한 번 있는 정기평가를 별도로 진행한다. 협력사의 **산업 재해율** 뿐만 아니라 **사고율, 안전관리시스템, A사 정책 부합 여부** 등을 파악해 일정 점수 미달 시에 계약 연장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 A사 산업안전보건 관리 교육

A사는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대 재해발표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교육을 강화한 것이다. 반면 협력업체 근로자

를 대상으로는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데, 이는 협력업체는 도급의 대상이라 직접적 교육을 할 의무나 권한이 A사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은 매월 진행하는 협의체 회의에서 대표자들과 모임을 가지는 것과 위험성 평가 교육을 통해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전부이다.

● A사 사고와 대응 사례

최근 A사에서 2022년 손가락 연좌 1건과 2021년 고관절 골절 상 1건이 협력업체 직원에게 발생하여 산재사고로 분류되었다. 2021년에 발생한 여성 고령자 직원의 고관절 골절 상 안전사고 발생 후, A사는 **본사 소유의 시설물에 안전비용을 투자하여 산업 재해에 대응**하였다. A사의 건물은 2003년도에 건설된 것으로 작업장과 장비 등이 굉장히 낙후되었고, 대형식기 세척장도 낡은 상태로 감전, 화상, 끼임 등의 위험 뿐만 아니라 유지분의 퇴적으로 인해 노후화된 바닥에 미끄러져 골절 사고의 위험 요인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식기 세척장 업무 협력업체는 고령자 직원의 비중이 높아 안전 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았기 때문이다. A사는 안전사고의 배경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다. A사는 가장 낙후된 식기 세척장 2개소를 선정하여 2022년 상반기에 바닥 코팅 작업을 진행하고 장비도 새로이 교체하였다. 해당 사례는 A사가 본사 소유 시설물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과 만족도까지 높인 적절한 개선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인터뷰 대상자 제언 - 협력업체 사업주의 산업안전에 대한 의지 제고

A사 인터뷰 대상자는 **협력업체 사업주의 태도와 의지**가 산업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A사가 진행한 협력업체 자체 조사 결과는 협력업체들이 안전 관련 업무 책임자, 업무 유형 및 진행 방법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협력업체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22년 A사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내 가장 중점이 된 업무는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체계 마련을 위한 지원이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하여 위험성 평가를 대안으로 권유하였다. 위험성 평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산업 현장 내 위험 요인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A사 인터뷰 대상자는 한 업체를 예로 들며 업체의 규모보다 **사업주의 마인드와 태도**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소개하였다. 해당 위탁업체는 소규모지만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며 이것이 협력업체 전 직원의 업무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A사 안전관리자는 협력업체 경영자와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등에 관심이 있고 비용을 투자할 의지가 있어야만 협력업체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뀐다고 재강조하며, 직원들을 끌고 갈 사업주의 의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관리자는 노동부 주관의 포럼에 참여하여 이에 대해 건의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해당 사안이 시급한 문제라고 하였다.

A사 안전관리자는 협력업체 사업주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첫 째는 **사업주의 의식 강화 “교육”**이다. 현재까지 성공한 정책 사례인 음주 문화 혹은 흡연 관련 캠페인을 예로 들며, 장기적으로 진행된 교육이 의식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 교육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체계적인 사업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체계적인 “조직”**이다. 그는 모든 협력업체에 안전 및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식과 조직이 적절하게 자리 잡아야만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정책에 부합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A사 안전관리자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시스템 하에서 안전보건 의식이 정착하기 어려운 원인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 정책과 법에 존재하는 사각지대**가 안전보건 의식 정착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모든 의무에서 면제가 되는데, 이러

한 규제를 악용하는 사업장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영세한 기업이 주로 작은 규모의 사업에 참여하는 실정을 고려하였을 때, 특정 인원수에 따라 면제권을 부여하는 정책이 한계점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영세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제시하였다. 안전관리자 선임제도에 따르면 기업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A사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 선임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극 도입하여 실제 산업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관리 및 감독,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 존재하기에 **협력업체 스스로 산업안전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연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지도 기관 (예, 대한안전산업협회)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하였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전문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일정 주기마다 중소기업에 방문해 컨설팅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역량제고를 지원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A사 안전관리자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지만 전문기관의 방문 주기가 너무 길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컨설턴트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면담을 통해 정책 및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해 안내해주지만, 방문 시간이 짧기에 현장 책임자를 만나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컨설턴트 중에서 형식적인 리포트만 작성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며 산업안전보건 전문시장의 한계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2) 제조업 대기업 B사 ESG 및 안전보건 담당자 인터뷰

두 번째 인터뷰는 국내 대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ESG 경영과의 연계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특히 Safety in ESG에 대한 원청 업체 대기업 담당자의 의견을 수집함으로써 산업생태계 내 상생 사례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B사는 국내 반도체 제조업 대기업으로 ESG경영과 사회적 가치를 다방면으로 실현하는 모기업 소속이다. 특히 사회적 가치 사업에 거대한 자본금을 투자할 여력이 있으며 ESG와 상생 및 협력 분야를 선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기업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B사는 협업 관계에 있는 하청 기업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에도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다. B사의 인터뷰에는 안전보건 팀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ESG 전담 팀 관계자도 함께 참가하였다. ESG 전담 팀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이며, 안전보건 팀은 B사 전체 기업과 제조작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사안에 대해 관리 및 대응하는 부서이다. 두 팀은 B사 내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듯 보였다.

● B사 협업 상황

B사는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 B사 관계자는 협업에 대해 “거의 모든 업무와 관련해서 계약을 맺고 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부터 회사 내 자잘한 업무까지 협력업체 직원들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주요 생산품을 만들기 위한 장비와 설비 재료를 위주로 도급 계약을 한다고 밝혔다. 생산 업무 이외의 공사, 대관, 전기, 안전, 장비 보수 및 세정 업무에 대해서 협업하고 있으며 회사 설비 및 시설 유지를 위한 협력업체 직원도 B사 내에 상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B사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안전모를 착용하는 인력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협력업체와 B사 직원이 8:2의 비율을 기록하며 80% 가량의 인력이 협력업체 소속이라고 밝혀 협력업체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B사 산업안전협업 관리 시스템 - 적격수급업체 선정, 정기 평가 제도

산업 재해에 대한 안전관리 부서의 대응 방법에 대해 B사 관계자는 “B사는 모든 결정을 법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국내 대기업이기 때문에 평가를 정말 꼼꼼하게 한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협력업체를 신중하게 고르지 않고서는 B사의 입지와 결과물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B사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정책에 따라 협력사의 안전 및 보건을 꾸준히 고려한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B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격수급업체** 조항에 따라 도급업체와 계약을 할 때 여러 요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에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산업재해 이력, 안전보고관리 체계, 유연성 평가, 안전 조건 평가, 안전 교육 등을 요인으로 하여 후보 업체를 평가하는 것이다. B사 안전관리 관계자는 “적격수급업체 과정에서 안전, 보건, 환경 위험 요인이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협력사로 선정할 수가 없다. 법을 준수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근로기준법과 환경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태도는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 문화 구축** 등은 내용만으로는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B사의 적격수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안전보건 분야에 인력을 투자하는 기업에 가점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계약 후에는 안전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정기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기 평가 제도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계약 중간에 계약을 중단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협력사에 일종의 패널티를 부과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 B사 ESG 부서와 안전보건 부서의 협업

협력사 대상의 적격업체 평가와 정기 평가 시행 시, B사의 ESG 담당부서와 안전보건 담당부서의 업무가 어떤 측면에서 상이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ESG 부서 관계자는 “ESG와 안전보건을 분리해서 보면 안 된다. ESG 관련 업무를 광범위하게 보면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다. B사는 오래 전부터 산업 재해와 안전보건 관리를 중요한 요인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ESG의 사회 측면에 안전이 강조되는 것이지 B사가 처음으로 안전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즉, ESG 업무가 지속 가능한 공급망에 초점을 둔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충족하여 안전보건을 추구하는 것은 안전보건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라고 하였다.

● B사 ESG 사회적 가치 프로그램 - SHE컨설팅

B사는 **협력사의 안전, 보건, 환경** (Safety, Health, Environment, 이하 SHE) 분야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B사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각 업체의 안전, 보건, 환경 분야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B사는 사업장 안에서는 안전, 보건, 환경 관계법령 및 회사 정책 등을 통해 직접적인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하지만, 사외에 위치한 협력사는 회사의 규모와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편차가 존재함을 파악하였다. 동반성장과 협력을 위해서는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의 역량 편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사의 자본과 노하우로 컨설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V-2] SHE컨설팅 세부 프로그램

그림 V-2)¹⁾는 ‘SHE컨설팅’ 사업의 세부 내용이다. SHE컨설팅 세부 프로그램에는 SHE컨설팅, 관리자 역량 교육, 집중 컨설팅 및 산업보건관리 프로그램이 있다. **SHE컨설팅**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법령, 발견 사항과 사업장 애로사항에 대해 진단하는 프로그램이다. **관리자 역량 교육**은 경영자 리더십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SHE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집중 컨설팅**은 고 위험 사업장에 대해 심층 기술지원을 하고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자 교육과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산업보건관리 프로그램**은 SHE컨설팅과 외부 전문기관의 전문 인력이 협력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B사 컨설팅 프로그램의 특징은 **본사의 기술과 경영 역량을 협력사에 공유**하기 위해 시행되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규제처럼 지침 위반할 시에 불이익을 주기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맞춤형 해결 방안을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산업보건을 지원한다. 특히 사업장 점검과 협력사의 안전, 보건, 환경 관리자 교육을 통해 해당 측면을 개선한다.

B사의 컨설팅 프로그램은 결국 협력사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원청-하청 관계의 리스크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며 궁극적으로 B사가 속한 반도체 생태계의 강화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B사는 SHE컨설팅의 궁극적인 목표로 당사의 모든 협력사 사업장이 해당 프로그램에 한 번 이상 참여하는 것과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향상시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 (<https://news.skhyunix.co.kr/post/she-consulting-industrial-health-management-program>)



[그림 V-3] SHE컨설팅 진행 프로세스

그림 V-3은 SHE컨설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협력사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B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컨설팅 여부가 결정된다. 컨설팅의 가장 우선 단계는 **협력사 자체평가**이다. 이 단계는 관계법령의 주요 요구사항을 협력사 자체적으로 사전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사업장 방문 진단** 단계에는 B사의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협력사의 사업장을 방문함으로써 컨설팅이 진행되며, 협력사가 사전에 작성한 평가 내용을 토대로 현장을 진단하여 개선 방안을 제공한다. 만일 컨설팅 프로그램에 신청한 협력사가 소규모 사업장이거나 고 위험 사업장인 것이 확인되면 별도 대상으로 구분되어 집중 컨설팅과 산업보건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집중 컨설팅**이란 일반적인 컨설팅 내용보다 더욱 심층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로 별도로 선정된 협력사에게 1:1 전문가 지도 기회,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 및 작업환경 개선비용, 사후유지관리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관리자 역량 교육** 단계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한 B사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안전, 보건, 환경과 관련된 핵심 내용과 중요성을 전한다. 컨설팅 과정 이후에는 협력사에 진단 결과와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 보고서를 전달하며, 결과에 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둔 협력사에는 **보상**을 주는 보고서 발송 및 포상 단계가 이루어진다.

SHE컨설팅의 산업보건관리 프로그램은 B사 외의 재단법인 주관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직업병 및 기초질환 건강상담’, ‘뇌·심혈관 질환 예방 프로그램’,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작업환경 관리 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히 **작업환경 관리 프로그램**은 일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제조업 산업이 가지는 위험 요인을 신입사원에 안내하기 위한 **유해요인 인식도 평가**도 이뤄진다. 이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인자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과 예방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이다. 또한 **밀착도 검사 시스템**을 통해 사업장에서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에 대한 수치를 확인하고 **개인보호구 밀착도 교육**에서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다. **실내 공기 질 평가**에서는 사무실 사업장의 공기 질을 측정하고 향상시키는 방안과 **인간공학 적 사무환경평가**에서 VDT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도 받는다.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재해 예방 및 평가 방법을 지도함으로써 직원의 보건과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B사 안전보건 부서 관계자는 SHE컨설팅을 안전보건과 ESG 분야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SHE컨설팅은 B사의 바운더리 밖에 있는 즉 공급망 외부의 업체도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책임 의무가 전혀 없는 기업을 B사의 비용을 들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안전보건 혹은 인권 관련 세미나와 발표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인정받았다”라 덧붙이

며, 대기업으로서 산업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B사의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B사 ESG 부서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간접적인 교육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ESG 부서 관계자는 “협력업체 중 ESG 개념이 사내에 정착하지 않아 이를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곳이 존재한다. 그러나 협력사는 ESG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평가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대답하며 **산업생태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ESG와 안전보건 개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하여 “SHE컨설팅 프로그램의 목적에는 협력업체에 ESG를 알리기 위해 방문하는 것도 있다. 방문한 사업장을 평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무자가 ESG 평가 지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응답하며 ESG에 관한 국내 다수의 영세 기업의 현실과 B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 B사 협력사 행동규범

B사는 협력업체가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포털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²⁾. B사 글로벌 통합구매포탈에는 구매규정과 정책을 소개하고 있으며 **협력사 행동 규범**에는 “B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는 하기와 같은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Global 기업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당사 및 당사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2) (<https://gpis.skhyun.com/eportalPage.do?page=es-pc-bp-conduct&clazz=1>)

노동권 및 인권

협력사는 고용 관행에 있어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 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한다. 또한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지법규에 정해진 근로 연령, 근로시간, 임금,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 등을 준수해야 한다.

보건 안전

협력사는 산업안전을 위하여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이에따른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산업위생을 위하여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위험 인자에 대하여 노출을 피해야 한다. 또한 비상대책과 대응절차를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산업재해와 직업별을 관리할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한다. 직원에게는 모든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 제공하여야 하며 육체 노동위험을 사전 통제해야 하며 생산설비나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환경

협력사는 환경 인허가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사의 환경/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고형 폐기물 및 폐수, 대기오염 물질 등은 관련법을 준수,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 사용 절감에 힘써야 하며, 제품 함유 물질 규제 관련법 및 규정, 고객 요구사항 일체를 준수하여야 한다.

경영 시스템

협력사는 경영 시스템을 채택 및 구축하여 관련법, 규정, 요구사항 등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내용으로는 자율준수 의지표명과 경영 책임 명확화, 관련법과 규정, 고객 요구사항의 인식 및 모니터링, 회사 운영과 관련된 윤리부문의 리스크 평가 및 관리, 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관련자 훈련 프로그램 운영, 당사의 거래방침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자가평가 등이 있다.

합법적 원자재 채굴

협력사는 공급망 전체에 유통되는 출처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그들의 제품이 분쟁이슈가 존재하는 광물이거나, 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 재정적인 지원 또는 도움을 주는 국가인 콩고나 인접국가(수단, 우간다, 브룬디, 탄자니아, 잠비아, 앙골라,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취득되지 않았음을 보증/관리하여야 한다.

윤리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는 거래 관계에 있어 자유경쟁 추구, 모든 영업활동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하며, 당사의 공정거래준수제도를 통하여 모든 거래가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또한 협력사와의 상생도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수행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거래가 지속도리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는 상기 내용을 준수 및 준수여부를 평가 받을 의무가 있으며, 본 내용은 Global 거래환경에 맞추어 변경될 수 있다.

[그림 V-4] B사 협력사 행동규범

행동 규범에는 노동권 및 인권, 보건 안전, 환경, 경영 시스템, 합법적 원자재 채굴, 윤리가 있다. B사는 당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협력업체가 행동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 여부에 대해 평가 받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권 및 인권 행동규범은 협력사가 고용 관행에 있어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운 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며, 근로자에 대한 대우가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모든 근로의 자발성을 추구하고, 현지법규에 정해진 근로 연령, 근로시간, 임금,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 등을 준수해야 한다.

● B사 산업 재해 대응 시스템 및 사례 - 안전 및 사고 전담 조직, 사고조사위원회

B사의 협력사 사업장 관리 및 감독에도 불구하고 산업 재해가 발생한다면 B사 관계자는 즉시 조치를 진행하여 사고를 수습한다. B사 안전관리팀 관계자는 사내에 별도로 존재하는 **안전 관련 부서와 사고 전담 조직**이 안전사고에 즉각 대처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열어 사고의 경위와 원인 및 피해 범위에 대해 밝혀내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였다. 재발 방지 대책은 사고의 발생뿐만 아니라 유사 작업 내 사고의 재발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마련하고 법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재해자에 대한 보상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B사 안전관리팀 관계자는 사내에 기록된 안전사고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사고 비율을 분석해보면 투자 가능한 자원이 부족한 업체 기준으로 사고가 많이 난다. 단순히 투자할 자금이 없어서 사고에 대처할 역량이 떨어지는 기업 이외에도 작업량이 현저하게 많은 협력업체에 산업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회사가 보유한 자원과 안전 재해가 발생할 확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자는 “그러나 애초에 B사는 투자 가능 자원이 부족한 협력업체와 계약을 많이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이며 협력사와 초기 계약을 이행하는 기준이 분명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B사가 적격업체 평가를 통해 협력사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만 사업장의 전반적인 규모와 작업에 따라 사고 발생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협력 업체에 B사가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주거나 노하우와 기술을 알려주는 간접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별 규모와 사고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주장하였다.

● 인터뷰 대상자 제언 - 협력업체 내 안전보건 문화와 경영자 의지

B사는 협력사에 발생하는 사고를 본사 사업장 내부와 외부로 분류한다. **협업 사업장 내부와 원청 업체 및 하청 업체 개별 사업장**을 B사가 관리 및 감독하는 것이다. 하청 업체의 개별 사업장 사고를 B사가 관리하는 것은 하청 업체가 어떤 사업장에서 작업하는지와 무관하게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B사 안전보건 관계자는 당사의 사고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특징을 지적하며 산업 재해가 원청 업체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B사 ESG 부서 관계자는 인식 차이로 인해 영세 기업이 ESG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과도하게 이상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다. ESG가 물건을 많이 파는 것에 관한 것 만이라고 생각해서 이윤 이외의 요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ESG 사업은 불필요한 분야에 비용을 쓰는 것이자 사업에 필요 없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며 ESG 경영이 산업생태계 구성원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 관행과 문화** 때문에 ESG 사업이 도입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소기업 구성원들은 지금까지 ESG라는 개념 없이도 아무런 문제없이 사업을 잘해왔기 때문에 필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대답하였다. 규모가 있는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은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사업이 유지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ESG가 이윤추구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업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B사 안전 관리팀 관계자는 사업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업체가 주체가 되어 문제 해결에 힘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로,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작업자의 인식과 사내 문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B사는 국내 대기업으로 안전보건 허가제도 및 각종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협력업체와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안전보건 사고는 작업자의 건강 상태나 의식에 의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전 불감증을 경계하고 건강한 일자리 문화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협력업체의 경영자와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태가 좌우된다고 주장하였다.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의지와 안전보건 문화 및 사내 규정은 모두 경영자와 사업자의 결정 하에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안전보건 문화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 시간, 노력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영자의 관심이 결국 안전한 일자리와 직결된다고 밝혔다. 이에 협력사 구성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내 문화와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안전보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였다.

● 인터뷰 대상자 제언 - 산업안전보건 ESG 경영 도입을 위한 방안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B사 관계자에게 ESG 경영 (safety in ESG) 이 산업생태계를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줄이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질문하였다. B사 ESG 부서 관계자는 투자기관이나 평가기관이 기업 고유의 기준이나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기업의 산재율만 평가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에 Safety in ESG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 **기업의 정책과 기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산업재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여 **실제 사고 데이터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사 ESG 부서 관계자는 대기업의 공급망 외에 있는 영세한 사업장 내 사고율이 높은 현실도 언급하였다. “동네 상가에서 안전모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작업 환경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계약은 주로 개인이 발주한 사건으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진행된다. 이런 영세한 사업 내에서 사고율이 가장 높다. 국내 산업 재해율을 낮추려면 대기업

이 참여하는 사업보다 **개인이 발주하는 계약을 중점으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개인이 발주한 계약 현장의 사고 데이터에 집중하여 Safety in ESG 이행에 필요한 자원과 행동을 도출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B사 ESG 부서 관계자는 **정부 기관의 역할이 개선되어야 Safety in ESG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B사가 중소기업에 협력사 행동규범 노동권 및 인권과 관련해서 점검해보면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노동부나 관공서에서 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규범에 언급된 사항들을 따라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공정안전관리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늘어난 중소기업의 수를 감독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처리할 역량이 부족해서 그 부담을 대기업에 돌리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 인력 충원**이 필요해 보이며 정부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하였다.

다른 B사 ESG 부서 관계자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는 “국내 대기업 사업장을 방문해보면 안전 기준이 엄격하다. 그러나 주로 고착화된 문화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위험성 평가서를 하드코피해서 사업장에 꽂아 두는 것이 있다. 또한 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관련 문서를 작업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라고 대답하였다. 즉 보여주기 식의 시스템과 형식적인 체계를 바꿔야 Safety in ESG와 안전보건 문화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B사 안전관리 부서 관계자는 협업 관계에서 원청 기업에 비교했을 때 하청 기업인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챙기기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보상이 아닌 **부정적인 인센티브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B사 ESG 부서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표자의 인식 제고에 계약 취소, 처벌과 페널티가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응답하였다. 현재까지 대기업은 긍정적인 인센티브로 상이나 보너스 등을 중소기업에 지급하였다. 그는 “언제까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어르고 달래서 ESG 경영을 유도하

고 안전보건에 유념하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응답하며 협력사를 움직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정적인 인센티브를 지목하였다. 정부의 입장과 달리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과 ESG 사업을 대기업의 자원으로 개편하려는 시도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3) 건설업 하청 중소기업 C사 고위 임원, 가족기업 2세 인터뷰

세 번째 인터뷰는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업 관계에서 중소 하청기업이 안전보건과 Safety in ESG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앞의 인터뷰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반영한 것으로, 하청 중소기업이 정부와 원청 기업이 요구하는 정책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중소기업 고위 임원을 인터뷰함으로써 하청 회사가 협업 과정에서 안전보건과 Safety in ESG를 이해하는 태도와 실천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C사는 국내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총 60명의 직원이 정규직으로 등록되어 있다. 인터뷰 대상자는 C사의 전무이사로 가족기업의 2세이다. C사의 전문이사는 계약을 맺은 대기업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협의체 회의나 정기 교육의 대상으로 원청-하청 기업 협업 시스템을 파악하고 있다. 이에 하청 회사의 관점에서 Safety in ESG와 안전보건 사업이 수용되는 사례를 수집할 수 있다.

● C사 협업 상황

C사는 국내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국내 대기업 건설업체의 하청 계약을 받아서 작업한다. 주요 계약사는 롯데건설, 현대건설, DL건설, 포스코,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으로 국내 대기업 건설업체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 C사 대상 대기업 ESG 프로그램 - 법무법인 팀 컨설팅, ESG 등급 심사

C사 전문이사는 대기업의 ESG 프로그램은 투자 가능한 자원이 있고 ESG 전담 부서와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대기업이 협력사에 긍정적인 인센티브로 보조금 제공과 적격업체 자격을 부여하

고 부정적인 인센티브로 계약 불이행과 적격업체 제외 등을 이행함으로써 공급망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C사가 대기업의 협력사로서 수혜를 받는 프로그램은 다수 존재한다.

법무법인 팀 컨설팅은 원청 기업이 자문을 받는 법무법인의 컨설팅 내용을 협력사가 전달받는 것이다. 협력사의 대표나 임원은 매달 원청 기업을 방문하여 안전 및 관련 내용 교육을 받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받을 수 있는데, 사고 발생 시 양형이나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사유 등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된다. C사 전문이사는 “처벌을 덜 받을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 대기업이 직접 교육을 해주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1.1 안전보건경영방침									
Why?	최고경영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선언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통해, 안전보건 관련한 의지/방향 을 공유하고 목표 및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 를 높이기 위함								
목적									
구성요소	▶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전파/공유 <table> <tr> <th>No.</th><th>구성요소</th></tr> <tr> <td>①</td><td>안전보건방침이 문서화가 되어있는가</td></tr> <tr> <td>②</td><td>최고경영자의 서명과 시행일이 기재되어 있는가</td></tr> <tr> <td>③</td><td>조직 구성원에게 전파/공유가 되어있는가(본사, 현장 사무실 게시 등)</td></tr> </table>	No.	구성요소	①	안전보건방침이 문서화가 되어있는가	②	최고경영자의 서명과 시행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③	조직 구성원에게 전파/공유가 되어있는가(본사, 현장 사무실 게시 등)
No.	구성요소								
①	안전보건방침이 문서화가 되어있는가								
②	최고경영자의 서명과 시행일이 기재되어 있는가								
③	조직 구성원에게 전파/공유가 되어있는가(본사, 현장 사무실 게시 등)								

[그림 V-5] 원청 기업 제공 법무법인 팀 컨설팅

1.2 안전보건목표							
Why?	목표수립 및 현장에서의 이행여부 확인 등 성과측정 을 통하여 안전보건경영을 확보 하기 위함						
목적							
구성요소	▶ 정량적 안전보건목표 수립 및 전파/공유 <table> <tr> <th>No.</th><th>구성 요소</th></tr> <tr> <td>①</td><td>안전 목표를 정량적으로 수립하였는가 (측정가능하며, 수치로 표현가능해야함)</td></tr> <tr> <td>②</td><td>안전보건목표를 사무실, 게시판 등 게시하였는가</td></tr> </table>	No.	구성 요소	①	안전 목표를 정량적으로 수립하였는가 (측정가능하며, 수치로 표현가능해야함)	②	안전보건목표를 사무실, 게시판 등 게시하였는가
No.	구성 요소						
①	안전 목표를 정량적으로 수립하였는가 (측정가능하며, 수치로 표현가능해야함)						
②	안전보건목표를 사무실, 게시판 등 게시하였는가						

[그림 V-6] 원청 기업 제공 법무법인 팀 컨설팅

C사 전문이사는 원청 기업이 제공하는 컨설팅 내용 중 불필요한 지침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그림 V-5의 “조직 구성원에게 전파/공유가 되어있는가 (본사, 현장 사무실 게시 등)”과 그림 V-6의 “안전보건목표를 사무실, 게시판 등 게시하였는가”는 보여주지 않는 지침이며 안전보건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ESG 등급 심사는 협력사가 ESG 등급 심사를 받도록 하는 원청 기업의 요구 사항이다.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청 기업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ESG 등급이 적격 업체 선정에 영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강제성이 전혀 없는 심사이지만 향후 원청 기업이 해외 투자자들에 본사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노력과 관심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응답하였다.

C사 전문이사는 대기업이 제공하는 안전보건 및 ESG 컨설팅과 등급 심사가 크게 와 닿는 사업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C사는 ESG의 사회 측면 중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가진 자본으로는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보건이나 ESG 등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현장 안전 보건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자발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이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C사 전문이사는 “C사는 윤리 강령, 환경경영인증, ISO 등의 자료를 꾸준히 받아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이런 가치를 ‘어떻게’ 사업으로 이행할지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따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을 이행해야 함을 충분히 인지하지만 **수행 방법과 이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서의 ESG 관련 프로그램의 실행 이유, 척도와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면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C사의 ESG와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 현장 안전 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

C사 고위 임원은 C사가 개별 현장 내 안전보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ESG 관련 사안은 주로 원청 기업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C사는 **현장 안전 팀**을 배정하여 사업장 내 안전 재해를 관리하고 있다. 100억 이상의 사업 현장에는 안전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를 배치하고 100억 이하의 사업 현장에는 전담 직원들이 상주하도록 진행하고 있다. 이는 C사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원청 기업의 요구와 정부 정책에 의해 이행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하청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안전보건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C사에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비용은 공사 수주 입찰 내역의 간접비에 C사의 추가 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원청 기업이 사실상 채용 비용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C사는 원청 기업의 ESG 등급 취득 요구와는 별개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필요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 C사 산업안전협업 관리 시스템 - 협의체 회의

협력업체 간 **협의체 회의**는 하나의 사업에 협력사로 등록된 하청 기업 관계자와 원청 기업의 현장 소장 등이 참석하는 정기적 회의이다. 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장 별로 안전보건협의회가 열리며 협력사의 임원이나 대표가 참여하여 소통하는 자리이다. 안전보건 사안과 공정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시간이다.

C사 전무이사는 협의체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C사는 건축 및 토목을 담당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이 되는 회사이다. 다른 업체가 거의 없는 사업장에서 공정의 70 ~ 80% 작업이 마무리될 시점에 설비 작업 등을 맡은 협력사가 투입된다고 한다. C사 전무

이사는 “공정 초반에는 C사와 원청 직원밖에 없다. 적게는 3개월, 길게는 8개월까지 협력사 간 회의나 협의체 회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적어도 3개 이상의 회사가 모여야 협의체를 진행하는 것 같다.”라고 언급하였다. 다수의 협력사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작업 성격에 따라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도와 단계가 상이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 C사가 협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 중복되는 업무 처리, 원청 업체의 산업 재해에 대한 태도, 원청-하청 관계의 이익 구조

C사 전무이사는 **통일성 없이 중복되는 업무 처리**가 협업 시 가장 번거로운 작업이라고 밝혔다. C사는 국내 10개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는 7개 건설사의 계약을 수주하고 있다. C사 전무이사는 “동시에 여러 건설사와 계약을 맺다 보면 안전보건 관련 서류 작업과 데이터를 제출하는 작업이 정말 많다. 분명 원청 기업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는 동일한데 대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플랫폼과 서류 양식이 모두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원청의 현장 소장의 기준에 따라서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 양식이 바뀌기도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대기업이 본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하청 기업에 요구하는 양식이 전부 상이하며 현장의 책임자인 현장 소장의 기준에 따라서도 서류 작업이 다르다는 것이다. C사 전무이사는 “C사도 마찬가지로 내부 규정에 맞게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원청 기업의 협력 업무와는 별개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기에 여러모로 부담이 많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이 소규모라는 것을 미루어보아 한정된 인력으로 **똑같은 정보를 각기 다른 플랫폼에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지적하였다.

C사 전무이사는 **플랫폼을 통일**하는 것이 형식적인 업무 처리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는데, 대기업의 플랫폼 유지비용과 하청 회사가 서류작업에 불필요한 노력을 하기 때문이다. 즉 협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C사 전무이사는 **원청 업체의 산업 재해에 대한 태도**도 문제로 꼽았다. 협업을 진행할 때 원청 업체는 하청 업체에 산업 재해를 무조건 신고하라고 교육하지만 현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정이다. 사업장의 분위기나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상은 접수해주지 않는다. C사 전문이사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가 산업 재해인데 대기업을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다. 원청 업체의 이름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하청 업체에 공상 처리를 하라고 요청할 뿐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아마 모든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대기업을 사고율은 과소 보고된다.

C사 전무이사는 산업 재해 접수 과정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내부에서 **안전 담당자와 현장 소장이 부담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몇몇 현장 소장은 산업 재해를 접수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에 C사 전무이사는 산업 재해 신고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이를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 인터뷰 대상자 제언 -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한계점

C사 전무이사는 정부의 산업재해 관련 정책이 **구색잡기**에 불과하며 비용만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C사 전무이사는 올해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대기업에서는 임원진들이, 중소기업에서는 대표이사들이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진행한다. 이게 과연 필요한지 의구심이 든다. 이는 기업의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처벌을 줄이려는 노력뿐이기 때문이다.”라 응답하며 기업들이 시간을 불필요한 데에 할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장에 있는 책임자가 안전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데 고위 임원의 시간을 빼앗는 것은 산업재해의 실질적인 예방책이 아니라고 말했다. 현장 책임자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안전교육을 진행해야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C사 전무이사는 “원청 기업이 컨설팅을 받는 법무 팀에서 일명 노하우를 전수해준다. 중대재

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위기에 대응하고 관리하는 법과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준비 사항들이 있다.”라고 밝혔다. 결국 원청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여 구색에 불과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정책을 지키기 위한 비용과 복잡한 공정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경영효율성도 감소**한다고 밝혔다. C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산업안전관리자격증을 보유한 안전 관리자를 채용해야 했으나 대기업에 준하는 비용을 제시하더라도 중소기업에는 인력이 오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결국 임금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또한 현장과 기업마다 공정 기준과 절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입되는 인원에 비해 산출되는 결과가 상이할 수밖에 없는 실태를 언급하였다.

4) 스마트 안전 스타트업 D사 대표이사 인터뷰

네 번째 인터뷰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산업안전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산업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산업안전 증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전반적인 산업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및 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에서 시도한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터뷰 대상자는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을 개발한 스타트업 D사의 대표이사이다. D사 대표이사는 재난안전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2013년에 스마트안전 전문기업인 D사를 설립하였다. 또한 KAIST ESG 최고경영자(KEEP)과정을 최근에 수료하여 산업안전 전문가로 다양한 연구 및 특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D사는 지난 8년 동안 꾸준히 성장을 하여 ‘2022 대한민국 리더기업대상 ESG경영대상’을 비롯한 수상경력을 가진 동시에 최근에 삼성엔지니어링, 카카오-SK텔로콤으로부터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였다. D사 대표이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산업안전 생태계의 현황을 넘어 현재 실행중인 ESG 경영 및 평가의 한계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 D사 스마트 안전 시스템 -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

D사가 구축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 (Smart Safety System)’은 건설 및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IoT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이며 ICT 기반 건설 현장 안전관리 플랫폼 도입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건설현장’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D사는 스마트 안전 시스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0년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및 현장대리인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200명 중 32.4%가 ‘현장 맞춤형 안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표했으며 29.4%가 ‘안전 시스템 사용 편의성’, 11.3%가 ‘스마트 안전장비 하드웨어 개선 및 기존 장비 연동성’을 스마트 안전 시스템에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으로 꼽았다. 스마트 기술을 산업안전에 접목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해 왔지만 대부분은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에 머물렀으며 사고 발생 후 확인을 거쳐 뒤늦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D사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맞춤형 안전장비 설계, 현장 위험요소 분석 및 근로자 위치 추적을 비롯한 기능을 도입하여 이를 스마트 플랫폼으로 구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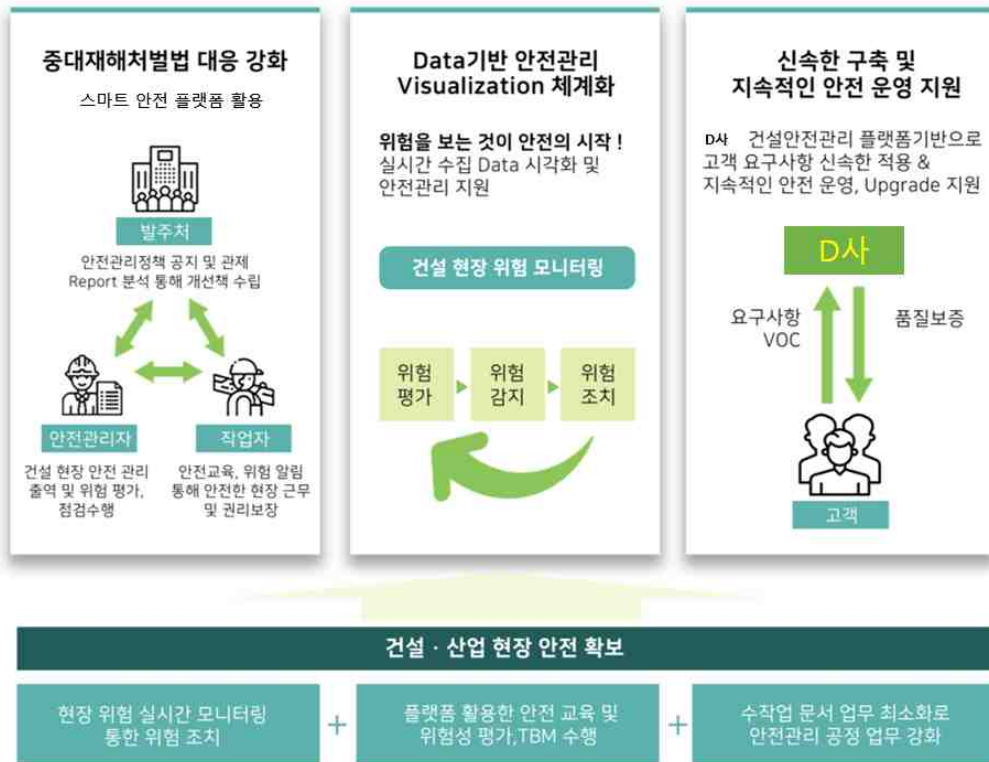
D사가 개발한 스마트 안전 플랫폼은 아래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표이사는 플랫폼의 주요 목적을 1) **산업안전 지표 공시 항목들과 관련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2) **산업 현장 개선 정도를 평가 및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요약했다. 즉 현재의 안전 상황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장들의 사전 계획 대비 또는 기존의 안전 현황과 비해서 실제로 개선한 부분에 대해 평가를 하여 자율적인 산업안전 강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아울러 이러한 플랫폼 도입이 **발주처, 안전관리자와 현장 건설 작업자들 간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효과 (그림 V-8)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플랫폼 특징	설명
건설 안전 관리 스마트화	안전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상황에 최적화된 디바이스 활용을 설계 및 구현하며 안전의 전주기를 스마트하게 구축할 수 있음. 작업의 게시 및 종료 여부, 계획대비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력 현황과 작업자의 실시간 위치 파악이 가능하며 밀폐 공간, 화기, 전기 등 건설현장의 특성에 맞춰 위험한 작업에 맞춰서 스마트 안전장비를 연동함.
Open Architecture 기반 플랫폼	전국 현장의 근로자, 중장비, IoT 디바이스를 실시간으로 연계 및 제어함으로 '통합 모니터링/컨트롤'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수평적인 통합플랫폼	근로자가 직접 플랫폼을 통해 작업별 위험성과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공유를 할 수 있음으로 수직적인 안전 관계에서 수평적인 안전관계 생태계를 조성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실시간 기반으로 순도 높은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며 발주자와 업체들에게 더욱 정교한 산업현장 데이터를 제공함

[그림 V-7] D사 스마트 안전 플랫폼 특징

● D사 협업 상황

D사의 스마트 안전 플랫폼은 현재 60여개의 기업 및 기관 건설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을 추진하였다. 최근에 삼성엔지니어링과 카카오-SK텔레콤 펀드로부터 각각 30억 원의 투자를 받아 '스마트 기술 개발 공동화' 등 목표를 수립하였다. D사는 설립 초기 때부터 삼성엔지니어링의 건설 현장에 안전장비를 납품하였으며 지난 8년 동안 신뢰를 쌓아 삼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7억 원의 투자자금을 받고 스마트 안전 플랫폼을 공동 개발했다. 그러나 스타트업으로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이 역시나 쉽지 않았다. 우선 대부분 대기업들은 '동반 성장'을 하려는 목적으로 스타트업에 투자를 실행하려는 편인데 단순히 재무적인 측면에서 성장을 하는 것보다 **미래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파트너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스마트 안전'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 다소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투자 및 지원을



[그림 V-8] 스마트 안전 플랫폼 도입 효과

받는 과정에서 관련 기업 관계자를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고 언급하였다.

협력 과정 중 부딪힌 또한 다른 난제는 **범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안전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업 경영자와 임원들이 중요시하는 요소들이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해외 건설 현장 및 플랜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하나의 통일화된 기준으로 안전 시스템을 구현하기 어려웠다. 또한 기존 스마트 안전 시스템들은 아직 원청 업체의 작업장 관리 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하청 업체들도 접근 가능한 플랫폼 및 안전 관리 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D사는 범용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동시에 여러 공기업 및 대기업을 위해 안전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으며 매뉴얼에 따른 현장에서의 산업 안전 실태 개선을 촉진하고 있다.

● ESG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D사의 대표이사는 현재의 ESG 평가 방법 및 실용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현재 ESG 공시 지표 중 산업안전과 직계된 항목이 많지 않으며 데이터도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평가 방식이 다소 정교하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산업안전 그 자체가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분야이며 기업 크기, 직원 수 등의 요인에 따라 평가방법에 있어도 일정한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가 성적을 예시로 들었는데 대기업들은 ESG를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확률이 더 높지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이에 비해 다소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2024년부터 시행하게 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규정도 ‘평가’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음으로 현장 안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일괄적인 평가 시스템보다 개별 사업장 또는 기업 형태에 맞춰서 제작한 안전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인터뷰 대상자 제언

D사 대표이사는 산업안전 생태계 전반의 산업안전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우선 위의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의 산업안전 경영이 ESG평가 항목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기업들의 ‘보여주기식 경영’을 촉진할뿐더러** 중소기업 또는 하청 업체들의 실질적 산업 개선에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표이사는 **기존의 매뉴얼을 정교화하는 동시에 실시간 현장 데이터를 분석하여 더욱 유동적인 정책을 펼쳐서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산업현장 안전 및 보건 개선 노력은 기업 경영자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동시에 안전관리자 또는 현장 근로자의 자발적 의식과도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안전모를 쓰지**

많은 근로자를 처벌하는 방법 보다 안전모를 쓰면 ‘자부심’을 느끼도록 장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대표이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관리 및 통제하는 안전관리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며 다양한 위험요인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안전 시스템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최종 여러 결정은 꼭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D사 대표이사가 타 기관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자면 스마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되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결국 현장 관리자 및 작업자의 자발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D사 대표이사는 이러한 산업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은 대기업에서부터 시작해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안전 기술 및 시스템에 하청 중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이에 기반하여 협업함으로써 생태계 전반의 산업안전실태를 개선할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도 처벌법을 비롯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 방안을 급조하기 보다는, 단순한 형태라도 스마트 산업안전 시스템과 같은 산업안전 관련 역량을 스스로 키워나가야한다고 제언하였다.

VI. 결론 및 제언

.....

VI. 결론 및 제언

연구보고서는 서론 및 본론에서 ESG 경영 평가 및 공시, ESG 책임 투자, ESG 생태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ESG 경영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자율안전보건시스템 도입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아래에서는 위 분석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정책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1. ESG 평가 및 공시에 산업안전보건지표 도입

1) 정부의 사업체별 산업 재해율 공시와 ESG 평가기관 공유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내 ESG 평가기관은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적절하게 평가모형 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구체적인 안전보건 관련 지표는 정부 차원의 권고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자원통상부는 평가지표의 혼재에서 오는 혼란을 줄이고 국내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평가지표를 제공하고자 2021년 K-ESG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K-ESG 가이드라인에서 안전보건 관련 지표는 안전보건 추진체계와 산업 재해율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보건 추진체계**는 경영자의 리더십 뿐만 아니라 실제 위험요인을 통제하고 비상 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며, **산업 재해율**은 각 년도 발생한 산업 재해율 수치를 의미한다.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평가지표는 전담 관리체계를 확인하는 안전보건 거버넌스와 위기관리대책을 평가하는 안전보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K-ESG의 안전보건 추진체계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율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평가 지표에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라 재해율이 관리 및 공개되고 있는지의 여부만을 확인하고 있

다. 산업재해율의 수치는 실제 산업재해 관리의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안전 보건 평가에 있어 중요한 지표이다. 이것이 국내 ESG 평가기관의 평가 모형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사업체별 산업 재해율 공시 미비**에서 찾을 수 있다. K-ESG 가이드라인은 산업 재해율에 대한 정보를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그리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재해율 공시가 의무화되어있지 않으며, 공시의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자율적으로 수치를 작성할 여지가 존재하여 기업 간 비교를 위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 또한 산업 수준에서의 재해율만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활용이 어렵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의무공시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공시 의무 사항으로 산업 재해율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 또한 효과적인 공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당분간은 상장기업들의 시장공시가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감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제 3자 평가기관**들이 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K-ESG에서 권고하는 것과 같이 국내 ESG 평가기관에서 산업 재해율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별 산업재해 현황을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수치로 공시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산재보상 관련 사업장별 산재데이터가 누적되고 있으나 그 체계적 관리는 부족하다. **관련부처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업체, 사업장 별 산업 재해율을 공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의 사업체별 산업 재해율 공시는 ESG 경영에 산업안전보건지표를 반영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2) 각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 재해율 공시

산업 재해율 공시에 있어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각 산업의 특성**이다. 글로벌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성 (materiality) 평가의 개념을 도입하며, 모든 ESG 지표가 동일한 중요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산업마다 더 중요시되어야 할 지표들이 있다는 점을 모형에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끼임과 추락사고 외에도 **서비스업, 금융업 등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신과적 질병** 또한 관리되어야 할 문제이다. 단순히 요양일수로 계산되는 재해율은 각 산업의 특수한 안전보건 이슈를 충분히 담을 수 없다. 건설업에서의 추락사고, 제조업에서의 끼임과 부딪힘 사고, 금융업에서의 정신과적 질병, 게임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에서 과로와 같이 각 산업에 특수하고 중대한 산업재해 유형은 추가적으로 관리 현황이 공시되어야 하며, 기업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 체계 평가대상 확대: 주 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산업 재해율 공시 포함

K-ESG와 국내 ESG 평가기관 모두 안전보건 영역에 있어 해당 기업만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협력사에 대한 관리체계 존재 여부와 안전보건 성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SK의 경우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3년째 산업재해 '0'건을 기록 중이다. 경쟁사들은 매년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데 비해, SKT가 0건을 기록하는 이유는 반드시 SKT의 뛰어난 안전보건 체계 때문이기 보다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업무가 주로 하청기업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명 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는 대부분 위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하청 기업에서 발생하는 만큼, 협력사의 안전보건 현황은 반드시 지표 내에 반영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산업 재해율을 측정

에 있어, 규모가 작은 협력사까지 모두 포함하는 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2021년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으로 공표대상이 된 사업장 1466곳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중대재해 공표대상 사업장 가운데 80.3퍼센트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도 하청의 산재를 원청에 합산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관리하고 원청의 하청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원청-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도급인의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의 사업장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 해당 기업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산업 재해율 공시가 시급한 상황이다.

4) 산업안전 체계 평가대상 확대: 주 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 및 지원체계 평가

수치로 나타나는 협력사의 산업 재해율 뿐만 아니라, 주 업체가 시행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와 지원**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반드시 평가되어야 하는 지표이다. 평가 가능한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지표는 하도급 계약 시 안전보건 예산 편성 여부, 협력사의 업무 현장 적극 개입 여부, 그리고 협력사 안전보건 교육 제공 여부이다.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은 인터뷰에서 “해외 ESG 평가기관의 경우 처음 하도급 계약을 시행할 때부터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할당하고 **미리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력사가 안전보건에 투자하게끔 유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은 “안전보건 예산을 선 지급하는 것은 협력업체가 안전보건에 투자할 것을 직접적으로 독려하기에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로, 협력사의 업무 현장 적극 개입 여부는 실제로 원청 기업이 현장을 관리 및 감독 하는지의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은 한 예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상황을 CCTV로 실시간 확인하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의 협력사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보건 관리 및 지원 활동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협력사 안전보건 교육 제공** 여부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을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은 “원청에서는 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협력업체의 현장에서는 안전보건을 관리 및 감독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높지 않은 것”이 현주소라고 설명하며,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은 관리감독 인력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업이 높게 평가되도록 평가 지표가 향후 변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표 VI-1〉 안전보건 지표 현황 및 향후 개선 방안

현행 지표		향후 개선 방안
산업자원통상부 K-ESG	기업지배구조연구원*	
안전보건 추진체계 •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평가 및 개선 여부 • 국제규격(ISO 45001, KOSHA-MS), 제3자 전문기관 혹은 내부 전문가를 통한 체계 관리 여부	안전보건 거버넌스 • 산업안전보건 경영 방침에 기초한 구체적 목표 수립 및 평가체계, 전담관리체계 • 안전보건시스템 • 안전사고 및 보건 위험 분석 및 통제, 위기관리대책 • ISO 45001 취득 여부	안전보건 추진체계 • 하청 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 협력업체 관리 및 지원체계 • 50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현황 및 지원체계 확인
산업 재해율 • 5개년 간 산업재해율이 감소 추세에 있는지, 지난 1개년 산업재해율이 미만인지의 여부	안전보건 성과지표 •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등의 관리 및 공개 여부	산업 재해율 •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한 공시에 기반 • 각 산업마다 다른 재해의 특성 반영 • 50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협력업체를 포함

5) 산재서사의 언론을 통한 공유와 홍보

ESG 평가, 투자자 공시가 주로 안전보건시스템 구비에 대한 정성적 평가, 산재율과 같은 수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에는 산재서사 (narrative)를 언론을 통해 적극 공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재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서사에 대한 기록과 공시는 산재 발생 시점에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증언과 진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덜란드의 **Story Builder**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서사와 같은 정성적 정보를 표준화하고 필요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게 해 준다. 미국 OSHA의 산재관련 규제공시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산재 사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이를 언론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양질의 일자리”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해 줄 것이다.

2. 산업안전보건 제고를 위한 ESG 투자 활성화

1) 연기금의 산업안전보건 지표를 활용한 책임 투자 확대

연기금은 새로 도입한 산업안전보건 지표를 활용하여 **안전보건에 중점을 둔 ESG 투자전략**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비록 국민연금은 이미 산업안전 평가지표를 ESG 평가 및 투자에 반영하려고 관련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적기 때문에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크리닝 전략을 적용하는 기준을 더욱 명시하여 ESG 기준 미달 기업을 배제시키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에 산업안전 평가지표 미달 기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연기금의 책임투자에 산업안전보건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기대효과는 여러 가지이다. 먼저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산업 안전보건미비 기업의 재무적 자원조달을 적극적으로 제한**하여, 해당 기업이 산업안전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고 개선하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를 목도한 연기금 포트폴리오 내 타 기업들에게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투자와 경영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연기금의 산업안전보건 지표의 적극적 활용은 제조업 이외에도 연기금이 투자한 다양한 산업 내 - 서비스업, 금융업, IT산업 등- 에서 산업안전보건 현황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 상품을 구축해야 한다. 연기금과 같은 대형 기관투자자의 투자기업 대상이 주로 대기업이며, 산업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중소기업, 영세업체가 대기업의 협력업체 공급망 외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산업안전 우수 중소기업, 영세업체에 대한 정책금융**은 보다 효과적인

정책 통로가 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ESG 연계 대출 상품이 최근에 많아 지는 추세이지만 대부분은 환경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 지표를 반영한 ESG 연계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성과와 대출금리를 연계한 상품을 도입하여 산업안전보건 환경 개선에 힘쓰는 기업에게 재무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공공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정부 (공공기관)-금융기관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사례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이탈리아 정부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안전보건 책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INAIL가 은행 대신 기업의 대출금리를 상환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정책금융의 확대는 민간부문의 책임투자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3) 민간 ESG 책임투자 부분에 대한 지원

산업안전보건 지표를 활용한 책임투자를 적극 실현하는 **민간의 투자자들과 기업**에게 다양한 우대 정책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 책임투자를 유인해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지표를 기반으로 우수한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 상대로 책임투자를 실시하는 민간 투자자뿐만 아니라 **자사의 ESG 경영에 산업안전보건 지표를 적극 반영**하는 대기업을 장려하는 것도 포함된다. 앞서 국내 사례로 언급한 스마트 안전보건 스타트업 GSIL에 투자 및 협업을 추진한 삼성엔지니어링과 같은 산업안전관련 ESG 책임투자를 적극 실행하는 대기업에게 더욱 다양한 지원 및 우대정책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으며, 이는 민간 ESG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더 진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위탁자산운용사에 대한 관리 규제 및 ESG 평가 기준 투명성 강화

연기금뿐만 아니라 국내의 민간투자자 (예, 자산운용사)들도 ESG경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는 자산운용사들이 국민연금의 위탁자산운용 선

정에 ESG 요소가 포함될 것으로 보고 ESG 펀드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례에서 간략히 다루었던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메리츠자산운용을 비롯한 투자자들은 ESG 책임투자를 위해 사전 평가체제를 도입하여 규범적인 투자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를 아직 도입한지 얼마 안 된 운용사들도 많아 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당국은 국민연금 등과 협력하여 국민연금이 민간 기관 투자자에게 책임투자를 위탁할 때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표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자산 운용사들은 정부의 기업별 산재 공시 기반으로 수립한 네거티브 스크리닝 등 전략을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산업안전보건 성과가 미흡한 기업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주주개입활동을 펼쳐야 한다. 이는 투자대상 기업의 자발적 안전보건 사업 환경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3. ESG 경영을 통한 산업안전보건생태계 구성

1) 산업안전 평가 및 관리 시스템: 원청-하청 협업 플랫폼 표준화

국내 산업생태계는 소수의 원청 대기업이 다수의 하청 중소기업, 영세업체와 협업하는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 자료는 산업재해가 원청 대기업보다는 하청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 공급망 이외의 영세기업에서 빈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생태계에서 정부 및 규제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후자에 집중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네트워크 협업의 특징은 전체 네트워크의 성과가 네트워크 구성원 간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A chain is only as strong as its weakest link). 이와 관련하여 하청 중소기업 경영진과의 인터뷰는 원청-하청 기업 간의 산업안전 평가 및 관리 시스템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표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C사 전무이사가 언급하였듯이 C사는 연간 15여 개사에 달하는 원청 대기업의 산업안전관리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해야 하며, 이는 C사의 계약 수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원청 대기업이 본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하청기업에 요구하는 서류 양식 등은 상이한 경우가 많으며, 사업장의 현장 소장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는 산업안전관련 업무를 형식화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가 자사의 개별적 산업안전관리 시스템과 역량을 구축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정부가 모든 기업이 당사의 필수 정보 혹은 협업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기입할 수 있는 공통 양식을 개발, 제공하여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의 산업안전관련 업무의 플랫폼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하청 업체의 서류작업 투자비용 절감하고, 자사 사업장 내 산업안전 자원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표준 플랫폼을 실무와 연계한 주요작업에 집중하고, 이에 기반하여 감독활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 내에서는 안전보건 분야 책임자가 아닌 고위 임원이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불필요한 사업이 이행되고 있다. 이는 경영자의 산업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로 볼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위로 여겨지며, 또 하나의 요식으로 이어질 뿐이다.

2) 협력기업 및 영세업체 안전보건 역량 강화: 규제 강화

산업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중소기업, 영세업체에서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반면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원과 역량이 가장 부족한 곳도 바로 이들이라는 것이 산업생태계 전반의 산업안전보건 개선의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안전모와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 등의 원시적 산업안전문제들은 바로 이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문지도 기관 (예, 대한안전산업협회) 활성화, 산업안전 컨설턴트 등 **산업안전보건 전문시장 확대** 등의 다양한 정책이 실행되었으나 인터뷰 담당자들은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문기관의 방문과 현장조사, 컨설팅 등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력기업 및 영세업체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인터뷰에 응한 현업 종사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이들이 **정부 정책과 규제의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많은 의무, 감독, 규제에서 면제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언제까지 어르고 달래야하나” 라는 한 인터뷰 참가자의 발언은 협력기업 및 영세업체의 안전보건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긍정적 인센티브 (positive incentive)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규모를 고려한 정책의지는 고려할 것이나, 이러한 정책의지를 악용하는 사업장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관리 및 감독,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 존재하기에 **협력업체 스스로 산업안전역량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등의 산업안전관련 규제의 300인 미만, 50인 미만 등의 **기업규모에 따른 면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정책금융과 규제 확대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소규모기업, 영세업체의 반발도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 대기업의 ESG 경영을 통한 협력업체 안전보건 역량 강화 지원

대기업들의 ESG 경영 확대는 소규모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역량강화에 대한 대기업의 긍정적 인센티브 확대의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다. 다만 대기업이 중소 및 영세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사업 지속 기회에 더하여 **협력사의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제조업체 원청 대기업 B사의 산업안전보건 및 ESG 담당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전문가의 피드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 내용에 적합한 교육 대상**”을 고려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인터뷰 관계자는 기업의 규모나 업무와 별개로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지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가장 많이 이끌어 낸다고 하였다.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에서의 사업주, 경영자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 국내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 내 인권교육, 성평등 교육 등과 함께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의무를 더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 지원금에도 차이를 두어 작업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협업 커뮤니티 전체 구성원의 안전, 보건, 인권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긍정적인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한 대기업에는 정부가 정책금융, 세제혜택 등 긍정적인 유인책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의 한계와 추후연구 제언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ESG 경영을 활용하여 기업의 자율적 안전 보건시스템 도입,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 도출을 목표로 하였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라는 경영현장에서의 산업안전 및 보건 현황의 개선이 한국적 ESG 경영의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지적하고 이를 Safety in ESG라는 정책제언으로 정리하였다. 다만 연구의 초점이 ESG 경영에 맞춰져 있는 만큼 해당 연구는 한계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ESG 경영은 평가-공시-투자”라는 독특한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어, **기업경영 변화의 원동력을 평가기관과 투자자에서 주로 찾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Safety in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공시를 넘어서는 기업 현장에서의 실제적 변화가 필요하다. 해당 연구는 경영현장에서의 산업안전 및 보건 현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본 연구에 대한 두 전문가의 리뷰는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부록 3). 먼저 이서정 한국컴플라이언스연구소 컨설턴트는 한국의 ESG 경영이 단순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의 연장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ESG 경영이 기업의 실제 행동변화로 이어지려면 기업의 전사적 위기관리시스템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 국내 산업안전 관련 규제환경의 변화와도 관련되어 있다. 이컨설턴트는 궁극적으로는 규제환경에 대한 자율준수시스템의 정착이 ESG 경영을 통한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의 자율적 도입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규제의 자율준수시스템은 두 가지 축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 **기업의 준법 및 윤리 문화의 전반적 확산**이다. 둘째, 리스크 평가-교육-지침마련-모니터링-효과성평가의 요소로 이루어지는 **기업의 위기관리 관련 내부제도의 마련**이다. 이러한 규

제 자율준수시스템의 확장은 Safety in ESG경영이 투자자의 힘에 기댈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의 자율경영으로 이어지기 위한 중요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추후 연구는 이와 같이 **Safety in ESG경영과 기업의 내부통제 및 교육 시스템과의 연계방안과 내부시스템 설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보다 더 자세**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전문가 리뷰를 작성한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박재혁 교수는 Safety in ESG경영의 기반이 되는 산업안전보건 현황 데이터를 기업 평가 및 공시에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정부 및 규제기관의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증거기반 정책 수립 (evidence-based policy making)**은 최근 기업 경영 관련 빅데이터의 광범위한 수집과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크게 각광받고 있다. 박교수는 **사업장별, 직무별, 직능별 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한다.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산업재해와 그 보상에 관한 사업체별, 사건별 데이터가 쌓이고 있으나 이의 체계적 관리와 분석 및 정책수립에 대한 반영은 미흡한 수준이다. 박교수는 해당데이터를 관련 기업데이터, 노동 시장데이터와 결합하면 산재발행과 확산과정에 대한 중요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관련 연구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Safety in ESG경영이 기업의 내부 통제 및 교육시스템과 연계되고, 산업안전보건 현황 데이터가 미시수준에서 기업 및 노동시장 데이터와 결합되어 분석될 수 있으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kpan, E. I. (2011). Effectiv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policy for improved performance of organizations in Africa.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6(3), 159-165.
- Ale, B. J. M., Baksteen, H., Bellamy, L. J., Bloemhof, A., Goossens, L., Hale, A., ... & Whiston, J. Y. (2008). Quantifying occupational risk: The development of an occupational risk model. *Safety Science*, 46(2), 176-185.
- Bushee, B. J., Core, J. E., Guay, W., & Hamm, S. J. (2010). The role of the business press as an information intermediar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8(1), 1-19.
- Dyck, A., Volchkova, N., & Zingales, L. (2008). The corporate governance role of the media: Evidence from Russia. *Journal of Finance*, 63(3), 1093-1135.
- Engelberg, J. E., & Parsons, C. A. (2011). The causal impact of media in financial markets. *Journal of Finance*, 66(1), 67-97.
-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2022). General Principles
-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2022). S1 Own Workforce General Standard
- Gibson, R., Glossner, S., Krueger, P., Matos, P., & Steffen, T. (2021). Do Responsible Investors Invest Responsibly? *Swiss Finance Institute Research Paper*, (20-13)
- Governance & Accountability Institute, Inc., 2018. 86% of S&P 500

Index® Companies Publish Sustainability / Responsibility Reports in 2018.

Gray, T. (2007). *Institutional Investor Corporate Engagement Theory: An Empirical Review of the Calpers Focus List Program*. Available at SSRN 1793947.

Hartzmark, S. M., & Sussman, A. B. (2019). Do investors value sustainability? A natural experiment examining ranking and fund flows. *Journal of Finance*, 74(6), 2789-2837.

Heese, J., Pérez-Cavazos, G., & Peter, C. D. (2022). When the local newspaper leaves town: The effects of local newspaper closures on corporate misconduct.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45(2), 445-463.

Johnson, M. S. (2020). Regulation by shaming: Deterrence effects of publicizing violations of workplace safety and health laws. *American Economic Review*, 110(6), 1866-1904.

Lau, M. L., & Wydick, B. (2014). Does new information technology lower media quality? The paradox of commercial public goods. *Journal of Industry, Competition and Trade*, 14(2), 145-157.

Leins, S. (2020). 'Responsible investment': ESG and the post-crisis ethical order. *Economy and Society*, 49(1), 71-91.

Li, X., & Raghunandan, A. (2020). *Institutional ownership and labor-related misconduct: Evidence from US federal violations*. Available at SSRN.

Marchand-Sibra, A. L., & Falzon, P. (2006, July). The use of anecdote in safety training. In Proceedings of the 16's Congress

- of International Ergonomics Association" *Meeting diversity in Ergonomicsm*, 10-14.
- Miller, G. S. (2006). The press as a watchdog for accounting fraud.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4(5), 1001-1033.
- Neuhauser, P. C. (1988): *Tribal Warfare in Organizations*. New York: Harper.
- PRI. 2022. What are th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online] Available at: <<https://www.unpri.org/about-us/what-are-the-principles-for-responsible-investment>> [Accessed 21 August 2022].
- Rajala, H. K., & Väyrynen, S. (2010). Constructing “core stories” for contributing practical safety actions in industrial units. *Safety Science*, 48(10), 1393-1401.
- Sandberg, J. (2011).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and fiduciary duty: Putting the freshfields report into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1(1), p.146.
- Simmons, A. J., & Simmons, A. J. S. (2001). *Justification and legitimacy: Essays on rights and oblig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Maanen, J., & Barley, R. S. (1984). Occupational Communities: Culture and Control in Organization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ur*. 6Gibson, R.,
- Glossner, S., Krueger, P., Matos, P., & Steffen, T. (2020). Responsible institutional investing around the world (No. 20-13). Swiss Finance Institute.

- 류영재 (2014). 고용·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책임투자 도입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류정선 (2020). 최근 글로벌 ESG 투자 및 정책동향. 금융투자협회.
- 황윤경, 이유민 (2021). 해외 주요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의 책임투자와 투자 제한 동향으로부터의 시사점. 대신경제연구소.
- 구현지 (2022). 2022 책임투자 리뷰(1)-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가입 자산운용사의 주주관여 공시 현황과 주주관여에 대한 기업의 대응 사례. 한국기업 지배구조원.
- 권용수. (2020).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의 관점에서 본 스튜어드십 책임-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소재로. *재산법연구*, 36(4), 103-136.
- 심충진, Chung Jin Shim, 구자은, & Ja Eun Koo. (2016). 기업의 규모·업종별 안전보건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17(6), 143-173.
- 염미경. (2017). 사회책임투자와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 *강원법학*, 50, 719-747.
- 이상수. (2019).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과 기업 연구*, 9(2), 99-134.
- 이시연. (2021). 국내외 ESG 투자 현황 및 건전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사점. *KIF 금융조사보고서*, 2021(1), 1.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사고백서 1 : 2014~2020 현대중공업 중대재해와 원인*
- 최은수 (2014).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한국거래소, 2020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

부 록

1. Focus Group Interview 리스트
2. Focus Group Interview 설문지
3. 전문가 리뷰
 - 1) 이서정 한국컴플라이언스연구소 컨설턴트
 - 2) 박재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Focus Group Interview 리스트

#	일시	소속	직위 성명	내용
1	8/16 10-11am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CGS)	ESG 평가지표 개발 S (사회) 부분 연구원	ESG 평가기관과 산업안전보건평가지표
2	8/17 4-5 pm	한국거래소(KRX)	ESG 공시 팀장	ESG 공시기관과 산업안전보건공시지표
3	8/16 2-3 pm	A사 (서비스업계 대기업)	팀장	ESG경영과 산업안전보건생태계
4	8/16 4-5 pm	B사 (제조업계 대기업)	ESG 경영 Team Leader	ESG경영과 산업안전보건생태계
			산업안전 Team Leader	ESG경영과 산업안전보건생태계
			산업안전 Team Leader	ESG경영과 산업안전보건생태계
5	8/18 11-12 pm	C사 (건설업계 하청 중소기업)	전무 (가족기업 2세)	ESG경영과 산업안전보건생태계
6	9/28	D사 (스마트 안전 스타트업)	대표이사	ESG경영과 산업안전보건생태계
7	9/26	KDI 정책대학원	교수 (빅데이터 분석 전문)	리뷰- 산업안전보건 데이터 활용방안
8	9/16	Gilbert corporate compliance institute	컨설턴트	리뷰- 컴플라이언스 정책 관련

Focus Group Interview 설문지

FGI 1 :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사회책임 담당 수석연구원

FGI 2 : 한국거래소(KRX) ESG 담당팀장

연구 내용 소개

현재 "Safety in ESG"라는 주제로 ESG 평가지표, 특히 S(사회) 하위 부문에 고용부의 산업안전 관련지표를 추가하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 지표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 중입니다. 첨부드리는 정부의 K-ESG 가이드라인에는 산업안전 (S-4-1, S-4-2)의 진단항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데, KCGS/KRX appraisal이나 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의 S 부문에는 상대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는 배경 등에 대해서 여쭙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국내 기업들이 ESG경영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양질의 일자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ESG 지표개발 및 공시관련 전문가로서 의견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터뷰 질문지

국내 ESG 현황

- 최근 ESG 열풍에 따라, 국내 기관/개인 투자자들에게 ESG 평가가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바라보십니까? ESG의 영향으로 실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KCGS/KRX의 ESG평가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주요하게 참고하는 국내외 기관이나 자료가 있으십니까?

Safety in ESG 전반

- 현재 KCGS/KRX의 ESG 평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ESG관련 항목들은 무엇입니까? (성평등, 인권 등)
- KCGS/KRX의 ESG 평가 내 안전보건의 상대적 비중/중요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만약 안전보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ESG 평가 내 안전보건의 비중을 높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산업 재해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행하게끔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SG 평가 내 안전보건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효과적일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Safety in ESG 지표

- 현재 KCGS/KRX ESG 평가 내 안전보건 항목의 지표는 대략적으로 어떤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를 보완/수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은 ‘안전보건 추진체계’ 항목과 ‘산업재해율’ 항목을 통해 안전보건 영역을 측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해당 지표가 안전보건을 평가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K-ESG 가이드라인의 ‘안전보건 추진체계’ 항목과 ‘산업재해율’ 항목이 혹시 KCGS/KRX의 ESG 평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업이 산업 재해 방지를 위해 체계를 마련하도록 돕고 관련 투자를 촉구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적절한 지표는 무엇이라고 바라보십니까? (만인 사망률, 산업재해율 등)

FGI 3: 서비스 산업 원청 대기업 안전관리자 인터뷰

FGI 4: 제조업 원청 대기업 ESG 및 안전보건 담당자 인터뷰

FGI 5: 건설업 중소기업 (하청) 고위 임원, 가족기업 2세 인터뷰

연구 내용 소개

인터뷰 목적: 원청 대기업, 하청 중소기업, 영세기업 등으로 구성된 산업생태계 내의 산업안전보건 경영, ESG 경영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협업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분야가 고려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해당 인터뷰를 통해 기업 간 협업 과정과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ESG 경영과 산업안전 경영의 현실을 파악하고자 한다.

ESG에 대한 인식 및 현황

- 현재 귀사가 협업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 귀사는 협업 시에 비 재무적인(비용 절감 및 이윤 극대화를 제외한) 요인에 대해서도 고려합니까?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귀사는 협업 시에 ESG에 대해 고려합니까?
- ESG와 관련된 사내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의 사내 규정입니까?
- ESG 사내 교육을 진행합니까? 어떤 내용의 교육입니까? 교육 담당자는 누구이며 특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입니까?
- ESG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일터를 개선한다고 생각합니까?

Safety in ESG 전반

- 귀사는 협업 시에 산업안전, 보건, 인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 대해 고려합니까?

- 산업안전 및 보건, 인권과 관련된 사내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의 사내 규정입니까?
- 산업안전 및 보건, 인권 교육을 진행합니까? 교육 담당자는 누구이며 특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입니까?
- 산업안전 및 보건,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일터를 개선한다고 생각합니까?

협업 사례

- 귀사와 협력업체가 안전 및 보건, 인권에 대해 고려하는 수준이 상이했습니까? 어떤 점에서 차이가 두드러졌습니까?
- 귀사와 협력업체가 안전 및 보건, 인권으로 인해 마찰을 빚은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 귀사협업 시에 협력업체의 안전 및 보건, 인권을 감독 및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감독 및 관리합니까?

FGI 6: 스마트 안전 스타트업 D사 대표이사 인터뷰

연구 내용 소개

현재 고용노동부와 함께 "Safety in ESG"라는 주제로 ESG 평가지표, 특히 S(사회) 하위 부문에 고용부의 산업안전 관련지표를 추가하여 기업 부문의 중대재해감축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 중입니다. 이에 D사를 산업안전 우수 스타트업으로서 대기업 벤처투자(CVC) 유치과정 또는 전반적인 ESG경영 방침에 대해 여쭙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국내 기업들이 ESG경영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양질의 일자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D사가 향후 기대하는 ESG 정책을 기반으로 의견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와 관련된 질문

- D사는 올해 5월에 삼성엔지니어링에서 40억원의 투자를 받았으며 7월에 추가적으로 카카오-SK텔레콤 펀드로부터 30억원을 유치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두 번의 투자유치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서술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으셨나요? (예를 들면 정부에서 실행한 ESG 평가지표 혹은 삼성/SK에서 수립한 자체 평가 지표 기반으로 투자 선정)
- 투자유치 시 겪었던 어려운 점 또는 특수사항이 있었습니까?
- 삼성엔지니어링과 함께 스마트 안전 공동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사업화 영역 및 지원받는 분야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스마트 안전 플랫폼과 협력 기관에 대한 질문

- 현재 스마트 안전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 형태 및 산업이 무엇입니까? 스마트 안전 플랫폼을 통해 실질적으로 산업안전 환경을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까?
- 귀사 홈페이지에 개시된 ‘D사를 선택한 기업들’ 명단 중 한국환경공단, 산림청,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도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기관들과 진행한 협업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해 주실 수 있습니까?
- 플랫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 또는 우대 정책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지원 정책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공공정책 및 향후 기대 사항

- 현재 해외 일부 국가에서 ESG 혁신 스타트업 또는 ESG 우수기업에게

세액공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금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대하는 국내 지원 정책이 있습니까?

- ESG (특히 산업안전)을 위해 향후 어떤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발전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울러 ‘중대재해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 플랫폼’을 비롯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이외에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목표가 있으십니까?

Review: 'Safety in ESG ESG 경영을 통한 자율안전보건시스템 확산방안'

이서정 컨설턴트,
한국컴플라이언스연구소

서론

<Safety in ESG ESG 경영을 통한 자율안전보건시스템 확산방안 (이하 연구보고서)>은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의 실태를 매우 잘 나타내고 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중대재해 감축 및 산업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자율예방시스템 도입을 이끌어내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나, ESG 경영을 내세운 다양한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책 활동이 과연 현장에서의 산재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효과적인 자율안전보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ESG 경영은 본질적으로 기업에게 있어 전사적 위기관리를 전제로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관련 법적 규제 및 제도가 과연 기업의 자율안전보건시스템 운영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한다.

1. ESG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가 위기관리인가?

ESG 경영이 이미 생소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기업들이 그것을 행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실정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에게 일정 책임을 부여하여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근거가 되었으나, 그 책임의 범위는 무엇이며 기업들에게 위기관리 이상의 책임을 바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답이 나눌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끼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에서 시작되었다면, 기업마다 경영활동이 다르듯 그 책임도 다르기에 기업마다 사회적 책임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ESG 경영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면 결코 기업의 전사적 위기 관리와 분리 될 수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는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위해 스스로 확정하며 그것이 곧 기업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이 ESG 경영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범위를 확정하고 관리 대상을 구분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안전보건에 대한 규제 및 제도는 기업의 인권보장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하며, 기업이 관련 문제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율적인 준법 및 윤리 경영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전달 해야 한다.

연구보고서처럼 ESG 경영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안전보건을 부각시키는 것은 기업의 실질적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ESG 경영을 단순히 사회를 위한 책임만으로 받아들인다면 경영활동에 있어서 큰 혼선을 빚어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특정 정책이 바라는 목적을 달성 할 만큼 기업의 근본적인 문제개선 및 시스템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할 수 있다.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동기를 불문하고 안전보건을 '위기 관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감독 및 규제 중심의 접근'만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준법 및 산재예방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업이 ESG 경영을 바라보는 시각은 결코 위험 관리를 벗어날 수 없다.

2. 국가적 차원의 법적 규제 및 제도화

올해 들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여러 건설사 및 제조업계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해당 법이 원청기업 경영자에게까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만큼 실무자들은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찾느라 골머리를 썩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법적 규제 및 제도화는 국가의 중대재해를 줄인다는 본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다면 연구보고서에서 도출된 세가지 방안에 대해 기업의 대응을 예측해 보는 것만으로 방안들이 실질적인 목적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연구보고서 결론에 해당하는 세가지 방안에 대한 간단한 리뷰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2.1 'ESG 평가 및 산업안전보건지표 도입'

ESG 평가에 산업안전보건지표를 도입하고 관련 사항 공시를 의무화 하는 것은 분명 기업 및 기업이 속한 산업에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실제로 산재관련 내용의 포함여부와 상관없이 ESG 공시 의무화가 국제적으로 논의되면서 기업 내부에서 각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또는 자율준수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다만, ESG 공시에 산업안전만을 포함시키는 것으로는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 이유로 1) 대기업 공시에서 드러나지 않는 원청-하청 관계와 2) 공시 내용의 신뢰성을 꼽을 수 있다. 1)의 경우 연구보고서에서도 협력업체 관련사항을 공시에 포함 시키는 것으로 해결 방안을 찾았다. 그러나 관리체계에 대한 공시 부분은 다시 2)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구체적인 안전관리 지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게 현실인 만큼 제 3자 검증 또한 그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산재서사를 활용하는 제도는 기업에게 있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 훨씬 유익할 수 있다. 특히 산재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사고마다 그 원인이 다르기에 구체적인 기록을 남긴다면 앞으로 기업 및 국가 산재예방시스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기업이 내외부적으로 산재서사를 공개한 사실을 '산재예방활동'으로 국가적차원에서 인정해준다면 해당 활동이 제도화 되지 못하더라도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포함 시킬 수 있다.

2.2 '산업안전보건 제고를 위한 ESG 투자 활성화 방안'

이는 사실상 ESG 경영을 근거로 하는 안전보건 책임을 강조하는데 있어 비교적 가장 기대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책임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곧 기업 공시와 더불어 ESG 경영의 정도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인데, 기업들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투자자들 사이에선 앞선 두가지가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기관투자자나 민간이나 결국 드러나는 운영실태 및 기준 충족 여부 만으로 기업들을 가려 내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시를 하지 않는 기업 보다는 그래도 공시 한 기업의 편을

드는 것과 같다). 하지만 기업 내부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려면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시스템 개선 및 운영실태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2.3 'ESG 경영을 통한 산업안전보건생태계 구성'

연구보고서에 기록된 인터뷰 내용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원청-하청 관계 속에 보이지 않는 관행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산업재해예방활동의 시스템화는 필요해 보인다. 한 인터뷰에서 나와 있듯이 대기업 차원에서 하는 노력과 협력업체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안전관리에는 그 목적과 방법에 차이가 크다. 결국, '산업안전보건생태계'라는 문화적 요소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선 산업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하나의 자율준수시스템을 기업마다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자율준수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에 연구보고서에 있는 교육, 모니터링, 개선 활동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기에 3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 하도록 한다.

3. 산업안전관리시스템: 자율준수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 및 확산

산업안전관리시스템 확산을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자율준수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자율적인 준법 및 윤리경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온 서구권 기업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대다수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개념에 대한 인식조차 낮다. 당장 기업의 위기관리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ESG를 받아들이는 것과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 ESG를 받아들이는 데 차이가 있듯이, 자율준수시스템 운영이 일상적인 나라에서 새로운 경영시스템 도입을 촉구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 그러는 것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산업안전관리시스템도 여타 다른 자율준수시스템이 갖는 문제점들을 그대로 가질 수 밖에 없다.

3.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및 자율준수시스템에 대한 인식 부족

아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또는 자율준수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압박만 늘어난다고 생각하여 실질적으로 시스템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준법 및 윤리 문화 확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율준수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리스크 평가, 교육, 지침마련, 모니터링, 효과성 평가 등이 그 예이다. 자율준수시스템은 운영은 계획의 실행이다. 예를 들어 산재 관련 교육을 시행한다면 교육 대상은 누구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예방 하기 위한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 그 밖에도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체 구성, 법 위반 행위 감독, 시스템(자체에 대한) 효과성 평가 등 여러가지 위기 관리를 위한 내부 제도들을 기획/실행 할 수 있으며 이미 운영중인 경우 시스템에 포함 시킬 수 있다.

3.2 관행근절과 문화확산을 위한 체계

ISO37001 및 ISO37301 과 같은 국제 경영시스템 표준의 확산으로 어느정도 3.1에서 다루어진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산업안전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및 관련 안전 규칙들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대로 운영되는 자율준수시스템은 그 체계도에서 이미 하나의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구조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는 회사 건물 내부가 아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현장 인력들과의 연계 및 협업이 절실하다. 기업이

산업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운영체계도에서 얼마나 현업 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고 누가 어떤 지시를 내리는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결론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기업들은 이를 대응하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연구보고서에 나오는 B 사 협력업체 평가제도의 경우 준법경영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우리나라 원청-하청 업계 관행 상 아직까지 소규모 하청업체에게 국제적 기준을 들이밀기 어려운 환경임을 감안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ESG 경영 (지속가능성을 위한 위기관리, 상생경영, 공급망 관리를 내포하는 뜻으로) 에서의 접근으로 지금까지 등한시 했던 산재관리를 기업의 주요 리스크로 삼고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국가 정책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시스템 확산의 본 목적인 “중대재해 감축”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국가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산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준수시스템 운영에 대한 인식제고와 악습 관행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view: ‘Safety in ESG ESG 경영을 통한 자율안전보건시스템 확산방안’

박재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1. 서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경영진의 윤리적 책무를 넘어서 점차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기업의 성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ESG 경영이 사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비영리조직의 운영에도 핵심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ESG 경영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들 -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과 같은 환경적 측면, 근로조건, 노동자-사용자의 관계와 같은 사회적 측면, 그리고 부패나 로비와 같은 지배 구조에 관한 측면들 - 중, 해당 연구 보고서는 근로조건 및 안정성에 관한 문제, 그 중에서도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의 구축과 확산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데이터 과학을 전공한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 글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데이터에 관련하여 체계적인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관한 기대 효과를 논의하고, 나아가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에 가능한 연구들과 이를 활용한 정책 수립 방향들에 대해 제안해보고자 한다.

2. 산업안전보건 공시 및 데이터 수집의 다면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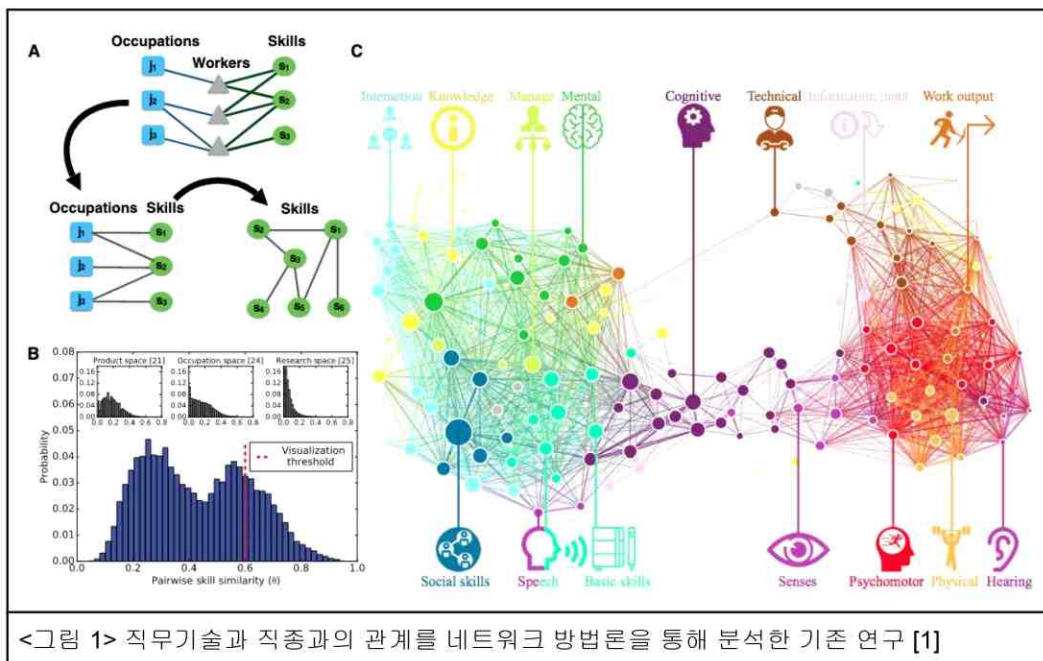
해당 연구 보고서에서 언급했듯,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재 발생 작업장이나 기업에 관한 데이터의 수집과 관련 통계의 공시는 경영 측면에서 영향을 주어 해당 기업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작업장 사고를 유의하게 감소시킨다. 또한, 산재 발생에 관한 서사의 공유는 노동자들의 행동을 변화시켜, 산재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연구보고서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 지지는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효과는 바로 **데이터 수집 및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 일반에서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기기들이 활용되고, 이러한 기기들로부터 의사결정에 중요한 내용들을 추론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자원이 방대하게 수집 가능하게 되면서, 기존에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증거와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결과를 예측 및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 각광 받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과 결정은 ‘**증거 기반 정책**

(evidence-based policy making)' 혹은 '과학적 정책결정(scientific policy making)' 등의 이름들로도 언급되며, 정책 기획 및 결정에 있어 정보(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 정당성의 원천을 증거와 분석결과에 두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이념과 편견에 따른 정책 집행을 줄이고 연구-정책-집행 간 격차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결정에서도, 사업장별, 직무별, 직능별 재해 및 산업안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업의 산업재해율에 관한 정보는 기업의 재해율 공시의 비의무화와 공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의 부재로 인해, 정책 연구 및 활용을 위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서 언급하였듯이,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도 산업 수준에서의 재해율 정도만을 공시하고 있고, 기업들의 자율적인 공시도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외부 평가기관들에 의해 감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이를 통한 정책 방향의 수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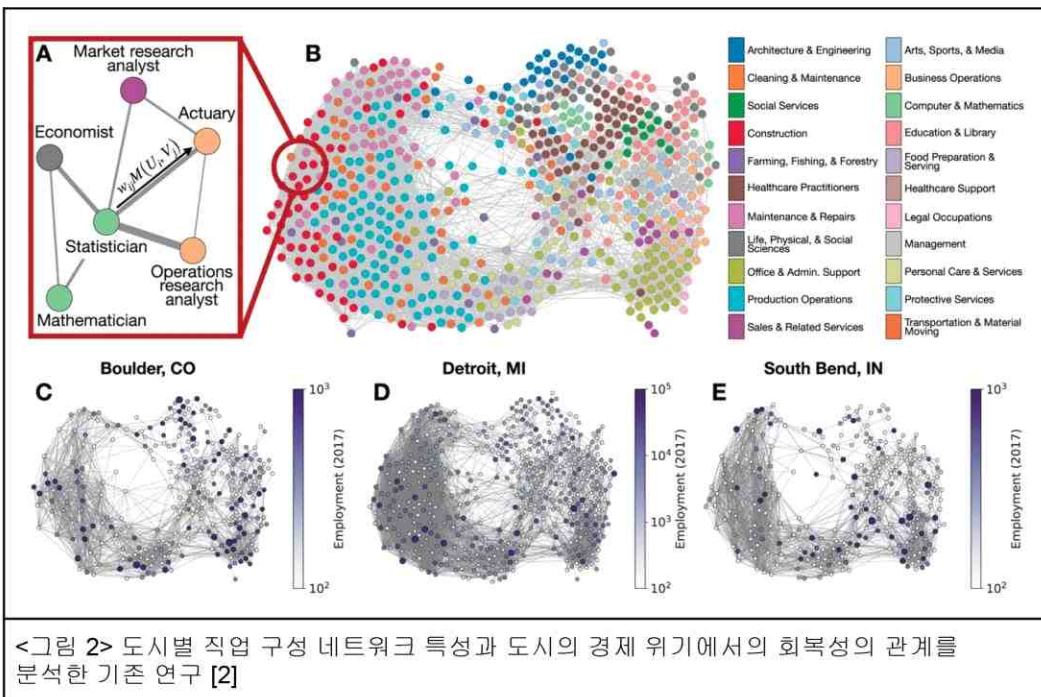
사업장별, 직종 및 해당 직종의 직무기술별 산업 재해율에 관한 미시적 수준의 데이터를 통해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어떤 연구들이 가능하고, 그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어떻게 정책 계획 및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접근법을 통해, 미시적 수준의 산업재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예시 연구들을 제안해보도록 하겠다.



3. 산업안전보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및 이의 응용 방안

우리나라에서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같은 여러 기관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산업재해와 그 보상에 관련한 사업체별, 사건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나 이의 체계적 관리와 정책 수립 및 정책 관련 의사결정에의 활용은 미흡한 수준이다. 다양한 층위의 이러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이를 다른 노동시장 데이터와 결합하면, 산업재해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시사점들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한 예로, 직업과 해당 직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들을 연결하고 이를 네트워크 방법론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산업군, 직업군에 분포하고 있는 산업 재해들의 분포와 이들간의 관계를** 그려볼 수 있다. <그림 1>이 보여주는 기존 연구 [1]에서는, 직무 기술과 직업들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bipartite network를 구성한 후 이를 직무기술의 측면에서 projected network를 구성하여, 직무 기술들이 인지적 기술들과 육체적 기술들로 어떻게 나뉘어 구성되어 있고, 직업별로 자주 활용되는 이러한 직무 기술들의 종류와 해당 직업의 임금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예시에서는 산업재해와 직업들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재해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러한 네트워크가 관련 **직업의 임금, 이직율, 노동자의 기대수명, 성별, 교육수준등과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내 각 도시별 혹은 사업장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네트워크를 각각 구성하여 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도시 및 사업장의 **ESG 측면에서의 회복성이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그림 2>에 제시된 기존 연구 [2]에서는 직무 기술들의 유사성을 통해 구성된 직업들간의 네트워크에 도시별 직업별 분포 데이터를 결합하여, 각 도시별 직업 구성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그 후, 이러한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위기가 왔을 때에 실업률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도시의 직업간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높을수록 회복성이 강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사업장별, 지역별 산업재해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이와 유사하게, 국내의 도시별, 지역별 산업재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특성이 코로나 팬데믹이나 저출산, 혹은 노령화와 같은 공공보건적 위기 상황에서 도시별, 지역별 경제 회복성과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 도시별, 지역별 산업재해 네트워크의 특성들을 반영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맞춤형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응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노동시장의 충격이나, 저출산/고령화와 같이 다양한 경제사회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중장기적 방향은, 이전처럼 소수의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하는 것을 점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국내외의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정책 현안이나, 국민들의 요구, 그리고 이들의 변화추이나 위험징후 등을 사전에 정확히 데이터로 파악, 정책 입안에 활용하려는 노력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최근 ESG 경영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데이터 과학,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의 최신 기술들을 미시 수준에서의 다양한 산업재해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다면**, 더욱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맞춤형 정책 지원으로 기업 경영자들과 노동자들 모두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참고자료

- [1] Alabdulkareem, Ahmad, et al. "Unpacking the polarization of workplace skills." *Science advances* 4.7 (2018): eaao6030.
- [2] Moro, Esteban, et al. "Universal resilience patterns in labor markets." *Nature communications* 12.1 (2021): 1-8.
- [3] 이정아. "데이터 증거기반 (Evidence-based) 의 과학적 정책 수립 방안." *IT & Future Strategy* 6 (2015).

연구진

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연구책임자 : 박선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연구원 : 이현욱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오기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석사과정)

신윤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석사과정)

신지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석사과정)

연구기간

2022. 8. 1. ~ 2022. 9. 30.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22년도 위탁연구 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SG경영을 통한 자율안전보건시스템 확산방안
-Safety in ESG
(2022-산업안전보건연구원-507)

발 행 일 : 2022년 9월 30일

발 행 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김은아

연구책임자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박선현

발 행 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 소 :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 화 : 052-703-0813

팩 스 : 052-703-0331

Homepage : <http://oshri.kosha.or.kr>

I S B N : 979-11-92138-74-9